

충남발전연구원
「2009년도 기본·기획과제 요약집」

PROGRAM

[사회]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기획팀장

■ 개 회 식

(10:00 ~ 10:10)

- 인사말 : 김용용 (충남발전연구원장)
- 인사말 : 김하균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 주제발표

(10:10 ~ 11:10)

- 자치행정부문 : 최병학 연구위원
 - 금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 분석 및 관리방안 5
- 지역정책및도시계획부문 : 오용준 책임연구원
 - 저탄소에너지절약형 도시계획의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19
- 지역정책및도시계획부문 : 김정연 선임연구원
 -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와 발전전략 23
- 지역정책및도시계획부문 : 박철희 연구위원
 -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28
- 농촌개발부문 : 조영재 책임연구원
 -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6
- 환경생태부문 : 이인희 책임연구원
 - 행정구역 단위 CO₂ 배출량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I)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 이용도 구축 64

■ 종합토론

(11:10 ~ 12:00)

- 좌 장 :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1
- 토론자 (가나다 순임)
 - 충청남도 : 김하균 정책기획관, 김중화 문화예술과장
박승태 농촌개발과장, 오광현 건설정책과 계장
이순근 녹색성장추진팀장, 이재중 환경관리과 계장
최정현 균형발전담당관
 - 언 론 사 : 충청투데이 나인문 부장, 디트뉴스24 이영철 기자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
- 종합 마무리 말씀 : 김용용 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발전연구원 2009 기본과제 요약

- 차 례 -

자치 행정	금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최병학	5
	충청남도과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고승희	12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구조	이관률	15
지역정책 및 도시계획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도시계획의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오용준	19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와 발전전략	김정연	23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 방안에 관한 연구 - 충남 부여를 중심으로 -	박철희	28
	충청남도 중소도시 쇠퇴특성 분석방법 적용에 관한 연구	윤정미	34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한상욱	37
	충청권 도시쇠퇴 특성과 재생방향에 관한 연구	임준홍	40
농촌 개발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영재	46
	충청남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49
	충남 농촌의 인적역량 강화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유학열	51
산업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남 중소기업 지원방안	신동호	54
	충청권경제모형구축연구 2 ; 충청광역경제권의 전략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57
문화관광	금강 주변지역 관광매력성 평가와 과제 -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중심으로 -	김경태	61
환경 생태	행정구역단위 CO ₂ 배출량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1) -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이용도 구축-	이인희	64
	충청남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실태 및 설치 방안 - 유기물(BOD ₅)을 중심으로-	이상진	68
	충남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과 정책방향	정종관	71
	기후변화 관련 충청남도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방안 연구	정옥식	75
	충청남도 하천유형별 실태분석 및 복원방안 -하천생태축의 사례하천을 중심으로-	오혜정	78
공공 디자인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직구성과 운영방안	권영현 이충훈	83

충남발전연구원 2009 기획과제 요약

- 차 례 -

자치 행정	기초자치단체장 의사결정의 특성과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신진 이관률	86
	충청남도 새마을역사관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	우성호 김정연	89
사회 복지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장운승 성태규	93
	충남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연구	이용재 임준홍	97
산업 경제	공유재산 대부요율 개선방안 -경작용지를 중심으로-	박광배 고승희	101
	충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일반재산관리를 중심으로-	이재우 신동호	104
	사회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한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의 지식 네트워크 분석	이만형 백운성	107
	기업형 SSM 진출 관련 대·중·소 유통 상생 방안	원종문 신동호	110
환경 생태	미국 주정부의 지역에너지계획 조사연구	왕영두 김정연	113
	충남 태안반도의 해안선 변화 분석과 정책과제	장동호 윤정미	117
	충남습지보호지역 선정 및 관리방안	나정화 사공정희	121
지역정책 및 도시계획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충청남도 북부권의 공간구조 변화 연구	김영욱 윤정미	123
	지역개발사업의 지속 가능성 진단을 위한 환경-사회-경제 통합체계 동태모형의 개발과 현장 적용 -금강 참계 목장화 사업을 중심으로-	정희성 김정연	127
	충청남도 주차정책 수립 및 개선방안	박성철 조봉운	132
	충청남도 이미지 실태조사 연구	지성구 박철희	136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농촌관광수요변화 와 대응구조	박희석 김정연	146
디자인	충청남도 정체성을 위한 환경색채 연구	임오연 이충훈	148
교육 학습	충청남도 중등학교 교육효율성 개선방안 연구	이훈병 최병학	154
	충남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과 과제	강희숙 최병학	157

「금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최 병 학 | 연구위원

| 과제 종류

기본연구 2009-01

| 공동연구

(사)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

「금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왜 수행하는가에 대한 연구의 배경이 되는 문제의 제기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정부간 협력관계 및 갈등관련 이론연구 및 조사분석은 상당수 나와 있으나, 특정의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해소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충남지역은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중 「금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작단계서부터 7개 시·군간 중복사업 및 과다사업, 편입농지 및 골재채취 등과 관련한 보상문제 등 다양한 갈등상황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며, 이에 대한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여건이다.

그러나 향후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통해 충청권 전체 차원에서 약 3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7개 시·군(공주·논산시, 금산·연기·부여·서천·청양군)의 연계사업을 통해 치수·이수·친수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지역협력(지역내 협력 및 지역간 협력)은 물론, 민·관·산·학·연·언간의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갈등해소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모색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금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7개 금강권역 시·군간 발생될 갈등유형은 무엇이며, 지역협력을 저해하는 갈등요인과 협력요인은 무엇이고,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갈등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토대인 바,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협력체계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발전적 대안으로서의 효율적인 갈등해소 및 관리방안의

구축과 실효성 있는 대안수립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해소 및 관리방안 연구는 「금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시 예상되는 갈등을 유형화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 및 국내·외 유사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금강 살리기」를 위한 갈등해소 및 관리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갈등유형별로 예상되는 갈등의 소지를 조사, 분석하고, 앞으로 갈등해소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시에 예상되는 갈등의 소지를 갈등유형에 따라 그 특성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파악된 갈등 소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갈등해소 및 협력요건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셋째, 효율적인 「금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갈등해소 및 관리방안과 함께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유형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둘째, 「금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 및 예상 갈등유형의 추출과 시사점 도출

셋째, 충남의 갈등유형별 사례 및 국내·외 하천갈등 사례분석 벤치마킹

넷째, 갈등유형별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 틀의 설정

다섯째, 인접 7개 시·군 대상 실태조사(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및 문제점 파악

여섯째, 「금강 살리기」를 위한 갈등해소 및 관리방안 모색, 제시

일곱째, 「금강 살리기」를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의 시범사업의 제안

한편,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시간적, 공간적, 내용상의 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간적 범위는 민선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부터의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조사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공간적 범위는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및 금강권역 7개 시·군(공주,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지역으로 한정하되, 특정지역의 사례조사는 국내·외 하천 갈등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내용상의 범위는 갈등의 개념과 특성, 갈등의 유형화(typology), 갈등유형별 관리전략,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모색에 한정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유형 관련 선행연구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이론체계를 재정리하고, 아울러 『금강 살리기』 사업에서 예상되는 갈등의 소지를 사전적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금강 살리기 사업』 관련 갈등해소와 관리방안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하천관리 사례 중에서 국내 및 국외사례를 수집, 정리하였다.

셋째, 『금강 살리기 사업』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전문가 대상의 인터뷰 실시 및 현장간담회(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및 한국행정학회 행정학·행정학과 위기관리특별위원회와 연계)를 개최, 문제점 및 시사점을 각각 도출하였으며, 특히 갈등관리 관련 조례 및 법령제정 등 법제화 기반을 모색하였다.

넷째, 『금강 살리기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갈등소지에 따른 해소방안 및 갈등 관리방안, 특히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중 『갈등모니터링시스템 구축(안)』 및 『갈등순회매니저제도 도입(안)』의 제시와 함께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및 정책제언을 덧붙였다.

본 연구는 갈등관리 관련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관계관(충청남도 및 7개 시·군 업무담당자) 및 지역별 이해당사자 집단, 실무자들의 폭넓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연구 추진방식을 채택, 운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5회) 및 한국행정학회 행정학·행정학과 위기관리특별위원회(4회)의 운영과 연계하여, 세미나·워크숍 및 현장간담회 개최 등 탄력적인 방식을 병행하면서 진행하였으며, 특히 『금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별 해소 및 협력방안 연구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 및 포럼 운영, 충청남도범도민협의회 및 7개 시·군별 협의회와의 다자간 소통 및 협의구조 마련, 『갈등모니터링시스템 구축(안)』, 『갈등순회매니저제도 도입(안)』, 특히 갈등 관리 관련 조례 및 법령제정 방안 등을 적극 모색,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르는 예상되는 갈등의 소지를 진단, 분석할 수 있었으며, 설문조사와 함께 수차례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거대한 국책사업이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금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인 수해방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 맞추어 환경보전이 우선시되는 「금강 살리기 사업」은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요인에 관한 조사결과, 중앙(자치단체)-NGO, 주민-중앙정부, 주민-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많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역시 직업과 거주지(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갈등의 소지가 많은 사업으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갈등의 표출형태는 현재적 갈등이, 갈등의 발생범위는 지역간(시·군)간 갈등이, 발생한 갈등의 영향은 농지보상이 가장 높은 빈도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여군 등 특정 지역에서, 농민 등 특정 직업군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다른 직업군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중앙정부, 자치단체장, 시민단체의 순이었다.

셋째, 갈등을 예방 및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접 7개 시·군간의 협의체를 구성, 예상되는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갈등발생시 초기단계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갈등예방관리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및 남부권 상생포럼 등과 같이 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제3의 중간조직의 활용은 물론, 7개 시·군간 협의체, 지역주민과 전문가집단, 실무자가 함께 하는 다자간 협의체 구성 등 민간주도의 공익단체들을 적극 활용 및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와 관련 특히, 「금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위한 「갈등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갈등순회매니저제도 도입(안)」 및 (가칭)「충청남도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조례(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합리적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 초기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절차의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 받아

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실성 있는 보상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해야 하며,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금강 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이는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통일되고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함이 강조된다. 뿐만 아니라 「금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가 대거 참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를 이루었다.

여섯째,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물 부족 예측에 대비한, 직접적으로는 친환경적인 댐·홍수조절지, 농업용저수지의 재개발이 필요하며, 「금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내용상 현재 댐·홍수조절지의 사업이 없는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더불어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의 확충이 과제로 남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강 살리기 사업」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예상되는 갈등을 직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면접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였으며, 후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상갈등 실태에 대한 충실한 조사, 반영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충청남도 차원에서 2012년까지 완료될 예정인 「금강 살리기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담당조직과 전담인력 및 지원시스템 특히 관련조례의 제정과 함께 사업추진을 위한 매뉴얼 작성을 위한 기준설정 및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르는 예상 갈등을 유형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갈등해소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와 관련한 향후과제 및 정책제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갈등연구로서는 제1차 연구에 해당하며, 2010년에는 2009년도와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갈등예방관리의 실효성 여부를 포함하여 추가

갈등발생 여부 및 추이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정부에서 동시에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나타나는 갈등양태와 상호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갈등요인이 지역적 특성의 영향 또는 사업 자체 특성의 영향 여부를 가름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 및 선진국에서 경험했던 강 또는 유역 살리기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조정, 관리했으며, 이 때 적용된 갈등관리 메카니즘과 운영프로그램에서 우리에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조사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적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갈등예방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해 사업시행의 영향권역을 환경적 차원 및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설정,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 대규모 공사에도 갈등영향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나, 충분한 사전 예비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의 영향권역을 대·중·소 영향권 등으로 구분한다면 환경적,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갈등영향분석에 실질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다섯째,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상호작용과정으로서의 계획,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실행과정, 지역적 역량의 형성과정으로서의 갈등관리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을 서로 연계하여, 이를 갈등관리 프로세스로 최대한 적용하여 앞으로 「금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시 공공부문의 갈등해소 및 갈등관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의 기반이 구축 될 수 있도록 갈등사안별로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만 한다.

여섯째,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는 「갈등순회 매니저제도」(Circuit Riding Manager)의 도입과 「금강 살리기 사업 갈등관리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은 「금강 살리기 사업」의 유용한 갈등예방관리 및 현장대응관리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아직 적용·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실효성을 단정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는 2010년, 2011년도, 2012년도를 각각 비교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추이분석 연구 및 정책적·제도적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가칭)「충청남도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조례(안)」,

및 (가칭)『효율적인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갈등예방 및 조정 조례(안)』의 제정추진은 물론, 현재 입법추진 중인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추후 이들이 『금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예방관리 및 현장대응관리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내지는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갈등연구를 통해 또 다른 갈등사안들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공통모델은 무엇이며, 이때에 적용이 가능한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를 탐색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과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고 승 희 | 책임연구원

| 과제종류

기본연구 2009-02

| 공동연구

대전대학교 백종섭 교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유호 연구관

지난 1995년 7월 우리나라에서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는 각기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문제해결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지님으로써 복잡한 사회에서의 갈등과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하고 필요한 부분에 정책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기관 간 이기주의와 정실인사 및 보복성 인사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사교류의 침체와 함께 그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충청남도지사와 16개 시장·군수 간 협약에 의해 추진 중인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하에 현재의 인사교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 충청남도과 시·군간 인사교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인사교류를 통해 자치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인사교류란 공무원의 경력발전 계통을 어느 한 기관에 한정하여 추진하지 않고 담당업무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범위 내에서 기관 상호 간 담당인사를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인사행정을 운영하는 인사체계중의 하나로 공무원의 내부임용이 어느 하나의 기관적 단위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교류형과 비교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사교류는 일반적으로 전환(부처간 전환, 부문간 전환, 기관간 전환 등)이나 파견(임시적 교류), 부처 간의 전직(향구적 교류) 및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전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사교

류는 조직 및 인사관리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는데 유용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을 하나의 기관적 단위에 머물게 하는 인력 활용의 고립주의를 탈피하여 인력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시야를 넓히고 기관 간의 배타성과 파벌성을 극복함으로써 기관 간의 협조와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정책 수립과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의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의 부여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인사교류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인력 활용성 증진과 상황적응적 유능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조직적 차원에서는 기관 간 인력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폐쇄형 임용제도를 보완할 수 있으며 기관 간 상호이해 증진 및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정책구상능력을 향상시키며 공무원의 환경적응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업무수행기회를 부여하며 근무환경의 애로와 신분상승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충청남도의 5급 행정·기술직의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의 운영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협약에 의한 일정비율(10%)에 대해 시·군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다. 둘째, 시·군에서도 교류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시·군 출신 교류대상자(희망자)가 없어 도(道)출신 5급 위주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시·군의 5급 공무원은 대부분 50대 초중반이며, 가능하면 생활권내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도(道)출신 위주의 교류, 시·군간 교류실적의 극심한 불평등으로 상대적 피해의식과 위화감이 노출되고 있다. 도(道)출신과의 교류는 자체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불평등한 교류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도(道) 전출 사무관 중 일부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의 저하 등 부정적인 평가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섯째, 도와 시·군간의 인사 시기가 서로 달라 보직운영이 곤란하고 도 전출자원을 중요 보직에 배치하려고 해도 인사운영상 한계가 있다. 여섯째, 기술직의 경우, 현직급(6급) 근무년수가 도(道)보다 시·군이 더 길어(적체되어) 교류에 어려움이 있다.

인사교류의 활성화방안을 위해서는 ① 인사교류의 목적 및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 근무지 변동을 통한 근무분위기의 쇄신, 근무의욕을 향상시키는 인력관리로 공정하고 명확한 교류의 목적과 타당한 원칙을 기준으로

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기관장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이 이 제도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여야 성공할 수 있다. ③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관장, 관리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공무원, 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인사교류의 의의, 중요성과 필요성, 제도의 장단점과 이의 극복방안에 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사교류의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④ 자치단체 공무원 인력DB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충청남도 전체 공무원의 적성, 전문성, 직무능력, 직무역량, 전공, 경력 등을 DB화하여 일정한 보직관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⑤ 교류자의 인사상 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에 근무한 자치단체의 인사권자로부터 떨어져 인사상 불리할 수 있으므로, 교류대상자에게 인사상 일정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⑥ 인사교류 경로의 합리적 운영과 사후관리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근무환경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 경로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된다. ⑦ 정기교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정기교류의 제도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력풀(Human Resource Pool)제도를 운영하여 도·시·군간, 시·군간 상호협약하에 실질적이고 정기적인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⑧ 교류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류자에게 시간적,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며, 출퇴근이 불가능한 공무원에게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물질적 보상(전세, 월세보증금 무상대출, 관사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개발과 공무원의 권익보호라는 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권익보호가 담보되면 인사교류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신축성과 효과성, 전문성이 증대될 것이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자율적인 인사운영, 조직의 안정성 및 지방공무원의 지역전문성 함양 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인사교류를 대폭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구조

이 관 료 | 책임연구원

| 과제 종류

기본연구 2009-03

| 공동연구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도묘연 상임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협력과 연대로 대변되는 네트워크 구축이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키워드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 민가단의 활동의 특성과 네트워크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을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즉 협력여부 혹은 협력유형(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 타 기관과 협력,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동시 협력, 비협력)에 따라서 활동목적, 활동영역, 활동대상, 활동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둘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와 개별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심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이는 협력유형에 따라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단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네트워크내 혹은 네트워크간 연결정도를 체계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다. 셋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활동의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협력에 대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인식과 정책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을 활동범위적 특성, 활동형태

적 특성, 그리고 활동규모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설립목적과 활동목적, 활동특성은 차이가 있는 반면, 활동공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별로 구분해 볼 때, 지역자치 분야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문화와 교육·학술분야는 타 기관과 협력을, 환경과 복지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타 기관과 동시 협력을, 그리고 경제와 노동 및 농어민은 독자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② 활동목적별로 구분할 경우, 활동목적이 정책적인 경우는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여 활동하는 반면에, 활동목적이 비정책적인 경우는 개별 기관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③ 활동영역별로 구분할 경우, 북한 및 통일, 지역자치, 환경은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문화는 타 기관과 협력을, 그리고 경제, 여성, 복지, 노동 및 농어민, 교육·학술은 비협력적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④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공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로 해당 시군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형태에 따라 활동대상, 활동방식, 연대결성, 그리고 협력기관수 등의 활동형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활동대상별로 구분해 볼 때, 자체조직회원이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의 경우는 주로 비협력적 활동으로 수행하는 반면에, 정당, 의회,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활동대상을 할 경우는 타 기관과 협력을, 그리고 사회단체를 활동대상으로 할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활동방식별로 구분해 볼 때, 대중집회와 성명서·결의문을 수행하는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선전·캠페인과 캠페인+유지활동의 경우는 타 기관과 협력을, 간담회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타 기관과 동시 협력을, 그리고 청원서, 기자회견·보도, 유지활동은 비협력적 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연대결성의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볼 때, 연대 미결성의 경우는 주로 비협력과 타 기관과 협력을 선호하는 반면, 연대결성의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공동협력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협력기관수를

기준으로 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하는 경우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경우는 7개 이상의 관련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반면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는 1개 정도의 기관과 협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규모는 협력유형에 따라 차이성과 공통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건수와 활동기간은 활동건수, 활동기간, 참여이원은 따라 상이하지는 않지만, 활동비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건수가 상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 기관과 협력한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해서 활동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②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기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는 협력유형과 관계없이 주로 당일 행사 위주의 활동에 치중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평균 인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활동에 참여하는 평균규모는 수백 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④ 활동비용은 협력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가 다른 협력유형에 비해서 활동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네트워크의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는 단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산 YMCA, 천안 YMCA,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 네트워크가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역적으로 볼 때, 천안과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화되는 지리적 편중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앞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특히 최근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가 강조됨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주로 개별 단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성과 포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 하위네트워크의 전문성과 특성화가 이루

어지지 못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충남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구조를 전제로 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네트워크적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① 비영리 민간단체 중 중심성이 높은 기관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고, ②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의 기능을 전문화·차별화해야 할 것이며, ③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목적 혹은 활동영역별로 핵심 비영리 기관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④ 비영리 민간단체의 독자적 활동 및 비영리 민간단체간 활동에서 탈피하여 타 기관과 협력이 보다 더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⑤ 비영리 민간단체의 상설 결사체인 연대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① 비영리 민간단체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②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③ 비영리 민간단체가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고, ④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구축·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⑤ 공공부문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의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오 용 준 | 책임연구원

| 과제종류

기본연구 2009-05

| 공동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승일 교수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변병설 교수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재준 교수

대구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홍경구 교수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시개념으로서 ‘에너지 투입(input)·폐기물 배출(output) 최소화’, ‘탄소흡수 최대화’, 신·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등의 계획목표를 포괄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 투입·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계획목표는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 에너지 소비의 주원인이 다양한 도시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에너지와 건물 내에서 소비하는 건물 에너지로 보고, 에너지 효율적인 집약적 토지이용·교통계획과 건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탄소흡수를 최대화하는 계획목표는 도시활동을 통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생태계의 흡수(absorption)능력으로 상쇄하기 위하여 도시내부에 물질대사, 물순환, 에너지 순환 등 자연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하는 계획목표는 자연에너지에 해당하는 태양력, 풍력, 지열, 집단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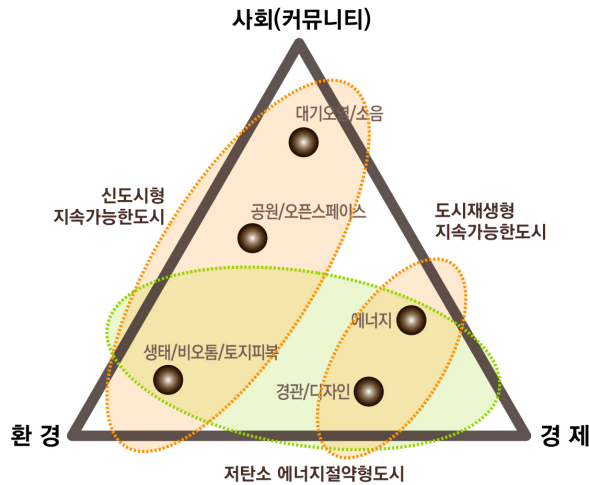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의 개념은 고려해야 할 환경요소와 관련된 계획요소의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 기존 지속가능한 도시개념과 매우 유사하나 환경과 경제에 치우쳐 있다. 즉, 에너지 또는 탄소라는 환경요소와 미래 성장동력산업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로 인식되어 빠르고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념은 추구하는 목표

에 있어서는 기존 친환경도시개념과 차이가 있으나, 관련된 환경요소 및 계획요소에 있어서는 친환경도시 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도시의 시작은 친환경도시에서와 같이 교통에너지의 저감을 위한 고밀도지이용패턴을 구축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에너지 절약도시는 도시활동 간의 거리를 단축하여 승용차 통행거리와 승용차이용 감소를 유도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지향한다. 그러나 조밀한 고밀개발로 인하여 도시내부(또는 사업지구내부)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가 감소함에 따라 열섬·열대야와 도시경관의 악화가 우려된다. 이는 건물의 냉방에너지 소비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주말여가를 도시외부에서 보내려는 주말교통의 증가로 이어져 에너지 절약효과를 반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비하여 분산집중도시(Polycentric city)는 압축도시의 핵심개념인 ‘거리의 단축’을 위한 고밀개발을 대중교통의 역세권만 집중시키고, 나머지 토지를 생태녹지축과 저밀주거로 유지한다. 역세권을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로 개발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 틀에서 본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의 위상>



이 연구는 저탄소 에너지 절약적 도시계획요소를 도시개발의 특성에 따라 계획수립단계, 면적, 도시입지특성과 같은 요인으로 구분함으로써 공간계획과 에너지계획의 통합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념을 도시개발사업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계획요소를 계획단계, 면적 및 규모, 도시입지특성 등에 따라 차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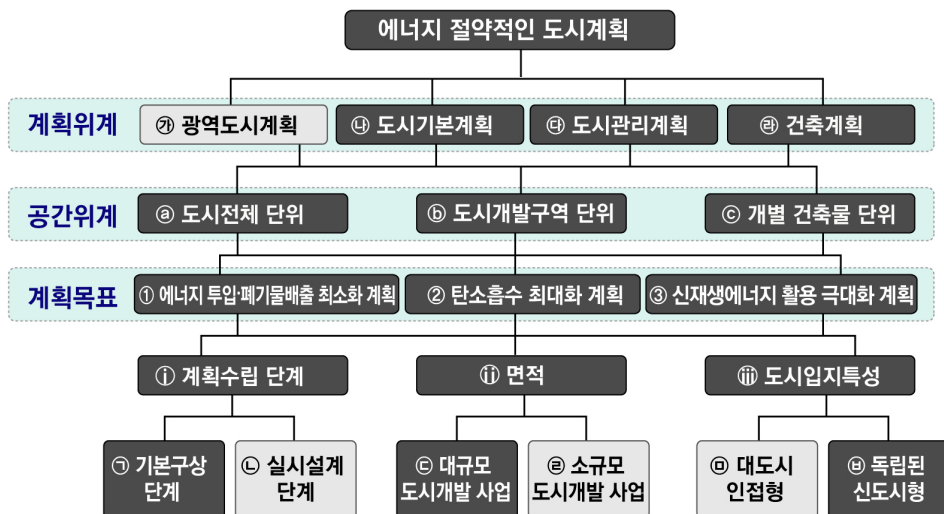
계획단계를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및 설계’ 단계로 구분할 경우, 전자는 거시적 공간위계에 맞는 계획요소를 적용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미시적인 공간위계에 맞는 계획요소를 적용해야 한다. 도시개발의 면적 및 규모에 따라서는 ‘신도시 규모’와 ‘신도시 미만의 규모’로 구분하여 계획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위계에 따른 계획요소에 대한 차이는 없지만, 대중교통지향형 개발·신교통수단·중수활용·집단에너지 등 대규모 도시개발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계획요소는 규모가 작은 도시개발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도시의 입지특성에 따라 ‘대도시 인접형’과 ‘독립된 택지개발형’으로 구분하여 계획요소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공간위계에 따른 계획요소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도시의 축 개념의 계획요소는 인접 대도시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고 생태축 형태의 계획요소에 대해서는 인접 생태축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계획요소의 적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의 세부목표에 부합하도록 계획요소를 선정하였다. 우선, 에너지 투입·폐기물 배출의 최소화를 위해 토지이용·교통체계, 건축, 자원재활용 관련 계획요소를 선정하였고, 탄소흡수 최대화를 위해서는 공원 및 녹지, 수순환 체계 관련 계획요소를 구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요소를 선별하였다.

계획목표별 계획요소에 대하여 해당 공간위계(직접적 관련) 뿐 아니라 상·하위 공간위계에 대한 관계성(위계적 관련)을 명시함으로써 계획위계간 정합성을 도모하도록 한다.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요소의 마인드맵〉



계획요소의 적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의 세부목표에 부합하도록 계획요소를 선정하였다. 우선, 에너지 투입·폐기물 배출의 최소화를 위해 토지이용·교통체계, 건축, 자원재활용 관련 계획요소를 선정하였고, 탄소흡수 최대화를 위해서는 공원 및 녹지, 수순환 체계 관련 계획요소를 구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요소를 선별하였다. 계획목표별 계획요소에 대하여 해당 공간위계(직접적 관련) 뿐 아니라 상·하위 공간위계에 대한 관계성(위계적 관련)을 명시함으로써 계획위계간 정합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조성하는 목적은 첫째, 도시개발 시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의 적용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에 녹색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계획체계의 전반적인 틀을 재설정 한 기초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의 개념과 공간위계별 계획요소, 공간계획과 에너지계획의 통합모델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논의를 망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해 나가야 하고, 이를 통해 국토계획체계 법령이나 각종 지침 등을 전반적으로 개편 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와 발전전략

김 정 연 | 선임연구위원

| 과제종류

기본연구 2009-04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한상욱 · 임형빈 · 박상철 · 송지현

이 연구는 당진-대전 고속도로와 서천-공주 고속도로 개통이 그 주변지역과 충남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당진-대전 고속도로와 서천-공주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여건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당진-대전 고속도로와 서천-공주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직접 통과하는 공주, 예산, 당진, 청양, 부여, 서천 등 고속도로가 직접 통과하는 6개 시·군과, 일부지역이 영향권에 포함되는 서산, 보령, 연기 등 3개 시·군의 78개 읍·면·동, 3,632.60km²가 포함된다. 이는 충청남도 읍·면·동 수(212개)의 37%, 면적(8,600.15km²)의 42%에 달한다.

고속도로 주변지역 중에서는 도시화·산업화 진행지역, 일반농촌지역, 원격산촌지역으로 나뉘며, 이러한 지역특성에 따라 인구, 농가인구, 제조업체, 사업체 등의 규모와 변화 경향이 매우 차별적이고, 지형조건과 생태·경관자원 등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있다.

당진-대전 고속도로와 서천-공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주변지역의 여건과 변화전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진-대전 고속도로와 서천-공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주변지역의 변화에 있어서는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인근 시·군간 네트워크 도시체계로의 변화, 광역시설의 공동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당진 등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와 대덕연구

개발특구와의 산업클러스터 형성 잠재력이 높아질 것이다.

인구규모와 도시체계는 고속도로 외에도 신도시들이 건설됨에 따라 그 변화의 방향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으나, 개선된 접근성의 이점을 살려 도시별 전문화와 호혜적 기능분담을 도모하면 네트워크 도시체계로의 전환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제조업체수 변화, 새로운 산업연계축의 형성·발전, 관광·서비스업의 변화(지역관광, 숙박·음식점 사업체수 변화), 농수산업의 변화, 유통의 효율화, 지가 상승과 세수 증대 등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주변지역은 개발 잠재력으로서의 장점과 기회와 제약여건으로서의 약점과 위협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잠재력으로서의 장점과 기회는 ① 기존의 R&D거점, 신산업지대, 물류·유통기능 등을 활용한 지식 중심의 신산업 클러스터 형성 유리, ② 고속도로 IC 연결부는 농산촌의 새로운 지역활성화 거점으로서 역할 가능, ③ 다양한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고속도로 주변지역 특성화 및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새로운 개념의 성장촉진기반의 구축, ④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간 접근성 개선으로 협력적 지역개발 활성화 등이 있다.

제약여건으로서의 약점과 위협은 ① 충청도내 지역간 불균형발전이 더욱 구조화될 가능성, ② 고속도로가 인구와 지역경제 성과의 충남지역 밖으로의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려, ③ 충남 중남부 내륙과 서부지역에 있어서 성장거점 부재로 역외 의존도 심화 가능성, ④ 고속도로 개통이 낙후지역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 할 가능성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당진-대전 및 서천-공주 고속도로 주변지역에 대한 여건 분석 및 변화전망을 토대로 기본적인 발전방향, 공간개발구도, 부문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고속도로 주변지역은 ① 충청광역경제권 형성을 선도하는 새로운 개발축, ② 충남의 동북부지역과 중서부·남부지역간 균형개발 선도축, ③ 네트워크 도시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축매, ④ 다양성과 개성을 지닌 신지방문화 창조의 축, ⑤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어촌경제 다각화 및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통로 등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의 접근방법으로는, ① 지역간 관련 사업의 연계·협력 강화, ② 거점개발 방식 및 선택적 집중방식 적용, ③ 핵심 선도사업 추진 후, 후속·연계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유도, ④ 협력적 개발체제를 구축하여 개발투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접근방식 채택을 기반으로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공간개발 구도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IC 구간별로 주변지역 기능과 거점을 설정을 하고, 개발사업 및 개발권간 순환형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며,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과 다른 계획에 의한 전략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속도로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정책과 프로그램으로는 네트워크 도시체계의 도시·농촌 재생 추진, 산업경쟁력 강화와 산업 네트워크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와 공동 마케팅 강화, 연계도로망의 체계적·입체적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고속도로 주변지역에 대한 여건분석과 변화 전망을 토대로 부문별로 추진전략과 추진방안 및 주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과 도시·농촌 재생 추진

추진전략	추진 방안 및 주요 프로그램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및 광역연합도시권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소도시연합 광역도시권 형성 및 기존 광역도시권 체계적 성장관리 •광역적 도시기능 공동이용 방식의 도입·운영 •지역활성화거점 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보조사업을 활용한 중심시가지 종합적 활성화사업 추진 •성장거점 연계형 도시재생(신도시와 주변도시의 상생발전) •기존 도시의 쇠퇴특성을 고려한 재생사업 추진
도농교류 활성화와 도시인구의 농어촌 정주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류로부터 정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수요 창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 •전원마을, Rurban Village 등 다양한 도농공존공간 조성

□ 산업경쟁력 강화와 산업 네트워크 구축

추진전략	추진 방안 및 주요 프로그램
IT 산업 중심의 융·복합화를 통한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 광역권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 선정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의 혁신인자 분석에 기초한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R&D, 시험인증시제품 제작, 지식서비스 지원 사업 등) •클러스터 간의 연계 사업 강화 •글로벌 연계협력 사업 추진
친환경 생태산업 육성으로 녹색성 신성장 동력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지역 경쟁거점 클러스터 선정 •지역 경쟁거점 클러스터의 혁신인자 분석에 기초한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R&D, 시험인증시제품 제작, 지식서비스 지원 사업 등) •클러스터 간의 연계 사업 강화
충남 서부지역과 대덕연구개발특구·국제과 학비즈니스벨트간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프로그램(만남의 장, 포럼, 스터디 그룹 등) •R&BD 사업화 센터 공동 운영 •브로커링(Brokering) 프로그램(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연계협력 사업지원 단일창구 설립,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충청 광역경제권 차원의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중심의 기획·조정·평가역량 강화 •기업지원 플랫폼 설립 •연계협력형 지역산업 육성 사업모델 개발 •기존 특화센터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광역경제권으로 확대(대전, 충북과 상호 협력)

□ 다지역 관광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추진전략	추진 방안 및 주요 프로그램
다지역 관광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지역 관광협력체계 구축 •다지역 관광협력체계의 협력대상 범위 결정 •지역관광 정보 및 안내체계 개선과 공동 홍보·마케팅
도시관광 활성화와 관광거점 조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기능형 관광안내센터 설치·운영 •소도시 내·외부 관광자원간 연계 •소도시의 자원특성을 고려한 문화·관광개발 •소도시와 주변 농어촌관광자원간의 연계(Hub Spoke-type Network)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추진전략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관광 네트워크 형성(연맹·연합체 형태) •농어촌관광 상품 개발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관광상품 등급화 •International Green Tourism Network 형성을 주도
테마가 있는 관광도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의 역사기록 조사, 문화·경관·생태·민속자원 조사 •협력적 조직체 구성을 통한 테마도로 조성·운영 •금강의 항포구를 중심으로 땅길과 물길의 연계

□ 연계도로망의 체계적·입체적 정비

추진전략	추진 방안 및 주요 프로그램
고속도로 연계도로망의 혼잡·지체 점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적 교통량 조사 및 문제점 파악 •연계도로망에 대한 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이 낮은 도로구간·교차로의 혼잡·지체를 조기에 해결
고속도로 연계도로망의 체계적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IC로부터 주요 도시·거점(지점) 연결 간선도로의 확포장·선형개량 •개발권간 순환형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망 정비
2개 고속도로와 광역간선망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진-대전 고속도로의 대산-당진 구간 연장 •당진-천안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및 태안-당진 구간 연장 •보령-청양-공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 도, 시·군간 협력체계 구축 및 단계적 추진

추진전략	추진 방안 및 주요 프로그램
도, 시·군간 협력적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시·군간 고속도로 주변지역발전 협의체 구성·운영 •고속도로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기존 계획과 연계 •고속도로 주변지역 변화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및 대응
단계적 계획 및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공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관광 홍보·마케팅, 도농교류 촉진, 산업 입지 촉진 - 접속도로·교차로 통행실태 조사 및 혼잡·지체 문제 해결 - 고속도로·신도시 복합효과 발생 지역의 공동 대응전략 마련 - 도시 및 농촌재생사업 시범지역 선정 및 pilot project 추진 •중장기 공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중심의 해안-내륙간 광역 산업클러스터 형성 - 광역관광네트워크 형성(도로·수로·고속철도 간 복합연계망 구축, 관광지간 다중적 연계, 다지역관광협력체계 구축) - 광역도시권 형성·관리 특히, 광역시설 공동이용체계 구축 - 도시 및 농촌재생사업의 연계 추진, Rurban Village 육성

이미 고속도로 밀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가시적인 변화를 감지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점진적으로 긍정·부정의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개통 초기부터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의 틀을 마련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 부여를 중심으로-

박 철 희 | 연구위원

| 과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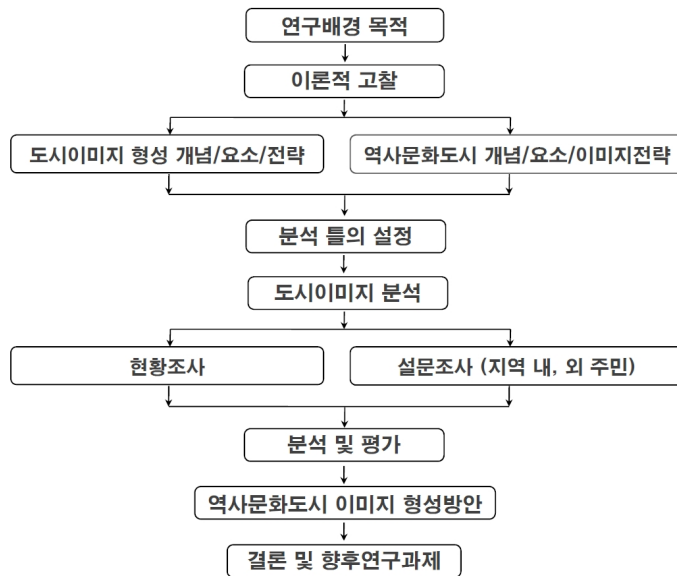
기본연구 2009-07

| 공동연구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소도시의 도시이미지 상을 정립하는데 있어, 기존에 연구되었던 이미지 형성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이미지 형성 모형을 만들고 역사문화화를 주제로 한 도시이미지 형성에 적용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도시이미지 형성의 방법 모형을 도출하며, 둘째, 도출된 도시이미지 형성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형성방안을 제시하며, 도시이미지 상은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다. 공간적으로는 도시 이미지상을 역사문화도시로 목표로 하는 부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으로는 2009년을 기준으로 조사분석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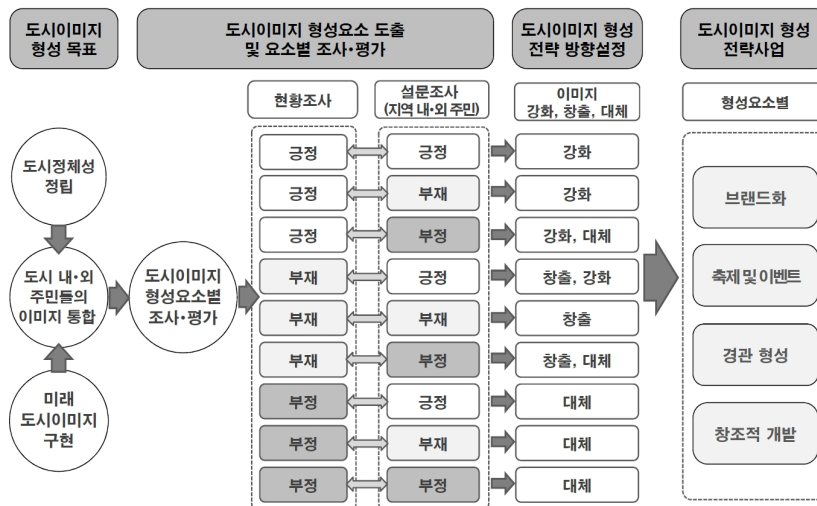
[그림 요약-1] 연구흐름도

1. 분석틀의 설정

1) 도시이미지 형성 모형의 설정

도시이미지 형성의 개념, 형성요소 및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요약-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으며, 도시이미지 형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한다. 첫째, 해당도시주민들이 해당 도시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해당 도시주민들이 인식하는 도시이미지 상을 해당도시 외 주민들이 공유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미래의 도시이미지 상이 해당 도시 내·외 주민들에게 공유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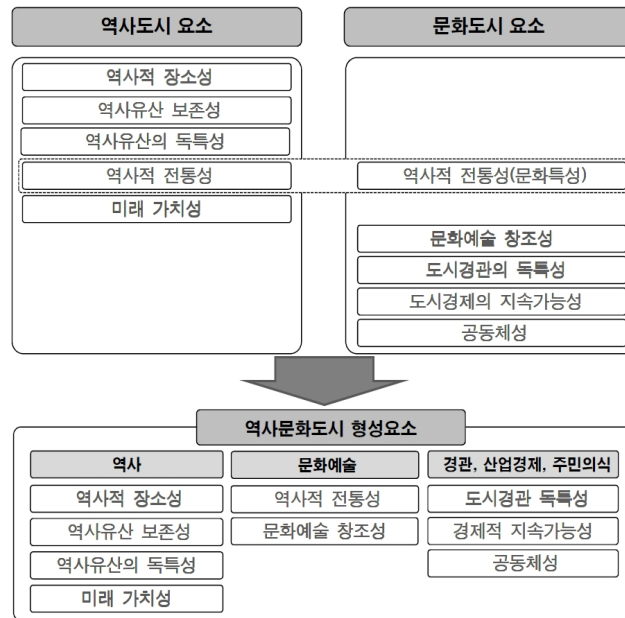
도시이미지 형성 모형 적용 절차는 첫째, 그 도시의 미래 도시이미지 상을 도출하며, 둘째, 도시이미지 상을 구현하는 형성요소를 도출하고, 셋째, 도출된 형성요소를 바탕으로 현황 및 이미지 조사·분석과 평가를 실시하며, 넷째,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요소별 형성전략, 사업을 도출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요약-2] 도시이미지 형성 모형

2)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 도출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 분석결과, 역사, 문화, 경관, 경제산업, 주민의식 등 총 5개 부문, 31개의 세부평가항목을 최종 도출하였다.



[그림 요약-3] 역사문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형성 요소

2. 도시의 미래상 및 현황 조사분석

1) 부여 미래도시이미지 상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 부여주민들은 부여가 역사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도시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반면, 부여 외 지역주민들은 부여가 역사와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하여, 전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여의 미래도시이미지 상으로서의 역사문화도시 형성은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현황 및 설문조사

현황조사와 설문조사(지역 내외 주민) 분석결과, 부여는 역사부문에서 우수한 요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경관, 경제부문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부문별로, 역사부문은 이미지 강화·대체전략이 필요하며, 문화부문은 이미지 강화·창출, 경관, 산업·경제부문은 이미지 창출, 주민의식부문은 이미지 창출·강화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요약-1〉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별 형성전략 방향

부문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요소	현황조사	설문조사 (평점)	이미지형성 전략방향
역사	문-11. 부여 역사도시로서의 장소성	긍정	약간긍정, 긍정(3.94)	강화
	문-12. 특기할 만한 역사유적, 문화재 보유	긍정	약간긍정, 긍정(4.29)	강화, 대체
	문-12.1. 중요한 역사유적과 문화재는 진정성	긍정	약간긍정, 긍정(4.29)	강화
	문-12.2. 역사유산 보존을 위한 법제도	긍정	약간부정, 보통(3.05)	대체
	문-13. 역사도시로서 역사적 환경을 유지	보통	보통 (3.06)	창출
	문-13.1. 역사도시로서 독특한 도시구조	미흡	약간미흡, 보통(2.79)	창출
	문-14. 부여 역사문화유산 또는 전통의 학문적 또는 교육적 가치	긍정	약간긍정, 긍정(4.07)	강화
문화 예술	문-21. 부여는 역사문화적 전통의 정체성	긍정	긍정 (3.97)	강화
	문-21.2. 부여의 역사적 전통의 전승 또는 창조적 변화 발전	미흡	미흡, 약간미흡(2.61)	창출
	문-22. 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 창조에 필요한 기반이 조성	미흡	약간미흡 (2.79)	창출
	문-22.1. 문화예술 인력	보통	미흡 (2.46)	창출
	문-22.2. 문화시설 보유	미흡	약간미흡, 미흡(2.31)	창출
	문-22.3. 문화예술 활동	보통	약간미흡 (2.78)	창출
	문-22.4. 문화예술 창조와 활동지원을 위한 법제도	미흡	미흡 (2.58)	창출
경관	문-31. 부여는 문화도시로서 아름답고 독특한 도시경관이 조성	미흡	미흡 (2.64)	창출
	문-31.1. 역사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도시경관정비	미흡	미흡 (2.53)	창출
	문-31.2. 주요 역사문화유산과 시설을 연계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미흡	미흡 (2.57)	창출
	문-31.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시설	미흡	미흡 (2.37)	창출
산업	문-41. 부여 대표 문화(콘텐츠)산업	미흡	약간미흡 (2.85)	창출
경제	문-41.1. 차별화된 문화자원 또는 콘텐츠	보통	보통 (2.88)	창출
	문-41.2. 문화산업지원 법제도, 재원, 인력	미흡	미흡 (2.38)	창출
	문-41.3. 미래 도시경제를 이끌 수 있는 문화콘텐츠 및 산업	미흡	미흡 (2.68)	창출
주민 의식	문-51. 부여주민들은 문화적 공동체 의식		보통 (3.02)	창출, 강화
	문-51.1. 부여주민들의 역사문화적 자긍심		긍정 (3.37)	강화
	문-51.2. 역사문화도시를 부여의 미래 대표이미지로 인식		긍정 (3.47)	강화
	문-51.3. 역사, 문화, 전통 등의 행사에 참여		약간긍정, 보통 (3.28)	강화
	문-51.4.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미흡 (2.75)	창출

3. 도시이미지 형성방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부문별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역사부문에서 현재 부여는 충분한 역사적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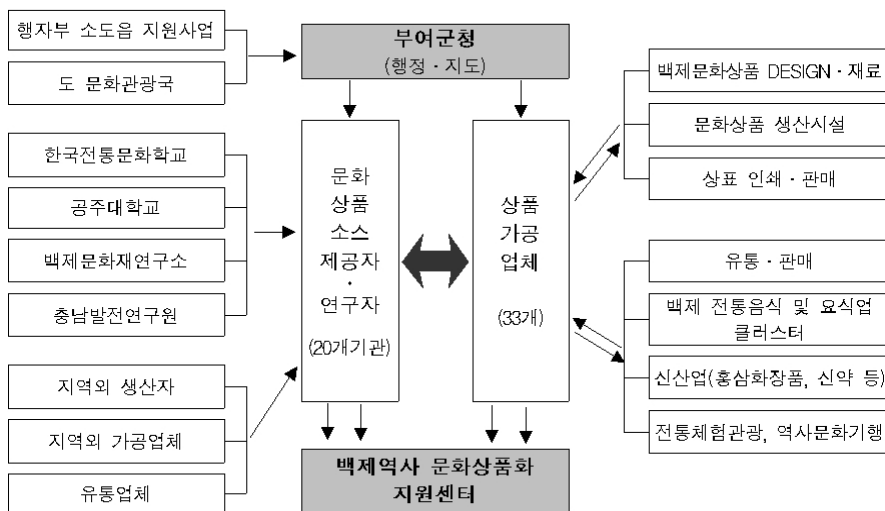
■ 조성후 거리 모습

- ▶ 용도 : 전통을 소재로 한 기념품, 민구, 사무문구센터, 전통음식점의 유도, 유치 → 용도 특성화를 통한 상가 활성화
- ▶ 경관 : 백제양식의 지붕, 입면, 색채 등으로 건축물을 정비, 전통 수종 식재 → 백제시대의 역사문화 경관 조성



[그림 요약-5] 부여 시가지 도시경관 정비(안)

산업경제부문에서는 현재 소도읍 사업으로 수립된 문화상품화 육성계획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도시차원에서 영세한 문화상품업체를 벤처화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고, 백제 역사재현단지를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의 제품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림 요약-6] 부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체계(안)

주민의식부문에서는 역사문화도시로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도시차원의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등의 발굴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관심을 유도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남도 중소도시 쇠퇴특성 분석방법 적용에 관한 연구

윤 정 미 | 책임연구원

| 과제종류

기본연구 2009-06

| 공동연구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서경천 박사

도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성장·쇠퇴하기에 도시의 쇠퇴 실태 및 원인을 정밀히 진단하여 정책 및 정비방식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재생은 먼저 재생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는 지역을 진단·선택하여야 하고, 지역도시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Bottom-up 방식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도시쇠퇴 문제를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도시쇠퇴의 실태에 대한 현황분석과 실태진단을 통해 도시쇠퇴의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쇠퇴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의 도시쇠퇴 특성 도출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쇠퇴진단 및 특성도출을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도시는 독립적으로 성장·쇠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도시와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단일 도시 쇠퇴에 기반하여 고찰하고 있다. 또한 도시 쇠퇴 요인에는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도시쇠퇴를 유발하는 외부적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외부요인이 도시쇠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간과되어 왔다.

도시쇠퇴진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되어야 하고, 인접 도시와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고려한 도시쇠퇴 특성을 고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시쇠퇴의 내부환경 뿐만 아닌 도시쇠퇴에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에 인한 특성도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동읍지역의 도시쇠퇴 특성 도출 및 도시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읍면동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그 중 면지역을 제외한 동읍 지역 61개 행정구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00년과 2005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첫째, 충청남도 동읍지역의 도시쇠퇴특성 도출 및 도시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 고찰을 통하여 도시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도출한다.

둘째, Two-Step Cluster Analysis를 사용하여 쇠퇴정도와 쇠퇴특성에 따라 동읍 지역을 유형화함으로써 도시쇠퇴특성을 도출한다. 군집분석은 다속성을 통한 유사 특성 지역 군집 안에서 해당지역의 도시쇠퇴요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공간자기상관법을 이용하여 쇠퇴특성을 도출한다. 공간자기상관법은 주변 도시와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고려하여 도시영향 분석이 가능하고, 네트워크와 같은 공간상의 관계성을 고려한 주변 도시의 영향을 통한 도시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넷째, 도출된 외부요인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충청남도 동읍지역의 도시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파악·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쇠퇴의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충청남도 동읍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도시쇠퇴 요인도출 방법론을 제시·분석한다.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으로는 첫째 분석 단위에 대한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읍면동 차원의 분석단위와 통계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도시의 쇠퇴지역 및 특성을 잘 파악하고 과장과 왜곡을 최소화하였다.

둘째, 도시쇠퇴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쇠퇴의 정도를 이용해 유형화하고, 공간상의 상호관계성 즉, 인접도시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공간자기상관법을 사용하여 도시쇠퇴특성을 고찰하였다. 공간자기상관은 공간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론이기에 주변과 연계한 실세계의 쇠퇴특성을 도출하는데 유용하다.

셋째, 도시쇠퇴 원인 분석을 위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내부요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인 도시쇠퇴 외부요인들을 검토하여 도시 쇠퇴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지방도시쇠퇴 문제를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도시쇠퇴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의 도시쇠퇴 특성 도출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도시쇠퇴 진단 및 특성 및 영향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 동과 읍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에 따라 도시의 성장 및 쇠퇴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고속도로축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도출되어 고속도로 및 광역교통망과의 접근성도 도시의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쇠퇴가 심각하여 도시재생정책이 심각한 지역은 산맥으로 단절된 지역으로 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들이며,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성 또한 떨어진 지역인 서쪽 내륙지방이다. 최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그 파급효과를 기대해 본다.

또한 도시의 외부요인을 도출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 충청남도의 동읍지역에 미치는 외부요인은 서울과의 접근성과 해당 지자체 시군청인 것으로 도출되었고, 2005년은 KTX로부터의 접근성만이 도시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을 통해 지방도시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서울 대도시와의 접근성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서울과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시군청과의 접근성도 영향을 미쳤으나, 지방중소도시의 쇠퇴문제가 시·군청이 해당되어 있는 지역도 함께 쇠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에 제외되었다 할 수 있다.

도시쇠퇴 내부·외부요인을 이용한 통합 모델 분석결과 2000년 충청남도 동읍지역에 미치는 도시쇠퇴요인은 내부요인 독거노인가구비율, 노후주택비율, 종사자수 3개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2005년은 내부요인 신규건축비율, 독거노인가구비율, 종사자수, 노령화지수 4개와 외부요인 KTX로부터의 접근성이 도시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를 통해 다양한 도시쇠퇴 특성 고찰을 통해 재생사업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도출 등 도시재생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도시쇠퇴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쇠퇴실태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진단이 필요하며, 쇠퇴지역의 양상과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쇠퇴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정책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제도 구축 및 운영 개선 방안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한 상 옥 | 연구위원

| 과제종류

기본연구 2009-08

| 공동연구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종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이인성 교수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이호정 교수

최근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90년대 후반에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난개발에 의해 파괴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정책과 도시·지역의 질적 향상을 위한 쾌적성과 정체성 확보, 생태도시 형성,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연구되고 실행방안이 모색되었다.

사회전반에 대한 요구에 부응코자 2007년에는 경관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관법은 법의 구성체계가 실체법이 아닌 선언적인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을 집행하고 실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경관법을 중심으로 타법과의 관련성 상에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통합운영에 있어서는 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경관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법적 틀을 마련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부처에서 도시 및 자연경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관관리제도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관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관관련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관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경관행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관관리제도 및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

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경관조례의 정비방안, 집행 수단적 측면에서의 경관심의기능의 강화방안, 운영조직적 측면에서 경관관련 행정 추진조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우선, 경관법 적용에 있어 경관조례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한 바, 기존의 개별법에 의한 경관관리 대상에 따라 제정된 경관관련 조례를 경관법에 의거한 경관조례로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경관법에 의거하여 경관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준용하되, 경관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위원회의 기능강화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타위원회와의 기능 중복문제, 위원회 구성의 문제, 심의기준 부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우선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재풀의 구성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경관관련 운용조직의 효율화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통합적 추진을 위한 협력적 운영체계의 공감대 부족, 종합적 파악 및 총괄 진행을 못하는 부서의 부재,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조직 중심의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관전담부서를 설치운영토록 하되, 기본적으로는 통합적인 경관행정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경관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관련조례는 난립 ◦ 실행수단의 미흡 ◦ 위임조항 미비 ◦ 경관사업 한정 및 지원책 미흡 ◦ 행위제한 및 규제수단 全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경관조례의 통합 조정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세분화 ◦ 행위제한 등 제재조치 강화 ◦ 다양한 경관사업의 발굴 및 지원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경관계획 수립
경관 심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위원회와의 기능중복 ◦ 전문가 일변의 위원회 구성 ◦ 심의기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경관위원회 구성 ◦ 다분야 경관전문가 풀 구성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지원 ◦ 공통된 심의기준 마련 ◦ 타위원회 심의시 경관기본계획내용 첨부 ◦ 사전 자문제 및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운영
경관 행정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운영체계의 공감대 부족 ◦ 총괄진행을 못하는 부서의 부재 ◦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협약 및 협의회 구성을 통한 기존조직 중심의 협의체계 강화(단기)와 전담부서 설치(장기) ◦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 ◦ 민간전문가의 활용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은 문헌검토와 공무원의 의식조사를 통해서 추진방향에 대한 설정 측면에서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로 남게 된다.

첫째, 경관조례와 관련하여 시행상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법적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운영적 측면에서 사전자문제도와 행위제한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한 조속한 시행이 요구된다.

둘째,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에 감안한 경관계획의 수립과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경관계획 수립방향 및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수행과 더불어 지침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한 경관계획 지침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경관계획의 수립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경관·미관지구에 대한 경관 창출을 위한 제반사항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경관심의·자문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타위원회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이 심의 대상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지역지구에 따라 그 대상을 달리하고 있고, 또한 그 심의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할 경우, 초기에 마련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주민 및 사업자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충청권 도시쇠퇴 특성과 재생 방향에 관한 연구

임 준 홍 | 책임연구원

| 과제 종류

기본연구 2009-09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센터 조수희 전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센터 황재혁 초빙연구원

본 연구는 도시정책의 중심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청권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쇠퇴의 특성과 영향구조, 최근 도시재생을 둘러싼 정부 대책을 분석하여 충남의 도시재생 정책방향과 도입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 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안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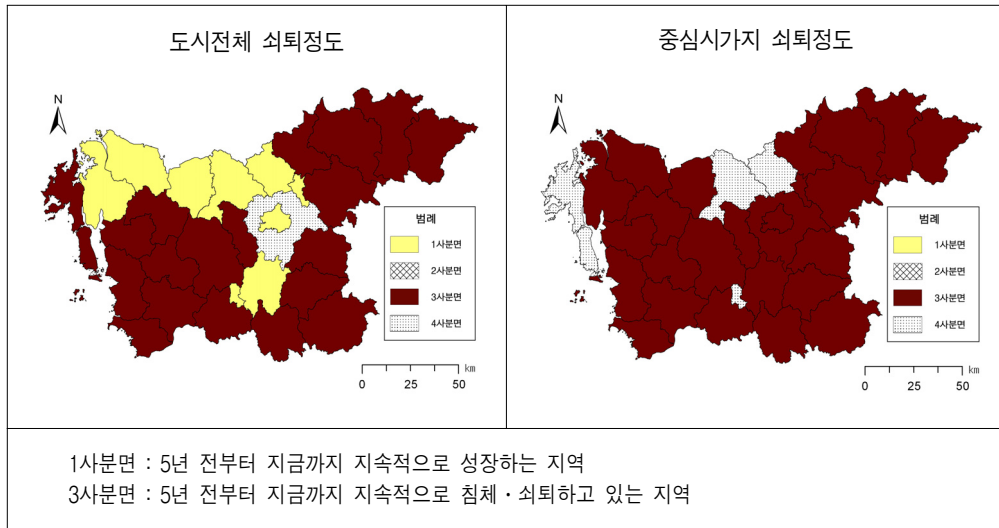
연구방법은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전문가 의식조사, 선진 사례조사 등에 기초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충청권 도시의 쇠퇴 특성과 실태, 쇠퇴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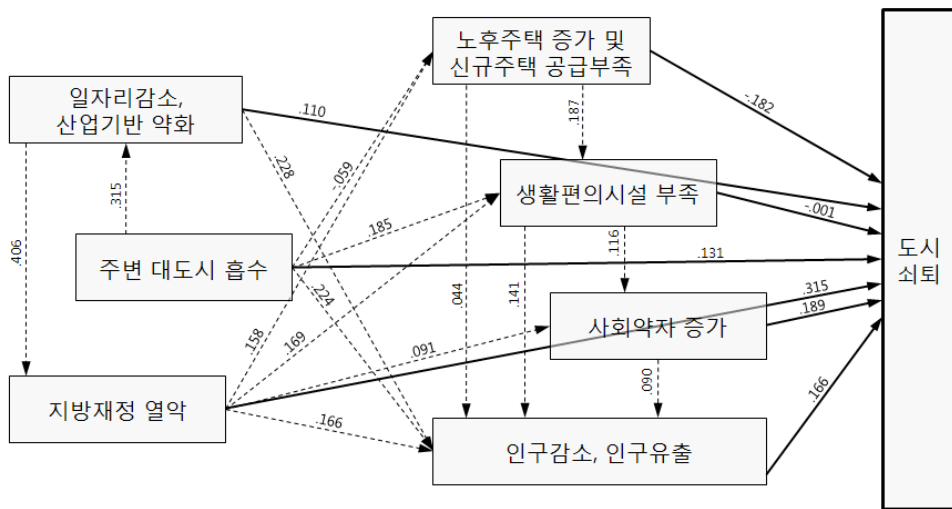
충청권 도시의 쇠퇴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인접한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쇠퇴하고, 쇠퇴현상은 도시전체 보다는 중심시가지에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쇠퇴의 원인에 대한 영향구조분석 결과, 쇠퇴의 1차적 원인은 경제, 재정, 주변도시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이 주거환경 악화, 사회약자 증가, 인구감소 현상을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시가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쇠퇴의 직접적인 영향은 노후주택 증가, 사회약자 증가, 인구감소 등이고, 간접적 영향은 주변도시의 영향과 인구감소 및 일자리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쇠퇴의 정도와 공간적 분포]



[도시쇠퇴의 영향구조]

[도시쇠퇴에 영향을 주는 원인]

구 분	주변도시 흡수	일자리 감소	지방재정 열악	노후주택 증가	편의시설 부족	사회약자 증가	인구 감소
직접영향 (Standardized Direct Effects)	0.131	0.110	0.091	-0.182	-0.001	0.189	0.166
간접영향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0.126	0.114	0.098	0.016	0.047	0.015	0.000
총영향 (Standardized Total Effects)	0.257	0.225	0.188	-0.166	0.046	0.204	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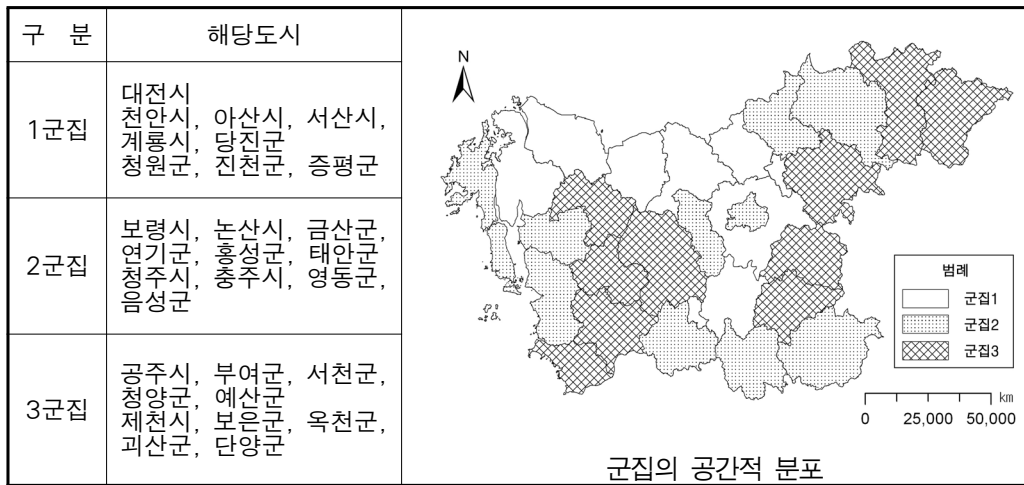
□ 도시유형별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쇠퇴의 특성에 따라 도시를 유형화하고, 도시재생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성장하고 있는 제1군집의 도시 특히, 천안, 아산 등은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광역)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중심시가지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 중심시가지 내 미이용·저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고도화 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시가지 정주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보다는 커뮤니티 재생 차원에서 정주환경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수도권 북부지역은 수도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재생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며, 특히 아산의 경우 수도권 전철 연장 등과 연계하여 과거 온양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역사문화·디자인을 통한 도시재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저성장 또는 침체하고 있는 제2군집의 도시들은 무엇보다 새로운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산업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도시재생 차원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재생사업과 중심시가지 내 이전적지 등을 활용한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심시가지 정주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재생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쇠퇴특성에 따른 도시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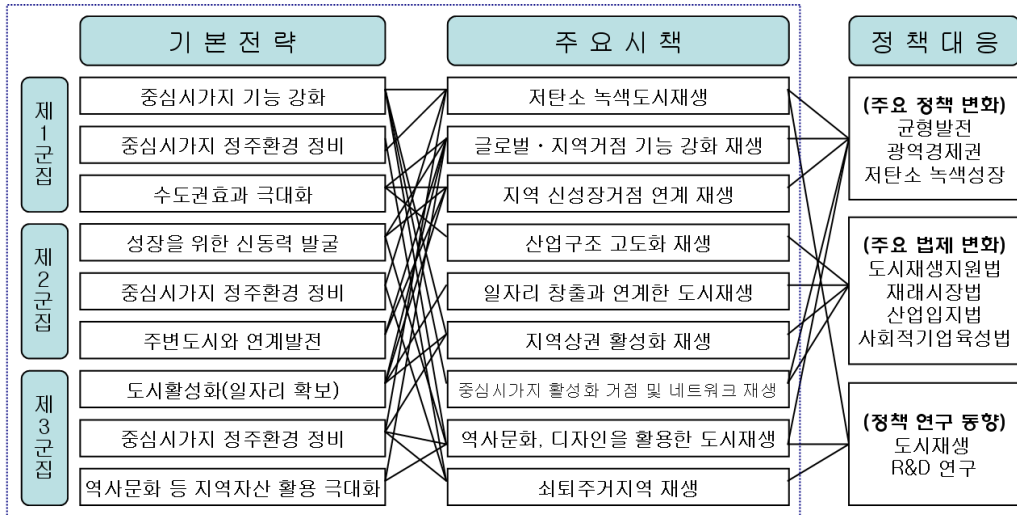
셋째, 도시전체가 침체·쇠퇴하는 제3군집의 도시들은 쇠퇴원인이 복잡하고, 우선적으로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므로 산업구조 고도화재생, 중심시가지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복지,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한 일자리 확보도 요구된다. 그리고 공주, 부여, 예산 등과 역사문화 자산을 많이 보유한 도시들은 이들 지역자산을 기초로 한 도시재생 전략을 통해 도시 정체성 강화, 관광활성화,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방법과 정부지원 역시 선택적·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독자적인 시장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1군집의 도시들은 민간 개발과 부동산 개발방식에 초점을 두고, 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규제완화나 인센티브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침체·쇠퇴현상이 심각한 제2, 3군집의 도시들은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며, 정책적 마인드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 도시유형별 도시재생 전략과 시책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추진에 대비하여 충청권 특히, 충남의 도시들은 도시유형과 개별 도시의 성격에 부합하면서, 재생의 자원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의 유형과 정부정책 대응형 도시재생사업을 시군의 특색에 맞게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1〉 도시재생의 전략과 시책

□ 도시재생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이끌어가야 하는 해당 시군은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와 쇠퇴도시·쇠퇴지역에 대한 재생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부처별로 개별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종합적 기획·계획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차원의 ‘(가칭)도시재생지원법’제정 이전이라도 자치단체는 도시재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향후 전개될 도시재생 관련 시범사업 등에 적극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는 시군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 차원의 도시재생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특히 국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정보 제공, 전략의 제시 등의 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최근 광역경제권 관점에서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

관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어떻게 도시재생을 추진할 것인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포괄보조금 지원사업을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검토·추진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선 도시재생 유사사업을 패키지화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향후 ‘(가칭)도시재생법 제정’과 시범사업 추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영재 | 책임연구원

| 과제종류

기본연구 2009-11

| 공동연구

오카야마대학 김두철 교수

농촌진흥청 박덕병 농업연구사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선임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한상욱 책임연구원

최근 우리나라의 농정방향에 있어 농촌개발부문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농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경우, 아직까지 농정의 방향이 대부분 농업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농촌개발을 전담하는 부서가 다양한 부서에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추진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이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농촌개발부문에 대한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충청남도의 농촌개발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의식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농촌개발 관련 조직, 농촌개발사업 예산, 농촌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농촌개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촌개발사업의 조직 및 거버넌스 부문, 기획 및 정책수립 부문, 사업집행 및 관리 부문에 관하여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부서간 업무분담에 있어서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체험관광사업 등에서 업무의 중복성을 보였으며, 업무분

장이나 업무량에 따른 인력배치에 관하여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충청남도의 경우 농촌개발 추진에 있어 특정분야의 자문이나 특정부문의 연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관련 단체 및 조직에 협력을 구하는 경우는 다수 있지만, 통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한 사례가 거의 없고, 있더라도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

또한, 농촌개발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갖춘 종합계획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물론, 최근 수립된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도 농정변화의 패러다임은 잘 반영하고 있지만 농림수산물 업무에 한정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농촌개발사업의 대부분이 국비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없이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개발사업을 총괄기획·조정할 수 있는 부서가 없고, 사업의 통합성·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촌개발사업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선진 사례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9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개발 관련 부서간 중복된 업무의 재조정과 새로운 수요창출에 따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충청남도 내·외부적인 통합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농촌개발사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충청남도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수립과 이에 필요한 정책수립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총괄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농촌개발에 관한 중장기적인 공통의 비전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여덟째, 농촌개발사업간의 연계성 강화로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아홉째,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서 부서간 기능 및 업무조정, 농촌개발 거버넌스 체계 구축(농촌개발정책준방식의 도입, 농촌개발정책협의회 조직 및 운영), 총괄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계획간 유기적 연계, ‘포괄예산제’ 및 사업평

가제도 도입 등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 연구를 기초로 향후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충남형 농촌개발모델 구축'을 후속연구로 하고자 한다.

충청남도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성 태 규 | 연구위원

| 과제 종류

기본연구 2009-10

| 공동연구

한국지역정보개발연구원 김유석 연구위원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정연정 교수

충남지역은 7차에 걸친 정보화마을사업을 통해 총 3,240대의 PC를 보급하는 등 정보격차를 해소하였고, 정보교육과 정보화마을별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판매실적도 증가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인 평가를 통해서는 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정보화마을의 운영위원(장)과 프로그램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마을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지역내 3개 정보화마을과 지역의 2개 정보화마을의 운영위원장과 프로그램 관리자와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충남 정보화마을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시사점으로는 ①보다 다양한 정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②마을 정보센터의 장비개선, ③마을정보센터의 활용도 제고, ④정보화마을 자체 브랜드 강화, ⑤수의 창출프로그램의 다양화, ⑥홍보활성화, ⑦자립의지의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조사를 통해서 ①공정한 평가체계, ②신속하고 투명한 ‘살아있는’ 정보, ③정보화마을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 ④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⑤홍보 및 마케팅 지원 확대, ⑥관련 사업과의 연계사업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 평가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으로는 ①체험상품의 판매를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②정보화마을센터의 프로그램 관리자의 노력과 담당공무원의 지원 확대,

③전담 공무원의 확대 배치, ④마을주민의 인식전환 유도, ⑤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이어 정보화마을사업과 동일한 목적을 지닌 정보격차해소 관련 유사사업(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농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관련 유사사업(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충남 u-농촌체험관광 시범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정리하였다. 정보화마을 연계방안으로 정보화기반사업과 마인드교육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화마을사업,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녹색농촌체험사업이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선적으로 마을 자체사업을 추진하되, 자치단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후속적 단계별로 중앙부처와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한 연계 중심점을 구축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연계를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충남 농촌의 인적역량 강화 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유 학 열 | 책임연구원

| 과제종류

기본연구 2009-12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조영재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정혜영 초빙연구원

최근 농촌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은 중앙정부 주도의 下向式 방식(Top-down approach)에서 지역주민 주도의 上向式 방식(Bottom-up approach)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향식 방식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농림수산식품부),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신활력사업(행정안전부)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실제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당초의 의도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분명 적지 않다. 이것은 주민주도를 위한 형식적 틀은 갖춰졌지만 실제의 사업진행과정에서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계획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참여도 형식적 참여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정책의 취지를 인식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지역(마을)단위의 인적역량 부족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최근 농촌개발의 초점이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에 모아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향식 농촌지역 개발을 주도할 전문 인력 양성 및 이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한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2005.4)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농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외에 지역 내·외의 인적자원을 지역내에 배치·연계하는 '농촌마을사무장채용지원제도'(농촌마을종합개발권역사무장, 농

촌체험마을사무장) 및 '1인1촌전문가자문지원사업' 등도 시행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된 지 4~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동안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해 온 인적역량강화 사업¹⁾들이 과연 前述한 농촌지역 개발 및 마을운영에 있어 필요로 하는 인적역량이 강화되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충남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인적역량강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사업의 효과, 평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충남 농촌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인적역량강화 사업의 실태 분석을 통해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충남의 농촌지역 실정과 수요에 걸 맞는 인적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특히, 중앙정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상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차원에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제시에 본 연구의 초점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4부문(본문의 제2장~제5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는데, 즉 분석대상을 전문농업인육성을 위한 인적역량이 아닌 지역개발 및 마을운영에 필요한 인적역량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과 인적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 아닌, 현재 시행 중인 사업들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또한 관련정책 검토 및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충남의 인적역량강화사업 추진실태를 크게 교육훈련프로그램과 외부인력 영입 및 네트워킹으로 나누어 문헌조사, 설문조사, 현지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선진사례를 국내외로 나누어 검토 하였으며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남의 농촌지역 실정과 수요에 걸 맞는 인적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현장체험·계획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순회방문 문제해결형 프로그램, 충남 농촌마을 인적네트워크센터(가칭) 설립 등이 바로 그것이다.

1) 농촌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또는 교육프로그램)은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농업인력 육성 부문과 농촌지역 개발 인력 육성 부문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만을 다루기로 함

현재, 충청남도는 물론 시·군 지자체에서도 농촌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인식, 전략 및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인적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기존 사업들의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미흡한 점이 적지 않지만 결론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들은 도나 시군에서 관련 지원책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窮極의 목적은 충남 농촌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인적역량강화 사업의 실태 분석을 통해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충남의 농촌지역 실정과 수요에 걸 맞는 인적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중앙정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상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충남도차원에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훈련프로그램 개선방안으로는 (1) 충청남도차원에서의 인적역량강화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계몽과 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 제기, (2) 충청남도 독자적인 현장체험·계획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 (3) 2~3개 면단위에서의 순회방문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외부인력 영입 및 네트워크의 개선 방안으로는 (1) 마을사무장보조원제도의 도입, (2) 사무장 채용 기간의 연장 및 사무장수당제도의 도입, (3) 맞춤형 전문가 자문제도, (4) 충남 농촌마을 인적네트워크센터 설립(가칭)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남 중소기업 지원방안

신 동 호 | 책임연구원

| 과제 종류

기본연구 2009-13

| 공동연구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박사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도내 중소기업은 내수침체와 신용경색으로 가동률과 업황이 크게 하락하였고 어음부도율 역시 급증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상승과 원자재 가격급등요인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상시적인 경영애로를 가중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율상승 및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요시장의 경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이론과 관련 연구동향을 통해 고찰한 결과, 환율상승, 금리인상,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요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금리, 환율, 원자재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도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간을 분석한 결과, 먼저 금리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 충격 이후 1개월까지가 가장 컸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나, 7개월 이후에는 점차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충격 이후 1개월까지가 가장 컸으며, 10개월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와 나프타가격 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1개월까지가 가장 컸으며, 10개월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유연탄 가격 충격이 어음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3개월까지 계속 커지며, 10개월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해외 주요국들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기극복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 및 개정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감세 및 보조금 지원 조치를 통한 내수기반 강화 및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구제금융으로 활용하는 한편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책자금 확대 및 세제지원, 금리인하 조치, 유동성 지원 등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도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은 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위험 관리지원 및 원자재 구매대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끝으로 환율 및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요인을 완화하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금번 경기침체의 주원인인 환율급등과 원자재 확보난을 도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환위험 관리를 위해 ①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한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② U-환율 컨설팅 지원단 신설·운영, ③ 환율관련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하였고, 원자재 확보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원자재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②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 지원, ③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전 세계적 경기둔화(global recession)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충남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은 충남지역의 경제성장에 제약요인(binding constraint)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생산적 활력 및 외부충격에 대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만 한다. 관련하여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은 경기대응력이 취약하여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충격은 중소기업의 상시적인 경영애로를 더욱 가중시키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부 수출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내수중심의 중소기업 대부분은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경영난이 가중되어 부도의 위기로 내몰리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는 중소기업의 경기극복을 위해 경영애로해소 중심으로 시행되던 기존 지원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록 한시적이거나 지자체로는 최초로 '도 정책자금의 상환유예' 지원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도내 중소기업들이 급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가 환율상승과 원자재가격 급등이 주원인이라는 점과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및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 할 때 이에 대한 충남도 나름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환율과 원자재 가격변수의 통제(control)는 국가정책영역이므로 지자체 차원의 통제가 원천불가하다. 따라서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개입과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합당하나, 충남도 차원에서도 국가시책과 연계하거나 나름의 시책을 강구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환 위험관리를 위해 외환 전문가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환율 컨설팅을 해주거나, 환변동 보험과 같은 유용한 환헤지 수단을 수출보험공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홍보하는 일, 그리고 원자재 확보난 완화차원에서 업종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일 등은 도차원에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다.

끝으로 기업회생제도의 사례에서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충남도가 운용하고 있는 기업회생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존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충청권 경제모형 구축연구 II: 충청 광역경제권의 전략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 형 빈 | 연구원

| 과제종류

| 공동연구

기본연구 2009-14

-

충청권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입지가 결정된 충북 오송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충남도청 신도시 건설, 태안 기업도시 건설 등 21세기 국가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지역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충청권 개발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전북지역과의 연계발전구상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동일한 역사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충청권은 행정구역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공간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개발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역경제권으로의 발전방향은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인구 500만 명 정도의 지역을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이다.

이러한 광역권 형성을 위하여 산업과 기반시설 건설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산업정책이 추진·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분석수단으로서 지역경제 분석모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효과적인 지역경제 분석모형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분석·평가함으로써 지역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충청권 경제모형 구축연구 I의 후속연구로 2005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09)를 충청권이 세분화된 다지역투입산출표를 구축하여 충청권에서 추진되는 정책에 따른 효과를 지역내 다산업부분(multi sectoral)으로 분석가능 하도록 하는데 있다. 구축되는 모형을 활용하여 충남지역에서 추진되는 정책의 효과를 충청권 및 전국단위의 경제효과로 분석해 봄으

로써 정책수단에 대한 판단 근거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지역의 전략산업은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전략산업의 산업적 구분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사전연구로서 지역별 전략산업의 연계구조를 살펴보도록 한다. 전략산업의 연계구조 분석시 앞서 작성된 다지역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충청권 지역내 시군의 전략산업의 산업간 연계구조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러한 충청권 내 전략산업의 연계구조를 통하여 향후 충청광역경제권의 전략산업별 지원책과 지역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충남, 대전, 충북 세 지역의 산업연계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근 강조되고 있는 충청권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경제적 측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충남의 지역경제 특성을 반영한 다지역투입산출표를 작성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정책의 파급효과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구축된 다지역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충청 광역경제권내 지역의 전략산업간 연계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과 범위를 설정하고 제2장에서는 다지역투입산출모형의 구조와 선행연구 검토, 2005년 투입산출표 작성과정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충청권 지역경제 현황 및 앞 장에서 구축된 다지역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한 지역경제 구조분석을 실시한다. 지역별 산업구조는 2005년 전국 총 산출액 2,282,388십억원중 충청권이 213,580십억원으로 9.4%로 나타났다. 충청권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99,327십억원으로 4.4%, 충북이 62,106십억원으로 2.7%, 대전이 52,147십억원으로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살펴본 결과 충청권 지역은 중간투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간투입액 구성비를 전국평균과 비교해 보면 자გი지역생산품의 비율이 타지역생산품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최종수요 구조는 전국 최종수요 1,527,954십억원의 충청권 11.3%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충남이 5.0%, 충북이 3.5%, 대전이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연관관계분석결과 충청권의 평균 생산유발계수는 충남, 충북 2.60, 대전은 2.56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전국 생산유발계수가 가장 큰 산업은 제1차금속제품, 기타제조업제품,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평균 고용유발계수는 충북 19.2, 충남 18.9, 대전 18.7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전국 고용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충남, 충북, 대전 모두 음식 및 숙박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쇄 및 복제, 도소매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구축된 다지역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충남 및 충청광역경제권의 전략산업을 분석하였다. 이때 전략산업별 표준산업분류와 한국은행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산업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충남의 전략산업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지역간 연계구조를 다지역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지역의 이출, 이입 구조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충남의 전략산업인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 산업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뉴 IT 와 의학바이오 산업이다.

먼저 충남의 전략산업인 전자정보기기산업의 경우에는 충남과 충북의 이출과 이입 비중이 모두 높아 두 지역간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대전, 충북과 대전의 경우에는 대전의 이출, 이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경우에는 충남과 충북, 대전과 충북의 이출 이입 비중이 모두 높아 두 지역간 상호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전과 충남의 경우에도 타 산업과 이출입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비교적 지역간 상호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첨단문화산업은 충남과 충북의 이출 이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 지역간 상호 연계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북과 대전으로 분석되었다. 농축산바이오산업은 대전과 충북의 이출 이입비중이 높아 지역간 상호 연계성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충남과 충북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뉴 IT 산업의 지역간 연계구조 결과는 충남과 충북, 대전과 충북의 이출 이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상호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학바이오 산업은 대전과 충북의 이출 이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상호 연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충남과 충북의 지역간 상호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청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의 충청권 지역별 연계시 뉴 IT산업은 충남과 충북을 중심으로, 의학바이오 산업은 대전과 충북을 중심으로 연계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앞에서 제시한 제조업 부가가치 현황, 출하액, 월평균 종사자 수 현황과 비교

하여 살펴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에서 충청권에서 차지하는 산업 비중이 전국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략산업과 연관된 산업들이 충청권 지역에 일정규모 이상 집적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전략산업과 선도산업의 지역간 연계구조 결과가 충남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의 산업 생산규모가 충청권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충청권 내 다른 지역과의 산업적 연계구조가 전략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경우에도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규모 측면에서 충남이 충청권 내의 비중은 제조업 부가가치 액의 61%, 제조업 출하액의 66%, 월평균 종사자수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충남 및 충청권의 산업적 기반과 지역별 산업의 집적도, 지역간 연계구조를 반영하여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발전 전략 및 투자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인 뉴 IT산업, 의학바이오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지역적 연계방안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역적 연계를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산업입지 특성과 지역의 집적도를 고려하여 지역간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산업의 지역적인 구분을 통하여 산업입지를 계획 차원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정책은 산업의 지역별 특화가 가능하고 관련 산업의 지역간 연계성 강화에 따른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금강 주변지역 관광매력성 평가와 과제: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중심으로

김 경 태 | 연구원

| 과제 종류

기본연구 2009-15

| 공동연구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윤유식 교수

현재 국가 차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금강을 중심으로 한 금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각 지자체와 도에서는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금강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목적지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조성되어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관광목적지가 관광객의 관광행태 변화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되지 않고 있다.

금강주변지역의 경우 금강 살리기 사업, 녹색성장사업 등의 국가사업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주변으로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의 교통망 사업이 건설되었거나 건설될 예정으로 지역의 관광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등 금강주변지역 관광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목적지나 관광객에게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금강주변지역은 관광객들이 머무르지 않고 경유하는 관광목적지로 전락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관광목적지를 관광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매력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관광목적지로서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객들이 인식하고 있는 금강주변지역에 대한 관광매력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목적지 매력성 구성개념을 이론적으로 구축하고, 금강 주변 지역 관광목적지를 대상으로 매력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강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 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금강 주변 7개 시·군 지역의 매력성 연구를 통한 매력요인별과 속성별에 대한 관광객들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금강 주변 7개 시·군 지역의 매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매력요인 및 속성별 대상지역과의 매력성 평가를 통하여 금강 주변지역의 차별화 및 발전적 정책영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관광목적지 평가변수별 특성과 중요도와 성취도간의 차이를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매력과 새로운 매력 창출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도출된 20개의 관광목적지 매력속성을 중심으로 중요도와 성취도간 평균으로 피쉬바인모델을 적용하여 관광목적지 매력도를 산출하였고, IPA를 적용하여 관광목적지의 속성별 대상을 시각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방문횟수, 체류기간과 같은 관광행태와 성별, 연령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사항에 따른 중요도 및 성취도간의 값의 차이를 분석하여 설정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행태에 따른 관광매력성은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방문횟수의 경우 중요도 요인 3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류기간의 경우는 모든 중요도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에서는 연령대별로 성취도 요인 1에 대해 그룹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광목적지별 매력성 차이분석에서는 지역별 요인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지역별로 중요도 요인과 성취도 요인 모두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중요도-성취도 변수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금강주변지역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방문 전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에 대해 방문 후 전체적으로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쉬바인 모델을 활용한 지역별 매력도 분석 결과, 공주시가 27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천군이 251.3, 청양군이 246.3, 금산군이 240.2, 부여군이 232.4, 연기군이 225.4, 논산시가 2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관광목적지별로 중요도와 성취도를 활용하여 IPA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별 시각화하였다.

관광목적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광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이 요구된다. 관광목적지 경쟁력 창출의 시작은 관광객이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기대를 하고 그에 따른 관광 경험형성과 기대치를 파악하는 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관광객의 방문 행태 조사 결과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관광편의 시설 마련, 방문객 관리시스템 마련,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참여프로그램의 개발과 가족호텔시설 마련, 야간프로그램 개발, 종합안내센터의 건립을 제안했다.

방문객 매력성 평가에 따른 정책 제언으로 관광시설이나 프로그램 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쾌적한 관광과 관련된 변수인 깨끗한 환경조성, 안전, 관광인적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IPA 분석을 통한 지역별 활성화 방안으로 공주시는 관광지 내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 야간 프로그램 개발, 정보제공 방안 개선을 제안했고, 논산시는 관광홍보활동 개선, 역사자원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개발, 젓갈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금산군은 인삼의 건강이미지를 지역으로 확대,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중저가 브랜드의 호텔 건립, 야간위락프로그램의 개발, 금강을 활용한 수변레저스포츠 시설 조성을 연기군은 지역민의 환대 태도 개선, 수변을 활용한 레저스포츠 공간 조성, 관광홍보활동 개선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부여군은 독특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친환경 교통수단, 관광쇼핑센터 조성, 종합안내센터 건립, 야간위락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했고 서천군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공간 마련, 중저가 숙박시설 조성, 관광정보안내 시스템의 마련을 제안했고 청양군도 관광지내 친환경 교통수단 마련과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조성, 농촌을 주제로 한 즐길거리 마련을 제안했다.

행정구역 단위 CO₂ 배출량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II)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 이용도 구축

이 인 희 | 책임연구원

| 과제 종류

기본연구 2009-20

| 공동연구

地人 컨설팅 장은미 박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생태계, 산업·경제 및 생활양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 100년간 0.74°C 상승하였으며, 향후 지구 온도가 2°C 증가할 경우 지구의 약 15~40%의 동식물이 멸종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 온실가스에 대한 관측, 분석, 예측 등의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미래의 경제적 발전과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넷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을 위해서는 그 기본 데이터인 탄소배출 inventory가 구축되어야 한다. IPCC에서는 국가별, 지자체별 탄소배출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온실가스의무감축국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탄소배출 인벤토리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역 내에 투입된 에너지량 또는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하고 이를 IPCC의 이산화탄소 환산식에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방법론은 토지이용에 따른 자연적 배출량과 흡수량을 간과하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국가, 광역 지자체, 시·군, 읍면동 단위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면서 자연적 배출량과 흡수량을 포함하는 CO₂ 배출량 추정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적합한 방법론 중 하나가 remote sensing과 GIS 기법을 이용한 토지피복·이용별 CO₂ 배출량/흡수량의 추정방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보령시 지역을 사례로, 토지피복·이용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론을 통하여 행정구역 단위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연구지역을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탄소배출량 방법론과 차별되며, 시·군 지역 및 그 하위 행정단위의 CO₂ 순배출량의 추정을 가능케 하는 장점을 지닌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디지털 지적도를 이용하여 보다 정밀한 토지피복·이용도를 작성한다. 둘째, 각 토지피복·이용별 배출·흡수계수를 기존 연구와 사례지역 조사(field work)를 통하여 산출한다. 셋째, 산출된 토지피복·이용도에 각 토지피복·이용별 배출·흡수계수를 적용하여 CO₂배출량을 추정한다. 이상에서 추정된 CO₂ 배출량은 먼 오염/흡수원으로부터의 추정량이며, 이에 기존의 점 오염원, 선 오염원의 CO₂ 배출량을 합산하면 연구지역의 CO₂ 순 배출량 및 분포 지도 작성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는 2년간(2009, 2010) 연구로 수행되며, 2009년에는 위의 첫 번째 단계인 고해상도 위성영상(Quickbird, KOMPSAT 2)과 디지털 지적도를 이용한 토지피복·이용도의 정확도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2010년에는 두번째 단계로서 토지피복·이용별 배출·흡수계수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토지피복·이용도에 적용하여 연구지역의 CO₂ 순배출량을 추정하고 그 분포도를 작성한다.

본 연구를 통해 Quickbird 영상과 KOMPSAT 2 영상을 이용하여 작성된 토지피복·이용도는 둘 모두 기존의 환경부 토지피복도보다 더 정밀하고 업데이트된 토지피복·이용도를 저비용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성을 활용한 토지피복도로부터는 배경농도의 현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자료로 제시 가능하며 배경농도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환경부의 토지피복·이용도는 수치지도, 수치임상도 등의 중첩을 위해 digitizing 할 때 담당자의 체계적이지 않은 인위적 판단이 개입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2002년 작성된 이후 같은 방식으로 갱신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도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도 제기되지 못한

실정이다.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토지피복·이용도는 그 이후의 변화를 보여주며 보다 더 정밀하다. 현재의 수치지도와 수치지적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지며, 상호간 경계의 불일치를 보인다.

충남 보령시를 사례로 한 Quickbird 위성영상의 분석을 통해 제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피복·이용도의 정밀한 작성을 위해서는, NIR(근적외선) 밴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충남도청이 보유·제공한 Quickbird 위성영상은 RGB 3밴드 뿐이었다. RGB 밴드의 조합으로는 토지피복·이용의 적합한 분류가 용이하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식생지수 대체 밴드(NDVI replacement band)를 생성하여 분류를 시도하였지만, 더욱 정밀한 식생 분류를 위해서는 근적외선(NIR)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둘째, 수치지적도 데이터(KLIS자료)를 그냥 활용하면, 피복문제가 다 해결되며, 영상을 이용한 피복도 작성이 필요 없다는 일부의 의견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수치지적도(KLIS자료) 자체의 분류는 CO₂ 배출을 위한 조건과 매칭되지 않기 때문이며, 간척지 및 습지 등의 분류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농지 전용 및 산지 전용으로 인한 불법 활동에 대한 내용은 수치지적도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위성영상에서는 확인이 가능하다.

셋째, IKONOS, Quickbird와 같은 초고해상도도 각도 촬영이 다양한 스테레오 중·고 해상도 다분광 위성영상 이미지(multi spectral image)를 사용하면 더욱 적합한 프로젝트 결과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로서, EO 1 Ali, SPOT와 같은 위성영상을 이용할 경우 저비용으로 효율적이며 적합한 과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영상을 16bit로 pan sharpening하면 숲 및 초지 분류의 정확성을 더 정밀화할 수 있다. 70센티급의 정밀한 위성영상은 픽셀 혼합 현상 및 그림자 등의 노이즈 효과가 오히려 증가하고 Quickbird를 단계 해상도 8bit 대역으로 pan sharpening한 결과 saturation이 발생하여 밀생된 숲의 구별이 어려웠으며, 물과 그림자의 분류 역시 문제가 되었다. 도심지역의 인공구조물의 반사도 값(DN) 역시 포화되어 경계선이 모호해졌으며, 현재의 일반 위성영상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분류법만 의존해서는 분류의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KOMPSAT 2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Quickbird 영상을 이용한 것 보다 더 정밀한 토지이용·피복도를 작성을 가능케 하였다. KOMPSAT 2 위성영상은 1개의 면에 적용하여 세부 주제도

를 제작하였으나, 타 지역 모두 제작 후에, 동리 별로 분할하여 정리할 경우, 대기 중 CO₂ 기여도가 행정동별로 추출될 수 있을 것이며, 읍면동간의 상대적인 비교도 가능하다.

다섯 개의 클래스 분류체계는 분류가 확실하게 되어 오류는 찾기 어렵지만 건물, 도로, 빌딩의 구별이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15 클래스의 분류체계는 주택, 도로, 건물(building), 댐·보 등 인공구조물의 분류체계를 세분화할 수 있으며, 또한 해변(seashore), 갯벌(foreshore), 습지(shallow water) 등 자연 구조물의 분류체계 역시 세분화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류과정에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은 증가한다.

지역단위 CO₂ 배출량 추정 또는 비오름 생태지도 작성의 base map인 토지피복·이용도 작성은 위성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기존의 수치지도, 수치지적도를 이용한 방법보다 더 정밀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2차년도에 LiDAR 자료 및 10미터 급 DEM 자료를 함께 사용할 경우 더 나은 분류기법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알고리즘(algorithm)의 측면에서는 training vector와 비교 topology, possibility function들을 적절히 결합하는 분류기법을 개발할 경우 결과물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치표고모델 (LiDAR, stereo pair를 통한 고도추출)을 multi spectral 영상과 함께 사용할 경우 정확도를 매우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로서 논과 밭의 구분, 비닐하우스의 판별, 숲과 초지의 구분, 건물의 그림자와 수체의 분류, 갯벌과 나대지의 구분 등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토지피복·이용의 분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10미터 보다 촘촘하게 추출된 수치표고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인공지물의 분류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최적의 피복 분류체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기후변화 요인 CO₂ 배출 및 흡수효과에 대한 모델결과의 결합을 통한 개별 오브젝트 별 영향요소를 정량화 하도록 설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의 운영실태 및 설치방안

-유기물(BOD₅)을 중심으로-

이 상 진 | 연구위원

| 과제종류

기본연구 2009-16

| 공동연구

한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김건하 교수

(주)송현R&D 이상득 대표이사

충남수질총량관리센터 정우혁 연구원

현행 우리나라의 하천관리에 있어서 유기물 중심의 비점오염물질 관리정책은 하천 및 호소의 유역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산출한 비점오염물질 배출량의 결과에 따라 설치한 저감시설은 무용지물이 되거나 저감효과가 매우 미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대상 미만이라 하더라도 개별비점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개발부하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지역의 강우여건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유역별 진단과 함께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저감시설의 설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표수량의 증감에 따른 배출유역의 하천수질농도와 관련성을 분석하여, 유역특성을 고려한 비점오염원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비점오염물질 관리체계와 주요 국가별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동향을 살펴보고, 충청남도의 비점오염물질 발생특성, 비점오염물질 배출과 방류수역의 상관성을 해당수역의 수질과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지역에 공공으로 설치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현황, 운영관리 실태, 설치 및 운영관리 문제 사례 등을 조사하고,

비점오염물질 배출유역 특성에 따른 저감기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기술하였다.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료조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내용의 신뢰향상을 위하여 연구과정별 연구심의회 및 Workshop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및 주요국가의 비점오염물질 저감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부 등에서 출간된 통계, 물 환경 관련문헌, 비점오염물질 관리와 관련된 법률 및 지침, 그리고 Internet Web Site를 통하여 각종 자료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은 충청남도 유역특성에 적합한 비점오염원관리 및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여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법률정비 등에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예산절감 및 예산운용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비점유기물의 배출부하량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충청남도 비점오염관리의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비점오염물질 발생특성, 해당수역의 수질분석,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충청남도의 토지단위면적당 유기물발생량은 대지로 전환된 율이 높은 읍 이상의 지역이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 하천유역에서 풍수기보다 저수기·갈수기에 하천의 유기물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점오염물질로 인하여 하천의 유기물농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충청남도에 설치한 공공비점오염저감시설은 6개시설로 이중 강우량이 없는 시기는 처리대수량이 없어 2개 시설은 운영중지 상태이고, 2개의 저감시설은 점오염원인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대청호유역의 오염하천을 대상으로 설치한 2개소는 시설철거 공사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비점유기물에 의한 문제보다는 생활하수와 가축분뇨 등 점유기물 관리의 부실로 하천과 호소 등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농·어촌지역에서는 비점유기물과 점유기물을 병행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타당하며, 저감시설은 자연상태에 가까운 정화형 습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비점오염물질 관리는 저감시설의 설치에 앞서 발생원 자체관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서 뿐만 아니라 도시, 건설, 산업, 농림 등 관련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공공수역에 이르는 비점유기물 양을 실측에 의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배출량이 없는 날까지 포함하여 배출된다는 가정으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강우량이 없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저감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강우로 인하여 비점유기물의 배출 일에는 하천유량이 많아져 수질농도가 낮아지지만 설치한 저감시설을 운영해야하는 등의 모순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수질개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비점오염물질은 점오염물질과 달리 지역별 발생 및 배출특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최적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에 따른 비점오염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수질오염물질 관리대상 항목별 수질기준과 저감목표, 시기 등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유역조건에 합당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법률적인 기준에 의한 개별비점저감시설 설치의무 대상규모 미만이지만 조건부로 저감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금강수계의 경우 유역의 현실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례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충남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과 정책방향

정 종 관 | 연구위원

| 과제종류

기본연구 2009-17

| 공동연구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오세은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양은영 연구원

녹색성장의 개념은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 파생되는 에너지·환경관련 기술·산업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발굴해 내고, 기존산업과의 상호융합을 시도해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위원회, 2009).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영의 큰 틀로서 제시된 정책방향을 토대로 충청남도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을 평가하고 개발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역량구축을 위한 조직, 예산, 인력, 제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상위개념의 전략계획과 함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단기전략 사업을 발굴하여 성과를 가시화하는 하위개념의 구체화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날 청정기술을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반기술조성, 혁신적인 사업화모델, 시장경제적 접근전략, 정부정책 반영 등의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은 충청남도 녹색성장 전략계획을 기본으로 구체화하는 복선

전략(複線戰略, two-track strategy)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맞춤형 전략으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크고 지역현안과 연계되는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금강살리기 관련 소수력발전 등을 선정하였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는 4%)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각 부문별 세부목표를 정해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가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 녹색성장 기본방향이 제시(2009. 8)된 이후 충청남도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고 충청남도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2009. 1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차원에서 충청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07년 68천TOE에서 2015년 400천TOE로 1차 에너지 사용량 대비 0.2%에서 1%로 향상시키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단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을 평가하고 경제, 환경, 사회 등 세 가지 기준관점에서 개발 가능량과 환경경제적 효과를 도출하여 정책시행 우선순위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련부문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토대로 통합적인 합의형성 과정을 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충남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급성이 있고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연성 폐기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금강살리기 관련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을 평가하고,
- 개발에 따른 비용편익 효과, 온실가스 저감효과, 청정개발체제 적용 가능성 검토를 거쳐,
- 충청남도가 목표로 설정한 2015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량의 1%인 400천TOE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충청남도의 가연성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잠재용량은 발생량 기준 총량으로 104,640.9TOE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충청남도 내 538.5톤/일로 회수가 가능한 음식물류의 에

너지 총량은 11,731.2TOE/년에 달하고 있다.

2008년말 기준 통계자료를 기초로 축산잠재량을 구해보면 한육우, 젓소, 돼지, 가금류의 축분을 이용한 충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 잠재량은 257,088.8TOE/년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로 나타났다. 충남의 16개 시·군 중 홍성군이 14.8%인 38,054.2TOE/년으로 축산분뇨 바이오매스 잠재량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당진군이 13.2%인 33,817.6TOE/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체발생량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한다고 가정하고, 자원 잠재량을 산출하면 2008년 기준 충남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잠재량은 6,232TOE/년으로 회수가능량 대비 53% 수준이다.

금강본류와 주요지천에 설치된 수리시설물을 고려하여 발전용량과 연간전력량을 계산하였다. 최대사용유효낙차 산정을 위한 보의 유효높이는 보 높이의 80% 수준으로 하고, 연간전력량 산정 시 가동률은 65%로 하였다. 그 결과 신설되는 3개 보의 발전용량이 18,598kw, 연간전력량은 105,898Mwh에 달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충청남도내 저수용량 100만톤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 65개소에 대해 저수지별 유효낙차와 유량, 유효이용률 35%를 감안한 발전용량 규모는 4,494.3kw, 연간전력량은 13,779.5Mwh에 달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농업용 저수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규모의 경제를 적용하여 발전용량 100kw 이상의 8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의무할당제도(RPS)로 전환 중에 있으며, 2010년에 RPS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의 40% 정도가 비용절약 요인인 건물, 교통수단 개선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나머지 60%는 비용수반 감축요인인 화력발전소 탄소포집, 분산된 태양광발전 등이 차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 사용형태, 부문별 감축잠재력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충청남도가 목표로 설정한 2015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량의 1%인 400천TOE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유기성 폐자원 등을 활용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잠재력이 높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와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수요처 개발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원 믹스 차원에서 경제적, 환경적으로 최적의 조합비율을 구성하도록 정책을 발굴한다. 신재생에너지 수요처로서 도내 화력발전 사업자는 의무할당제도(RPS)에 의해 2012년 전력생산량의 3%, 2020년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협약(VA)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관련 충청남도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방안 연구

정 옥 식 | 책임연구원

| 과제종류

기본연구 2009-18

| 공동연구

-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충남 생태계 변화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의 지표 선정과 모니터링 대상지 그리고 지침 등을 해외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정하였다.

영국의 경우 1992년 환경(기후)변화네트워크(ECN)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관련한 장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7년 환경, 식량, 농업사무성에 의해 영국 기후 영향 프로그램(UKCIP)이 설립되었으며 과학연구자, 정책입안자, 이해당사자 등을 위한 기후변화 종합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지표의 경우 2008년 현재 총 57개 지점(육상 : 12개 지점, 하천 : 29개 지점, 호수 : 16개 지점)에서 생태계 전반 뿐 만 아니라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환경에 대해 260개 지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 측정 및 구축하고 있으며 각 지점의 경우 공통된 조사항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장기생태연구가 가장 잘 계획되고 유지되는 곳 중 하나이며 1980년 5개 지역의 장기 생태연구지소로 출발하여 현재 24개 지소로 증가되어 육상, 산림, 하천, 호수, 해안 등 미국 전역의 다양한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02년 기후변화과학기술통합위원회(CCCSTI)를 백악관 산하에 설치하여 기후변화연구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과학 프로그램(CCSP)과 기후변화기술 프로그램(CCTP)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1995년 이후 기후 변화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표의 경우 전국적 공통 지표는 운영하지 않으며 지역적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지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일적 요소보다는 생태계의 유기

적 관계를 규명하는 지표 선정에 우선하고 있다. 특히 적응은 지방이나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호주의 경우 2003년 호주 환경 위원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 생물다양성 행동 계획(2004-2007)을 수립하고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칠 영향과 나아가 행동 계획의 기본 원리를 수립하였다. 이후 2007년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으며 전략과 시행 계획을 적응 능력과 이해의 구축과, 부문과 지역적 취약성 감소의 두 분야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지표의 경우 잠재적 기후변화 지표, 생리적 지표, 현상학적 지표 등 세부적으로 구분되고 특화된 지표를 선정하고 있으며 호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지표가 선정되었다.

일본의 경우 1970년 유네스코 주관의 국제 생물권 연구 프로그램(IBP)사업이 시발점이 되어 대학과 연구소들이 주축이 되어 주요 생태계들을 선별하고 장기생태조사 지점들을 확정하였다. 1995년 일본의 학술심의회는 지구환경과학 연구의 추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 지구환경과학 관련 핵심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1995년 조사연구회가 설치되어 핵심연구기관의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조직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1997-1998년도에는 지구환경과학분야 연구조직에 조사연구비가 책정되었으며 2002년에 종합 지구환경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장기생태 연구(LTER)지소를 Core-sites(16개 지소)와 Associate-sites(28개 지소)를 설치하여 장기 생태연구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사업의 국내 실정의 경우, 첫째 top down 방식으로 인해 지역적 영향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지역적 정책 및 대책 수립이 어렵다. 둘째, 장기생태연구과제로 적절치 못한 지표가 선정된 경우가 많으며 조사지점 및 임의적인 지표선정으로 인해 자료 공유 및 분석에 어려움이 많다. 셋째, 생태계 전반에 관한 변화 파악이 어려우며 특히 현지 외 조사자에 의한 모니터링으로 인해 짧은 기간 내 발생하는 현지 현황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 단위 측정의 어려움(출현 시기)이 많다.

따라서 충남지역에 대한 장기모니터링 사업은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조사자는 현지 내 거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사업의 충남지역에 대한 조사지점은 계룡산과 대호방조제 및 간월호, 그리고 유부도 지역이 적절하며 연구 지표는 식생

동태와 생물계절현상, 곤충상 변화, 조류의 한배산란수와 첫산란일, 이동 및 월동조류 모니터링, 저서무척추동물 생물향, 섭금류 아동 시기 및 개체군 동태 등이다.

그 외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사업의 운영 주체를 결정함과 동시에 지역의 모니터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대학),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운영위원회 구성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이 구축되어야한다. 특히 생물다양성의 경우 농업과 어업 등 식량자원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시급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행동계획에서는 개체수 변화 혹은 이상 징후를 보이는 생물종에 대한 원인을 구명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관련 기관 및 부서 간의 협력과 이해를 신속히 하는 데 필요한 협조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한다.

충청남도 하천유형별 실태분석 및 복원방안

오 혜 정 | 책임연구원

| 과제종류

기본연구 2009-19

| 공동연구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조용현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도훈 석사과정

충청남도에서는 2007년부터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생태적 연계성과 주변의 산림생태계와의 Blue-Green network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천을 선별하여 하천생태축을 설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기구축된 하천생태축의 일부 하천구간에서 자연성 저하, 생태계 단절, 수질악화 등 하천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충청남도 하천생태축 중 문제점이 노출된 구간(복원 우선구간: 하천자연도 평가 4등급 이상)이 위치한 하천들의 관리 및 복원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에 설정된 하천생태축 중 문제가 발견되는 구간이 위치한 하천들 중 유형별(산지형 하천, 평지농촌형 하천, 도시형 하천)로 사례하천 3개를 선정하여 수질·유량 측정, 하천자연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응하는 유형별 하천관리 및 기본적인 복원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하천생태축으로 선정된 기타하천의 관리 및 복원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하천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천이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한 하천생태축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나아가 산림-연안-하천을 잇는 충남 광역생태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에 설정된 하천생태축 중 문제가 발견되는 구간이 위치한 하천들 중 유형별(산지형 하천, 평지농촌형 하천, 도시형 하천)로 사례하천 3개를 선정하여 유형별 하천관리 및 기본적인 복원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형 하천(곡교천), 평지농촌형

하천(청지천), 산지형 하천(용수천)을 연구대상 하천으로 선정하여 현장답사, 수질·유량 측정, 하천자연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하천유형별 하천관리 및 복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은 향후 하천생태축으로 선정된 기타하천의 관리 및 복원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하천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하천의 실태분석을 위해 조사한 수질과 하천자연도와의 결과를 비교를 해 본 결과 수질농도와 하천자연도는 하천 전체 대표치간에는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나, 구간별로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질개선방안과 하천자연도 회복방안은 별도로 실시하여 종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사례하천별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복원방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도시형 하천인 곡교천은 수질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무엇보다 수질개선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곡교천의 수질농도를 살펴보면 천안천 합류전인 상류에서는 BOD₅ 기준 수질농도가 Ib등급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지만 천안천 합류 후 곡교천 중류지역의 BOD₅는 6.5mg/L(IV등급)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와천 합류 후 곡교천 하류지역의 BOD₅는 7.4mg/L(IV등급)로 수질이 더욱 높아지는데 이는 도심을 통과한 수질오염도가 높은 천안천, 매곡천, 온천천이 합류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곡교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천안천, 매곡천, 온천천의 수질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처럼 천안, 아산 도심하천의 수질개선으로 곡교천과 더불어 삼교호의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곡교천은 천안, 아산지역을 통과하면서 일부구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폐수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향후 개발계획이 다수 수립된 지역이므로 장래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자연도 조사는 총 16개 구간을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이 중 3개 구간은 하천자연도 평가결과 4등급으로 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하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곡교천은 제내지, 제외지 모두 사람들의 이용으로 인해 교란을 받고 있었다. 특히 제내지는 상가, 주거지 등으로 녹지가 없었으며, 제외지는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변의 녹지나 산림과의 연결이 단절되는 등 하천이 교란을 받고 있었다. 곡교천의 도시하천 구간은 고수부지를 운동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제방상단은 도로, 제내지는 아파트, 상가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내지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지조성과 토지 수용을 통한 녹지조성이 필요하며, 제방상단의 도로는 가로녹지를 조성하여 하천의 교란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외지는 인공호안과 제방의 인공 구조물을 제거하고 고

수부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녹지와 강변습지 조성과 나무무더기, 돌무더기 등의 서식처를 조성하며, 정화식물을 식재하여 하천의 기능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조성 후에는 사후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복원효과가 미흡한 구간은 요인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복원효과를 높여야 하며, 특히 도시형 하천은 하천주변의 토지수용, 기존 토지이용과의 경합 등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됨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이용과 파손이 우려됨으로 도시형 하천에 맞는 세부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지농촌형 하천인 청지천은 간월호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으로 현재 수질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무엇보다 수질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청지천의 경우 BOD5를 기준으로 상류지역의 경우 IV등급, 하류지역의 경우 VI등급(10mg/L 초과)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 청지천 유역의 경우 유역면적당 오염원이 밀집해있으며(특히, 3개 하천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 청지천의 제1지류에 직접 방류되고 있었다. 또한 유역의 66%가 농지로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었고, 축사 또한 하천변에 위치하는 등 오염원이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따라서 오염원 및 하수처리시설을 분산시키는 방안과 하천의 유량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하천변에 저류지 및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지천은 평지농촌형 하천으로 하천주변 즉, 제내지가 주로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천자연도 조사 및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청지천은 총 5개 조사지점 중 3등급 3개 구간, 4등급 2개 구간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부문별로 보면 수로의 굴곡 유도, 종사주(강변사주, 굴곡부 사주 등)를 유도해 주어야 하고 종단면 부문에서는 횡사주의 유도, 흐름의 다양성을 위해 사주, 거석 등의 형성과 보와 낙차공을 철거하거나 어도를 설치해야 한다. 횡단면 부문에서는 정비로 인해 횡단면 유형이 사다리꼴로 단순한 형태이고 폭 다양성이 '경미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하천 수로 폭의 다양성을 유도해주어야 한다. 하상구조 부문에서는 소, 여울 등을 조성하여 주어야 하고 저수로변 구조 부문은 자연호안이 아닌 구간은 자연호안으로 조성하고 외래식물인 환삼덩굴을 제거하고 하천식생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주변 부문은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동물의 서식처 제공과 하천에 그늘을 제공하고 주변의 교란 요인과 오염원으로부터 완충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축사육지역은 축사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에 정화식물을 식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평지농촌형 하천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보가 많이 있어 하천을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어 철거하거나 어도의 설치 등이 필요

하고 또한 경작지 주변의 녹지는 작물의 수확량에 영향을 주므로 농민들이 녹지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고 농경지와 하천 수변녹지와의 거리를 두어 농작물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경지와 수변녹지와의 사이공간은 산책로, 수변공원 등으로 활용하여 사람들의 이용으로 인한 하천의 피해를 줄이고 사람들에게도 여가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수부지를 농경지로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간은 농경지를 제거하여 녹지를 조성하거나 강변습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조성 후에는 사후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복원효과가 미흡한 구간은 요인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복원효과를 높이고 인근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불신의 해결이 필요하고 주민들을 관리자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과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산지형 하천인 용수천의 경우 BOD5를 기준으로 상·하류 지역 모두 Ib등급의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농촌, 도시하천 보다는 산림과 인접하거나 연결되어 있어 생물다양성과 자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수천은 하천자연도 평가를 위해 총 7개 지점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3등급 5개 구간, 2등급, 4등급이 각 1개 구간씩 조사되었다. 수로발달 부문이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조사되어 강변사주, 굴곡부사주, 수로의 굴곡 등의 유도가 필요하고 하상구조 부문에서 소, 여울, 물웅덩이 등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형 하천은 복원할 부문이 많지 않지만 산림과 하천사이의 구조물, 소규모 주거지, 축사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용수천의 경우 상류지역이 계룡산 국립공원으로 자연성이 높지만 주변에 식당이 많아 산림과의 연결을 제한하고 있어 동물들이 산림과 하천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 펜스나 생태통로를 조성하여 주어야 하고, 또한 산림과 하천이 인접한 경우 하천과 산림사이에 주거지, 기타 구조물 등이 있어 산림과 하천의 연결성을 제한하고 있어 연결성 확보를 위한 연결녹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와 여름철 행락객의 이용 등으로 인해 하천의 자연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 제거를 통해 본래의 하천특성을 되찾고 여름철 행락객의 관리 등을 통해 외부압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조성 후에는 사후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복원효과가 미흡한 구간은 요인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복원효과를 높이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복원효과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가능한 표본수가 적어 각 평가항목간에 상관관계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하천관리에 기준이 되는 BOD5의 농도와 하천자연도간의 상관성이 비교적 떨어지므로 하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하천의 물리적 구조 평가와 수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천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입각하여 하천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천의 물리적 구조 평가와 하천 수질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하천을 종합평가하고 하천의 관리 및 복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 평가(생물학적 지표에 의한 평가)를 추가한다면 생태계의 복원 관점에서 보다 타당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천복원은 대상하천의 유역개념에서 접근하여 복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하천연속성의 개념에서 접근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천복원시 하천생태유량의 확보 및 수질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충남 하천생태축 하천의 복원우선 순위는 하천생태유량 확보와 수질개선이 시급하며, 자연도가 낮은 유역을 1순위로 하고, 하천자연도 평가를 통해 전체 하천 등급이 3등급 이하인 유역을 차후 순위로 복원해야 한다. 단, 물리적 구조의 복원은 구간별로 등급이 낮은 순으로 우선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직구성과 운영방안

권영현 · 이충훈 | 연구위원

| 과제 종류

기본연구 2009-21

| 공동연구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이정수 교수

지역 품격을 높이는 지역 계획 기법의 하나인 공공디자인을 새로운 지역 이미지창출 방안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공공디자인을 도입하기 이전에도 다양한 방법의 지역 계획 기법이 등장하였으나 제대로 된 활용과 성과를 얻기도 전에 새로운 방식의 재도입이 거듭했던 경험을 살려볼 때 공공디자인의 본격적인 도입과 운용에 앞서 그 본질과 활용방안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특히 광역도인 충청남도에서는 광역시나 기초지자체와는 달리 도 전체 이미지의 조율이나 사업 전개에 따른 상호 교감을 이루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사이에서 도의 역할과 충청남도라는 여건과 현황에 적합한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의 방향과 운영의 설정이 요구된다.

첫째로 충청남도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목표와 대상 전개 방안의 수립이다. 흔히 지자체에서의 디자인 분야의 활용을 보게 되면 지역 상징성을 증폭시키기 위하여 독특한 외관, 압도적인 규모, 의미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조형물이나 건축물의 조성과 설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실행되고 있다.

공공디자인에 있어 지역의 특성이나 차별성을 우선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외관의 독특함을 통해 상대와의 차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역사성과 자연스럽게

부합되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품위 있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 모색인 것이다. 여기에 공공디자인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의 주민과의 대화 방법이나 의견 수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충남이 반드시 구사되어야 할 독특한 전략이나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에서 공공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추구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충청남도의 현실, 성격, 수준에 따른 대상의 설정이 따라야 한다.

이미 이 분야의 선도 지역인 대도시가 추구하는 자연으로의 회귀나 조화, 도회지 위주의 공간이나 시설물 외에 농산어촌, 소도시에서 요구되는 대상과 목표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행정 조직과 측면에서 지원 역할을 수행할 민간조직의 구성이 계획 되어야 한다. 도입 초기에는 어느 지자체든 의욕이 앞서 디자인에 관련된 전 분야를 수행하는 큰 규모의 위상 높은 조직을 구상하게 된다. 하지만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도권이 쉽게 이전되기 어려우며 급격하게 확장 하려다 보면 사업기획 및 진행과정에서의 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조 및 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어렵게 된다. 더구나 충청남도는 중앙부처와 기초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각기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분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도입 시기부터 각기의 역할과 기능 분담이 전제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도차원에서는 공공디자인 운용에 대하여 도가 이끌어가야 할 큰 틀에서의 목표와 비전과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시해주며, 포괄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규제 마련으로 기초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아야 한다.

충청남도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실질적인 사업의 수행보다는 조직간, 기관간의 대화와 조정 기능에 비중을 두고 이를 수행하는 보직의 마련도 중요하다. 민간기관의 설치 및 지원은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및 문화 부문을 구분 짓지 말고 통합기능을 갖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유형을 원칙으로 하되,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한 형태의 디자인거점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

셋째로 공공디자인 실효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구속력과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일정한 규칙을 지니며 진행 될 수 있는 사업 전 평가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의 본질인 설치의 최소성 및 통합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행사업의 심의나 자문의 수준을 벗어나 사업의 계획 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규제 차원에서도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와의 위상정립을 분명히 한 후, 관련된 다른 법률과 연계한다면 권고 수준의 느슨한 운용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

넷째로 디자인 사업에 전개에 있어 가장 관건은 소요되는 재정의 확충을 들 수 있다. 현재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연계성 있는 사업구상에는 한계가 있다.

충청남도 주도의 중앙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정보 전달과 제안서 작성 방안 지원 등으로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대처와 동시에 도 자체적인 재정 마련도 병행하여야 한다. 건설사들의 건설사업 대한 디자인, 건축 등 선별적인 관리에 대한 권한 부여하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방식을 통한 민간 컨소시엄의 활용 및 도입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광역시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은 행정 구역의 결속 뿐 아니라 역사 문화적 정서에 공유하게 하며, 이미 형성된 지역 단위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하며 지속적인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제각기의 색깔내기에 급급한 기초지자체의 지역 이미지 조율을 원활히 하기에는 광역도 위치에서 도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계획을 갖추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면 공공디자인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성과에 다가설 수 있다.

기초단체장 의사결정의 특성과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신 진 |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과제 종류

기획연구 2009-01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책임연구원

지난 약 20년간의 지방자치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은 상당한 정도의 자치형태와 정책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결정이 단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시장(단체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중심의 정치체제가 아닌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즉, 실무자나 전문가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결정권이 주어지거나, 이들의 결정이 존중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기초단체도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결정과정의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충청남도 내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구조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단체장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엘리트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가를 분석한다.

충청남도내의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주시와 홍성군을 선정하였다. 지리적 조건, 재정, 인구, 역사 등 다양한 요인을 선정조건으로 고려하였다. 정책결정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으로는 위버(Weaver)의 정책결정과정의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 in Policy Making Process)을 기반으로 정책결정이론을 종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엘리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Ucinet 6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 각 지역에서 단체장이 보여주고 싶은 사업과 중립적 사업, 그리고 주민들

의 갈등유발 사업 등 세 개의 정책사업을 선정하였다. 공주시에서는 공주시 종합터미널이전사업과 5도2촌사업, 그리고 추모공원 설립사업을 선정하였다. 홍성군에서는 갈산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홍주성 복원사업, 그리고 광천장례식장 관련 결정을 선정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주도의 정책결정 구조를 나타냈다. 공주시에서는 단체장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다. 공약사업이든, 중립적 사업이든, 혹은 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이든 관계없이 단체장의 의지와 이니셔티브가 강하면 단체장이 모든 정책결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공원묘지 건립사업과 같이 주민들의 집단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에서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단체장 중심의 정책결정구조를 나타냈다.

홍성군의 경우에는 선출된 단체장이 궐위되어 부군수체제로 군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홍성군의 정책결정과정은 공주시에 비교해볼 때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정된 중요한 사업영역에서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이 협조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였으며, 분산되고, 분권화된 특징을 보여주었다.

단체장이 현직에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주도하에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단체장을 대신하여 특정인이 정책결정을 주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정책의 주무부서의 책임자와 부단체장의 협력적 관계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관료주의적 정책결정방식이 나타났다. 특히 주민들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장례식장 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우선적으로 수용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도 지방자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심각한 갈등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즉, 새로운 정책의 적극적인 구현은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적극적인 의지와 리더십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자치단

체의 공무원 등 관료집단은 묵묵히 추종한다.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시장중심형 정책결정구조를 나타낸다. 시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며 정책결정을 주도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자치단체는 관료조직에 의하여 원활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방자치는 시장중심형이 아니어도 원활하게 운영되었다. 다만, 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집단민원을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단체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단체장에게 자문단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지방의 기초단체장이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구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초단체장에게 지원하여 단체장의 정책결정과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새마을역사관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

우 성 호 | 숙명여자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주임교수

| 과제 종류

기획연구 2009-02

| 공동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장인호 겸임교수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선임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박상철 초빙연구위원

충남새마을 역사관 건립을 위하여 서론(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필요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현황분석(2장)을 통하여 충청남도새마을회와 대상지, 관람객, 연계사업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으며, 3장에서 유사전시관 및 경상북도 새마을역사관, 중앙연수원 새마을 역사관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4장에서는 전시관의 기본설정 및 스토리 전개, 테마, 전시 프로그램, 공간구성계획, 공간별 연출계획 등을 제시하였으며, 5장에서는 전시 운영의 기본구상에 대하여 계획을 제안하였다.

충청남도 새마을역사관은 새마을운동 역사의 재정립을 위한 역사관과 자료관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지역민의 자율적인 기증과 참여를 유도하는 지역공동체 전시관을 지향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관람자와 교감하는 전시관이 되어야 하며, 주변 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전시 주제는 '하면 된다'는 의식개혁으로서 조국근대화를 이끈 새마을 정신을 재발현하여 인류공동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자는 주제를 핵심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새마을운동이 단순히 아주 어려운 시대에 잘살아 보자고 했던 운동이 아니라 그 시대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며 사회가 더불어 잘살아 가자는 이타적 정신이 더 강하며, 과거에 끝난 운동이 아니라 현대에 또 미래에 상황에 맞게 재발현하여 진행되는 운동이라는 점을 중시한다. 나아가서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전파·계승하며, 새로운 지역사회발전 방향을 학습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예절의 고장인 충남의 빛나는 전통으로서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지 않는 '무연묘

별초하기' '선생님 찾아주기' 등 인간적이고 예절을 중시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충청남도 새마을 역사관에서 이런 좋은 전통과 정신이 계승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주제로 설정 한다.

스토리의 전개는 우선 도입부에서 안내 및 사전 영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크게 역사·주역·비전 등의 세 가지 영역과 스토리를 영상실·자료실 등에 의해 전개한다.

역사 부분에서는 '살아있는 역사' 라는 소테마로 조국근대화의 토대가 된 새마을 운동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며, 전시코너는 '그때를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 '새마을 운동이 걸어온 길', '충청남도의 새마을운동' 등의 코너를 계획하며, 사진, 영상, 자료, 유물의 종합연출과 상설전시 스타일로 계획한다. 주역 부분에서는 '역사의 주역들' 이라는 소테마로 우리의 땀과 꿈으로 완성한 새마을 운동을 스토리 전개한다.

시대별 새마을 역사관의 전시 테마는 19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협동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구어낸 새마을 운동에 대한 회고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제2의 새마을 운동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새마을운동의 발전을 기원하는 것을 큰 틀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19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의 태동, 새마을 운동의 추진체계 구축, 새마을운동의 범국민운동화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진다. ② 1980년대에는 민간주도체제로의 전환, 86아시아경기대회·88올림픽을 통한 봉사활동 전개, 민주화과정과 새마을운동, 1980년대 새마을 운동의 추진주체에 대한 내용이 전시된다. ③ 1990년대에는 순수 민간주도 체제의 구축, IMF 외환위기와 새마을운동, 제2의 새마을운동 선언, 1990년대 새마을운동의 추진주체에 대해 다루어진다. ④ 2000년대에는 제2의 새마을운동 본격화, 봉사활동 등 사회적 공익활동의 적극적 추진, 국제 및 통일 새마을운동 추진, 2000년대 새마을운동의 추진주체에 대해 전시된다.

충청남도새마을회의 보유자료 중에서 전시가 가능한 자료 유형으로는 새마을운동 연표, 충청남도 새마을회 연혁, 전국 및 충청남도 새마을 조직(기구) 현황, 역대 충청남도 및 시·군 회장단 명단 및 사진, 역대 새마을운동 서훈자 명단 및 사진, 역대 총회 자료 및 상장, 상패, 기념패 등이 있다.

전시관의 공간구성계획과 동선계획은 기본 컨셉을 길(Road, 道)로 하며, 쉽 없이 걸어온 새마을길을 전시실 바닥과 상부를 넘나들며 연결되는 바닥패턴과 상부구조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다. Zone과 Zone을 구분해 주는 큰 카테고리는 큰 Gate로 표현하고, 새마을운동의 큰 길과 그 길의 변천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동선계획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도입부는 사전 교육의 성격과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람의 시작이므로 강한 인상을 주도록 기획한다. 역사 부분은 가장 중요한 전시 코너의 하나이며 새마을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알기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새마을운동에 대한 경험이 있는 중장년세대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각각 맞춤형 전시코너를 기획한다. 주역 부분은 새마을운동의 선두에서 묵묵히 조국근대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노력한 새마을 운동의 지도자 및 일반인의 삶과 기록물들 기증물들을 전시하며, 휴머니티가 녹아날 수 있도록 기획한다.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재 우리의 세계적 위상, 또한 우리가 담당해야 할 국제적 책무 등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미래의 선각자로서의 자세를 익히고 알게 한다. 영상실·자료실은 보다 쉽게 자료와 정보를 제공 받고, OPEN 형태로 접근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영상실은 선택적 관람이 가능하도록 개인 모니터에 의한 영상 시스템도 기획한다. 기획전시실은 다용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기획한다.

제5장에서는 전시운영 기본구상을 크게 ① 관리계획, ② 소방 및 재해대책 계획, ③ 경비계획, ④ 청소계획, ⑤ 운영계획, ⑥ 홍보계획, ⑦ 사업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관리계획은 충청남도 새마을역사관 시설 및 전시물은 관내에 반입되는 시점부터 유지, 보수 의 필요성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다. 개관 전 전시영상, 음향, 전기, 조명 등 각 부문별로 유지·보수를 위한 도면 및 특기사항, 소모 비품의 확보 및 교체방법, 응급 처치 등이 계획된 관리운영 매뉴얼 작성방법을 제안하였다. 개관 후 각 부서별 담당자는 공사의 비상계획 및 시설관리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본 업무에 임하되, 사고예방을 고려한 작업계획에 의거하여 유지·보수를 위한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계획하여 시행하며, 업무일지 및 점검 카드, 소모품 사용 및 재고현황 파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전시물 및 시스템 등의 유지·보수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여 관람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소방 및 재해대책계획은 재해요인이 될 만한 전시물 및 시설장비에 대해서 정기 점검하여 화재발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종합조정실을 24시간 가동하여 첨단장비를 활용한 화재예방과 조기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사전에 탐방안내소의 모든 직원에게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시키고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자체 소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실제 상황시 피해를 극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고 방지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시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비계획, 물과 각종 시설물·도로·화장실 등의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관람객에게 항상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청소계획, 관람객의 자발적 동기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지적·문화적 관심을 역사관으로 유도하고, 그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추진계획에서는 추진일정과 투자비 산정과 건립 소요비용 사례 분석,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수행조직을 구성하도록 제안하였다.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장 윤 승 | 건양대학교 의공학과 교수

| 과제종류

기획연구 2009-03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성태규 연구위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산업이 향후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으로 언급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충남은 전국에서 고령화비율이 두 번째로 높으며 특히 예로부터 예절의 고장으로 문화적, 산업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고령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향후 발전될 고령친화산업은 지금까지의 고령친화산업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기술기반, 융합형, 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이다. 충남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가능성과 지역맞춤형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충남이 고령친화산업의 세계적인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충남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추진한다.

- 고령친화산업의 법과 제도
-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시장 동향
- 충청남도 지역별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및 융합상품, 서비스의 다양한 사례조사를 통해 유사한 모델을 모아 5가지로 유형화하였다.

① 은퇴자 도시(마을) - Retirement Community

- 국외사례 : 선시티, 행복촌, 연달국제의료건강성, 윌로우밸리

- 국내사례 :

- 공공부문 : 전북 진안군, 충남 서천군, 전남 담양군, 강원 영월군 등
- 민간부문 : 노블카운티, 유당마을, SK그레이스힐, 창녕 써드에이지,
서울시니어스타워(서울, 분당)

② 운영프로그램 - Programs & Contents

- 국외사례 : 매더카페플러스, 셰퍼드센터, 시니어넷, 유우지적, 현창공방
- 국내사례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안양실버포럼

③ 교육과 여행 (에듀 트래블) - Lifelong Learning

- 엘더호스텔, U3A, 클럽투어리즘, 와세다대학 트래블스터디

④ 도농교류, 농촌관광(마케팅)을 활용 농촌 산업화, 활성화

- 파소나O2, 가미카쓰읍 이로도리사업, 와타미농장, 사이조농협 파머스마켓, 팔시스템,
레인보우플랜 나가이시, 사이보쿠 농업공원, 미나미신슈 관광공사, 웨스트4

⑤ 고령친화산업, 노인복지 트렌드 - New Trend in Silver Industry

- 후라테회, 오이타현 사회복지 개호 연수센터, 고토엔, 골드바이올린

다양한 선진국 사례 조사, 분석을 통해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각 지역의 장단점, 특성, 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특화 BI(Brand Identity) 도출 및 확장(Brand Extension), 포지셔닝(Brand Positioning) 전략에 의해 각 지역이 지향하는 BI에 부합하는 선진국의 성공 사례 제시하였다.

선진국의 벤치마킹 모델을 한국 문화와 정서, 지역 상황과 전략에 맞게 모델 변형,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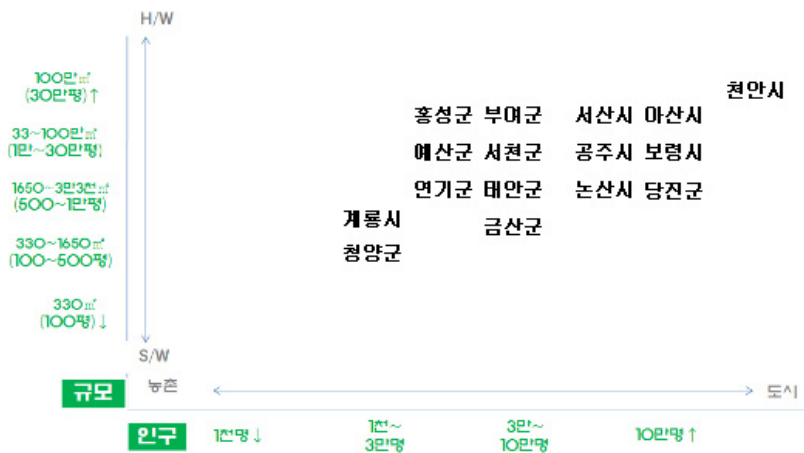
인구 및 규모에 맞춰 국외 사례를 도표로 종합 정리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인구 구분 :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되 시설 자체 이용지수와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인구를 감안하여 10만명 이상, 3만~10만명, 1천~3만명, 1천명 이하로 세분화

- 규모 구분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100만㎡(30만평) 이상, 33만~100백만㎡(1만~30만평), 1,650~3만3천㎡(5백~1만평), 330~1,650㎡(100~500평), 330㎡(100평) 이하로 시설 규모 세분화

유형화 및 선진국 트렌드를 참조하여 은퇴자도시, 프로그램(콘텐츠), 에듀트래블(교육+여행), 농촌활성화·산업화(도농교류, 지역특산물, 문화관광), 산업, 복지 트렌드 등으로 유형화하고 지역별로 적용할 수 있는 예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추진하고자 할 때,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인프라를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하고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각 지역별 특화사업을 제시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그림> 지역별 분포

인구 및 규모, 지역의 인프라를 고려하여 유형화로 제시한 은퇴자도시, 프로그램(콘텐츠), 에듀트래블(교육+여행), 농촌 활성화·산업화(도농교류, 지역특산물, 문화관광), 산업, 복지 트렌드 등의 사업을 선택 추진함으로써 성공가능성을 높힐 수 있다.

지역별 특성화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연계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야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힐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성공 가능성을 보인 Silver Tour는 국내 노인 및 은퇴자의 여행, 건강, 체험, 교육 욕구에 대응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으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며, 보건복지가족부의 R+tour(Respite tour) program 대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전 세계적인 고령화에 따라 노인 및 은퇴자를 위한 독특한 테마 관광 프로그램으로써 해외 관광객 유입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충남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연구

이 용 재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과제종류

기획연구 2009-04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책임연구원

사회적 기업의 성공이 충남도의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들에게 더 없이 좋은 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서비스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내 기업의 납세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 자연스럽게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활성화 될 경우 충남도내 많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통한 육성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사회적 기업의 개념, 인증요건, 지원내용과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둘째, 충남도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타 지역 사회적 기업 활동과의 비교를 통해 충남도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향을 마련한다. 셋째, 충남도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일반 지역주민 등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욕구를 파악한다. 넷째,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안한다.

충남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선, 충남지역 사회적 기업은 5개로 양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둘째, 재정과 우선구매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였다. 셋째, 사회적 일자리(예비 사회적 기업) 창출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해서 향후 사회적 기업의 증가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저조할 가능성이 있었다. 넷째, 가사, 보육, 재활용 사업과 같은 단조로운 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섯째, 지역 내 수요계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 사회적 기업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여섯째, 사회적 기업 추진이 가능한 자활공동체, 시민단체 등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였다. 끝으로, 충남도와 기초자치단체의 뚜렷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없어 정부정책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욕구조사결과 사회적 기업 인증 후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기대치 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불만족 이유는 수익창출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부족, 시장의존성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기업 전환한 후 단점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및 지원미흡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적극적인 홍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탁사업,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구체화, 민관 파트너십 형성, 시설설비 재원지원 확대, 지방조례 제정 및 활성화 방안 논의, 풀(full)사업비 형태의 재정지원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설비비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 지자체의 위탁사업, 상품생산과정에서의 전문기술 지원, 상품의 디자인 및 포장재에 대한 지원, 교육기관의 협조, 공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영역의 확보, 2차 사업 확대를 위한 대부사업 지원, 우선구매 확대, 인력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조직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교육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이해(직원전문교육)와 이에 대한 비용지원, 경영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2년 이내에 사회적 기업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운영자금, 투자자금의 부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업시설 및 설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1:1일 경영지원 등 경영 컨설팅의 세밀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통한 실질적인 시장경쟁력 확보,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인건비 지원, 경영지원에 대한 사전교육, 판로개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지원, 서류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재정의 지속적인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활동에 대한 국민의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전과 충청지역 주민의 사회적 기업 인지도는 53.7%로 조사되고, 깊은 이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보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은 상황이었으며, 추후 사회적 기업의 상품 구매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는 절반정도가 구입할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이유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다른 기업의 제품이 더욱 우수하기 때문, 제품에 신뢰가 가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품·서비스의 질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착한 기업이미지 외에 사회적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현재에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방송홍보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광고의 빈도수나, 시간대가 적절하지 않아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광고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광고 형식의 일반적인 광고가 아닌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획기적인 광고로 컨셉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충남지역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기간에 따라서, 단기목표로 1개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의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중기목표로는 1개의 기초자치단체에 1개의 지역수요자 대상 사회적 기업, 1개의 전 국민 대상 사회적 기업 등 총 2개의 사회적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충남에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즉,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시군에도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지정하며,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영향력 있는 논의기구(가칭 ‘충남 사회적 기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활동분야가 협소한 충남지역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기업 사업의 개발과 육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 자활공동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사회적 기업으로 많이 전환한 경험이 있고, 이들 기관은 사회적 기업에게 필요한 요인들을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고, 그 대상자도 다양하며,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도 천차만별인 만큼, 그 특성에 맞게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개발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충남지역만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사회적 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충남지역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문 인력 채용 등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지원, 사회적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설비비 지원을 위한 ‘충남 사회적 기업 지원 금고’의 마련, 충남지역의 사회적 기업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충남지역 사회적 기업 제품과 서비스 질 개선지원을 위한 제품에 대한 인증지원,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연계, 충남지역 사회적 기업 홍보 및 지역주민의 ‘착한 소비’촉진 지원, 충남도내 1사 1사회적 기업 연계를 위한 민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지원 협의회 구성 등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재산 대부요율 개선방안 -경작용지를 중심으로-

박 광 배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과제 종류

기획연구 2009-05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책임연구원

공유재산 대부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대상자에게 대부된다. 공유재산이 경제력을 갖고 있는 재화라는 측면에서 경쟁입찰방식은 타당한 대부자 선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재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의 수요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희소한 경제재에 가장 높은 효용과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수요자가 재화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희소성은 재화의 물리적인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재화의 양보다 많으면 희소한 재화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유자원도 경제재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공유자원 대부에서도 농경지나 주거용 등으로 사용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방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유재산 대부요율은 원칙이 1천분의 50 이상이며, 주거용 및 경작용, 그리고 기타의 필요에 따라 대부요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요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한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충남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하한을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1천분의 50 이상의 대부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민간 임대료율과 비교하여 높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민간에서 임대되는 건물 등은 임대되는 건물의 시장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 대부요율도 주변의 민간 임대시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수단이 마련되지 않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대부요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면 민

간 건물의 임차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대부요율이 낮은 경우 생산에 관련되는 비용에서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요율을 하한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나아가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대부요율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요구된다.

공유재산 대부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세외수입의 확충을 모색한다는 것은 지방재정 측면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가장 큰 의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확충과정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외수입이 지방세에 비해서 조세저항 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부담되는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유재산 대부를 통해서 얻는 세입과 이자수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징수를 모색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재정 확충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주민부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재산은 효율성 못지않게 형평성과 공익성에 대한 고려도 대부요율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대부하려는 자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민간토지 임차자와 공유재산 임차자 간 비용부담에서 수평적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공유재산 대부료부담이 높다면 현실적으로 대부요율을 통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없다. 최근 공유재산 대부료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조례에서의 감면도 축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요율 인하의 요구가 현실적인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요율 인하는 현실적인 설득력 이외에도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 본청 소유의 공유재산 가운데 대부가능한 일반재산의 대부율은 2007년 기준으로 55.8%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리고 일반재산 평가액 대비 대부료로 부과된 금액은 0.5%에 지나지 않는다. 약 절반에 가까운 공유재산이 대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되지 못한 공유재산은 관리비용이 수반되게 된다. 반면 낮은 대부료로 대부되더라도 대부되어 경작용으로 이용되는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관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유재산 대부요율 인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대부료를 통해서 충당할 수 있는 세외수입 규모도 매우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대부요율 인하를 통하여 농업인들이 직

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비용부담의 감소를 먼저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유재산 대부요율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요율과 비교해도 대부요율 인하의 필요성이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국유재산 대부요율은 주거용에 대해서 1천분의 25 이상의 대부요율을 규정하던 것을 1천분의 20 이상으로 개정하였다. 국유재산을 대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민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또한 경작용 재산의 대부요율도 1천분의 10 이상의 적용을 규정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을 적용한 대부료 한도액 규정은 충남의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충남이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기업이전 유치에서 충남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충북과 강원은 종업원수 30인 이상 또는 원자재의 30% 이상을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공장의 신축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이상의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충남의 종업원수 50인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규정하고 있어 보다 엄격하다. 따라서 충남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도 종업원수 30인 이상 또는 원자재의 30% 이상으로 규정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이 경작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개정이 요구된다. 동 조항의 개정은 두 가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천분의 10 이상을 1천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과 시행령에서는 요율을 규정하지 않고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이다.

공유재산 대부요율이 충남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점과 공유재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령에서 대부요율의 하한을 규정하지 않고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에서 대부요율을 규정하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구조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대부요율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일반재산관리를 중심으로-

이 재 우 |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과제 종류

기획연구 2009-06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책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다기하며 광범위한 공유재산관리업무특성은 관리효율화를 위한 체계적 검토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변상금 부과, 채납처분, 행정대집행 등 불법사항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점유자와의 갈등문제가 빈번하나 관리 자료의 미흡 등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나아가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 활용도 매우 저조하여 일반재산의 재산가액 대비 대부 수입은 매우 미미하고, 이마저도 기존 점유자에 대한 사후계약과 같은 소극적 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효율성 제고 및 활용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의 경우 공유재산현황 및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재산관리체계와 최근의 주요 제도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활용성이 큰 일반재산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현황과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의 전체 공유재산은 2006년 기준 145km²의 면적에 69,221필지 규모로 시도 기준으로 일곱 번째로 많은 규모이며, 총가액 규모는 약 1조5천7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잡종재산(현 일반재산) 15km²의 면적에 8,258필지 규모로 시도 기준으로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이다. 그러나 충남도 도유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분석결과 활용도가 낮은 ‘답’, ‘전’, ‘임야’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답’, ‘전’을 중심으로 전체 일반재산의 약 18.5%만이 대부되고 있어 일반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수입 기여는 미미하다.

관련법과 조례를 통한 제도여건과 실무 공무원 면담조사결과 산재한 공유재산에 대한 주기적인 기초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물건별 자료가 소재지 파악이 가능한 도면과 연계되거나 측량과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는 전산관리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취득, 사용, 보존, 매각 등은 매우 복잡다기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이 소수이며 잦은 부서이동과 전문직무교육 미흡, 대민업무 중복과 주민면식 등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추진과 집행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심의회, 지자체 의회의 심의, 의결 등에도 다양한 업무 외 비효율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유재산관리 문제점 개선 위해서는 직접적 활용이나 대부 등에 의한 수익발생 가능성이 낮은 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과감한 매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자체 보유 일반재산의 활용가치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담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충남도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여건이 마련된 위탁방식 등을 활용한 실질적 실태조사실시가 선행되어야 하며, 속성자료 중심의 공유재산정보를 항공사진, 도시계획, 지적임야도 등과 연계하는 효율적인 공유재산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또한 보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동일 용도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직된 대부요율 체계를 수익성과 시장임대료 수준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져야하며, 공익적 용도의 활용이나 수익성 확보가 예상되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또는 신탁개발 방식 등 최근 법률개정을 통해 도입 가능한 관리방식 접목을 통하여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공유재산업무특성분석을 통하여 위탁관리를 통한 효율성 개선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등 지자체 담당인력과 조직의 전문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충남을 비롯한 지자체 공유재산관리는 효율적 관리와 활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조직, 인프라 등에서 단기간 개선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위탁관리방식의 적절한 활용이 효율적이다. 위탁방식의 경우 인력조직의 탄력적 운용과 전문성 보장이 가능하므로, 공유재산현황에 대한 세부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특

성을 분석하여 위탁방식의 적절한 활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충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위탁관리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제도적 행정적 업무연계가 필요하며, 충남도의 경우 충청남도 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공유재산위탁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개발공사 정관 등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유재산심의회 실질기능보완, 대부료 효율체계 개선, 위탁·신탁관리를 위한 수탁기관선정 등 세부적 보완을 위해 실무적인 검토와 추가연구를 통한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장기적인 관리효율 개선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정보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한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 지식 네트워크 분석

이 만 형 |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과제종류

기획연구 2009-07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책임연구원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홍성호 연구원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경미 연구원

지역발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네트워크가 배태되는 한편, 성장의 근원으로 지식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는 지식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은 대체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거나 새로운 물리적 시설을 유치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왔고, 지식 네트워크를 실체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은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충남의 신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 또한 지식 네트워크에 대한 코디네이팅이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의 주체들이 형성하고 있는 지식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주제는 첫째, 지식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고찰하고, 둘째 지식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의 공간적 특성을 고찰하고, 셋째 지식 네트워크가 어떠한 진화 기제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3가지로 구성한다.

우선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 지식 네트워크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지식 네트워크는 88개의 기관이 111개의 연계로 구성되는 좁은 세상을 이루고 있다. 둘째, 지식 네트워크는 초기 조성단계를 넘어서고 있으나 안정화된 단계로 접어들지는 못한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 셋째, 동태적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크기와 연계가 증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네트워크 성장은 상위 중앙성을 나타내는 몇몇 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다섯째, 산업체 부문 파워기관 가운데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여러 산업군 가운데 전기전자 부문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 지식 네트워크 참여기관의 공간적 연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네트워크에서 수위 공간은 충남으로 나타난 바, 이는 내생적 역량의 바탕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정서적으로 친밀한 대전과 충북 소재기관 사이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셋째, 광역권 단위로 살펴볼 때, 충청권과 수도권의 비중이 전체의 92%에 이르고, 나머지 권역과는 연계가 미미한데 특히 해외권과의 연계는 없는 상태이다. 넷째, 동태적 차원에서 충남 내부 소재기관 사이의 연계가 서울이나 경기 소재기관과의 연계보다 강해지고 있다. 이는 공간적 차원에서의 내생적 역량의 기반이 구축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 지식 네트워크의 진화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네트워크는 차별적 성장에 의한 부익부-빈익빈 메커니즘에 따라 진화하였다. 둘째, 부익부-빈익빈 메커니즘은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고 있다.

지식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좁은 세상 이론과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의 관계가 형성하는 함의는 다음의 2가지이다. 첫째,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에 참여하는 기관 간의 네트워크는 좁은 세상을 이루고 있다. 이는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식의 확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거버넌스 체계에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체 부문 파워기관을 활용할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높을 개연성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남에 소재한 산업체 부문 파워기관은 비전하이테크, 태성전장, 엔디스, 시티이엔지, 새로운 토모티브이다. 둘째,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 분야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기업 가운데 충남에 소재한 기업은 8개 기관이다. 이들 8개 기관 가운데 현재 충남의 자동차부품 산업 지식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달리 말해 지식 네트워크와 산업 네트워크가 별개로 구동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과 충남 소재대학을 위시한 산업체 기관 사이의 교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적 분위기를 높여야 한다.

지식 네트워크의 공간적 연계 측면에서 충남의 내생적 역량 강화를 전제로 둔 상황에서 3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울산이나 경남 그리고 해외권 등 자동차 산업의 역량이 발달되어 있는 기관과의 연계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지리적으로 멀고, 일종의 경쟁 공간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인위적으로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점이 쉬운 여건은 아니지만, 세미나 공동개최 등 부드러운 지식의 공유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도 네트워크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둘째, 지리적으로 인접성과 정성적 친밀감을 기초로 하나의 광역권 단위로 묶여 있는 대전과 충북 소재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대전과 충북 지역에 자동차 부품산업 군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는 하지만, 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유관 산업체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연계정도는 적다고 보여 진다. 충청권의 선도산업인 바이오산업과 New IT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틀 내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이 함께 논의 된다면 여러 부가적인 장점이 생길 수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충남에 소재한 대학들은 수도권의 다양한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 지식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자본의 교류가 있는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에서의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향후 충남지역의 자동차 부품산업 부문 지식 네트워크 육성전략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

지식 네트워크 진화 측면에서 참여기관에 대한 육성은 현 단계는 허브적 위상이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편이 효율적으로 판단한다. 많은 경우의 네트워크가 부익부-빈익빈과 함께 네트워크 전체는 성장하는 패러다임을 보이지만, 부익부-빈익빈 정도가 매우 커지는 경우 과도한 연결의 부담감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성장이 저해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의 네트워크는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네트워크의 성장과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바, 현 단계는 과도한 연결의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파워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강구하는 전략이 절실해 보인다.

기업형 SSM 진출 관련 대·중·소 유통 상생 방안

원 중 문 | 남서울대학교 유통학과 교수

| 과제종류

기획연구 2009-08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책임연구원

대형마트 및 SSM을 중심으로 한 신업태의 출현 및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중소 유통업은 이제 고사상태에 직면하고 있어 기업형 SSM출점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지역상권과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 상권의 환경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형 SSM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확산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방안, 각 지자체에서의 출점 규제 및 분쟁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SSM의 규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됨으로 이에 필요한 상권 및 유통산업의 기초자료, 규제방안 및 기준, 대중소 상생협력방안,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기에 마련할 목적이 있다.

2009년 12월 현재 충남 도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SSM의 출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 위험 크지 않으나 대형마트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가 필요하고 충남의 시·군 대부분이 도·농 통합 형태임으로 대형마트 출점이 어려운 상권의 경우 대형 SSM을 전략적으로 출점시켜 지역상권의 중심축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군 단위 읍내에는 많은 비기업형 대형슈퍼가 출점하고 있는데 기업형이 출점하는 경우 많은 점포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선행적 정책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충남지역 대형마트 수와 면적 증가율은 지난 4년간 연평균 각각 24.2%와 33.4%에 달하고 기업형 SSM의 경우 26.7%와 20.3%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여 대형소매점 출점으로 인한 충남 소재 중소유통 매출감소를 산출하면 약 872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대형마트 미 출점 상권 대비 출점 상권의 세대당 사업체수가 음식료품업의 경우 51%, 세대당 종사자수는 55%에 불과하여 대형마트가 출점함에 따라 중소슈퍼의 사업체수와 자영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대형마트 출점지역은 상권이 발달하여 일자리가 많아지고 세대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경우도 음식료품업을 제외한 모든 소매업에서 미 출점 경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형 SSM 출점지역의 세대당 사업체수는 미 출점지역에 비해 대부분 소매업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음식료품업의 경우는 53%에 불과하고 세대당 종사자 경우는 56%로서 기업형 SSM 출점지역에서 음식료품업 사업체수와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낙후된 상권에서는 기업형 SSM이 진출하여 상권내 앵커스토어의 역할을 함으로 상권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제안1: 대형소매점 신규출점 관련하여 SSM 매장면적을 1,000m² 이상으로 제한하면 SSM 업태의 본래 역할과 기능을 회복 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의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신규출점 입지 선정에 시간이 소요됨으로 출점속도도 완화할 수 있으며, 골목상권에서는 출점할 수 없으므로 소형슈퍼를 일정부분 보호할 수 있다.

정책제안2: 영업시간 관련하여 대형소매점의 24시간 영업은 단순히 경쟁업체간 과다경쟁으로 나타난 현상임으로 과다경쟁 완화, 소비자에게 정당한 서비스 제공, 지역상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영업면적의 규모에 따라 가능한 영업시간을 제시함으로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매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유통업체 선택권을 확장토록 한다.

정책제안3: 영업품목 관련하여 대형소매점은 날개 판매를 지양하고 일정부분 도매기능과 대량구매의 할인기능을 제공토록 가능한 상품을 묶음판매(판매단위 확장) 혹은 덕용판매(대포장)토록 함. 단 다양한 규모의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인 경우 상품등록을 날개로 할 수 밖에 없을시 상품진열을 묶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제안4: 사업조정제도 운영에 관련하여 중기청 주관 사업조정 이전에 지자체에 사전조정 권한을 이양했으나 이해당사자간의 득실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 사전자율조정이 실

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사전조정협의회를 선행적으로 설치를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군의 상권관련 정보수집 및 상권구조 분석이 필요하다.

정책제안5: 지역상권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도의 정책적 대응은 1)시·군별 지역상권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2) 용도 지역안에 진입할 수 있는 상업시설물에 대한 규정을 재조정하여 업태간 공정경쟁을 위한 상권 환경조성을 조성하며 3) 대·중·소 상생을 위한 상생협의회 설치와 더불어 상생협약 도출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안6: 대형소매점 출점으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중소슈퍼마켓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은 1) 기업형 SSM과 경쟁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 구축하고, 2) 기업형 SSM점포와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 점포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충남도가 중부권 도매물류거점(충남, 충북, 대전)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역물류센터의 적정규모는 대지 252,287m², 건물 96,957m² 로 산정되고 브랜드 점포는 약 1,150개를 지원할 수 있다.

미국 주정부의 지역에너지계획 조사연구

왕 영 두 |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센터 교수

| 과제 종류

기획연구 2009-09

| 공동연구

델라웨어대학교 대학원 김영우 연구원

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센터 박용규 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선임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박상철 연구원

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센터 Patrick E. Meyer

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센터 Wei-Ming Chen

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 및 환경정책 센터(CEEP: the center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에서 개발한 지역에너지계획의 구조(framework)를 토대로 지역에너지 계획의 개념과 요소를 분석하였다.

첫째, 통합자원계획(IRP: Integrated Resource Planning)은 전반적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시스템 비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원에 대한 수요 또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조건들을 고려한다(D'Sa, 2005; Ramachandra, 2009). 둘째, Soft Energy Path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강조한다. 셋째, 분산형 발전(distributed generation)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화된 발전시설로 구성된다(Carley, 2009). 넷째, E4는 지속가능성의 네 가지 구성 요소인 에너지(Energy), 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y), 및 형평성(Equity)을 의미한다. 기본개념으로써 E4를 고려한 에너지 구조(framework)는 지속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Wang et al., 1996).

미국의 주에너지 계획과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충남지역의 에너지계획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점에서 제언을 하였다. 에너지계획 구조 (framework)의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풍력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의 중요성을 더해 주고 있다(Bolinger and Wiser, 2009). 풍력발전 기술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풍력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에는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in tariffs)와 환경인증(green certificates) 제도가 있다. 공개매수, 투자 인센티브, 또는 세금 면제 등의 정책수단 역시 몇몇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 또는 환경인증제도와 결합하여 시행하는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EWEA, 2009c).

지열 에너지

많은 국가들이 지열에너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지열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으로 생산세액공제(PTC: the Federal Production Tax Credit)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열발전 프로젝트 역시 PTC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열에너지 프로젝트는 운영 개시 후 첫 10년간 kWh 당 약 2센트의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열 에너지 기술 프로그램(GTP: the Geothermal Technologies Program)은 미국 내 지열 에너지원의 발굴, 접근 및 이용을 위한 혁신적인 지열에너지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에너지

미국에서는 태양에너지 보급을 위해 가정용 태양 에너지 설비(전기 및 온수)의 구매 및 설치에 대해 3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다. 다양한 태양에너지 보급 정책 중 태양 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전형적이고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in tariffs)이다.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와 세제 혜택이 보다 일상적인 유인제도로 채택되고 있다. 10%의 연방정부 세액공제에 추가하여 약 30%의 주정부 세액공제가 가정용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구입 및 설치 시 지원된다.

수소·연료 전지

미국의 경우, FreedomCAR 프로그램이 수소에너지 연구를 위해 1.7억 US 달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소연료전지의 가격을 낮추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2년에 설립된 'Hydrogen and Fuel Cell Demonstration Project (JHFC)'는 다양한 공급 원료로부터의 수소 생산, 수소연료자동차 (FCVs)의 성능, 환경에의 영향, 총 에너지 효율성, 실제 사용 조건에서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FCVs의 대량생산과 보급 확산에 관한 로드맵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JHFC, 2009). 건전하고 균형적인 수소 산업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형 및 고정형 연료전지 시스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보전

발전 및 전송 효율성 향상은 전반적인 시스템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Smith et al., 2002). 특히, 분산발전 (distributed generation)과 발전된 전력망 기술은 공급 측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에너지 효율성의 성공적인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에는 R&D 재정지원, 에너지 효율성 기준 설정, 교육, 경제 주체에 대한 의무 부과와 재정 인센티브 등과 같은 광범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포함된다(Geller and Attali, 2005).

해양에너지

많은 국가들이 해양에너지 R&D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현재 막대한 생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지원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책 수단은 (1) 연구 및 혁신 정책, (2) 시장 발전 정책 (market deployment policies) 및 (3) 시장기반 에너지 정책 등 3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정책 제언

1.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잠재량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장기 재정지원 및 투자 계획 개발이 필요하다.
3.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4. 장기 목표를 보다 상세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5. 에너지 효율 향상이 가장 효과적이며 최우선 정책이어야 하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아가야 한다.

충남 태안반도의 해안선 변화분석과 정책과제

장 동 호 |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과제종류

기획연구 2009-10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책임연구원

공주대학교 지리정보학과 김장수 박사과정

근대 산업혁명이후 인구의 증가, 도시화, 산업화 등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의 개발이 현재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동시에 자원의 개발과는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원의 보존, 환경의 변화 역시 당면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과 육지에 대해 관심이 풍부하고 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해양과 육지의 접경지역인 연안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적 관심부족으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편이다(최철웅 외, 2001). 최근 들어 정확한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너울성 파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원유 유출 사건으로 인간생활 및 생태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해안지역이 주요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해안지역으로, 해안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충남 해안지역은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연생태계(사빈, 간석지, 해양생물 등)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송, 산업시설, 자원, 관광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위적 혹은 자연적인 해안선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인위적인 해안선의 변형은 주변 토지이용에 변화를 주고 이러한 토지이용의 변화는 그곳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태안반도지역은 과거부터 염전개발이나 농경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규모의 간척이 행

해진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안선의 변화가 심한 곳 중 하나이다. 이러한 해안선 변화가 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데이터 구축을 통해 해안선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위적 혹은 자연적 해안선 변화에 따른 연안역의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연안역 관리 및 장기적인 국토관리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제에서는 고지형도와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태안반도 지역의 해안선 모습 및 현황을 파악하고 해안선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도출한 후, 해안선의 변화가 연안역의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도출 및 토지이용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91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태안반도 지역에서의 해안선 변화를 정량적으로 도출
-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10년 주기의 토지피복 변화를 파악
- 갯벌의 토지이용을 분류하고 간척에 따른 갯벌의 토지피복 변화 파악
- 위성영상 분류를 통한 해안선의 침식 및 퇴적양상 파악
- 현지 설문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한 해안선 변화의 원인 및 그 영향이 지역주민에 미친 영향 조사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행된 지형도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위성영상을 가지고, GIS 및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하여 태안반도 지역의 해안선 및 육지면적 변화, 토지이용 변화, 갯벌의 토지이용 변화, 조간대 지역의 퇴적환경 변화 등을 분석하였고, 과거 간척이 이루어졌거나 현재 간척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간척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조사하였다.

GIS 기법을 이용하여 191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지형도를 중첩 분석한 결과, 1910년대 태안반도 해안선의 길이는 811.6km에서 간척에 의해 그 길이가 차차 감소하여 1960년대 540.3km, 1970년대 493.6km, 1980년대 413.8km, 1990년대 392.8km, 2000년대 373.9km로 437.7km가 감소하였고, 반면에 육지면적은 1910년대 349.9km²에서 1960년대 442.2km², 1970년대 452.5km², 1980년

대 500.6km², 1990년대 508.2km², 2000년대 520.7km²로 125.8km²가 증가하였다.

원격탐사 기법인 다중시기 중첩분석을 통하여 1972년에서 2008년까지 약 40년간의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간척된 갯벌의 토지이용 패턴을 살펴본 결과 갯벌→습지→호수(양식장포함) 및 염전→논→나대지로 토지이용이 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위적인 해안선 변화가 토지피복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위성영상의 토지피복 결과를 이용하여 해안선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자연 상태의 현재 태안반도 지역 해변은 전체적으로 후퇴하고 있거나 퇴적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태안반도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던 간척에 의한 영향인지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에 인위적인 항만건설이나 방파제 건설, 도선장 건설 등으로 해안선이 증가한 곳도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태안화력발전소 인근지역과 모항 지역, 안흥 신항만 지역 등이다. 이 세 곳에서는 약 12km의 해안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의 간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1980년대 이전에 간척한 지역은 식량 자급과 자연재해로부터의 탈피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그 이후에 간척하거나 간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지역주민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과거에 비해 현재 농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갯벌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가치보다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석지 또는 갯벌(tidal flat)은 조류에 의하여 운반되는 점토·실트 등의 세립물질이 일반적으로 파랑의 작용을 적게 받는, 물이 잔잔한 해안에 퇴적되어 생기는 평탄한 지형을 가리키는 데, 만조 때에는 침수되나 간조 때에는 대기 중으로 노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갯벌의 발달하기 위해서는 조차가 심하고 거파의 영향이 적으며 해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북해연안, 아마존강 유역, 미국 동부, 캐나다 동부와 함께 세계 5대 갯벌 발달지역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태안반도 지역은 대소의 만입지에 조선시대 이전부터 간척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간척은 태

안반도 지역의 해안선 및 육지면적 뿐만 아니라 연안역의 퇴적환경 및 그곳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패턴에도 영향을 미쳤다.

간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추후 연안역에서의 농지 확보를 위한 토목·건설 공사 시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또한, 인위적인 해안선 변화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나 조석의 흐름과 세기가 연안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타 지역에 인위적으로 해안선의 변화를 가할시 토지이용의 변화나 연안환경변화를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변동 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지역이 연안역이므로 해안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습지보호지역 선정 및 관리방안

나 정 화 |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과제종류

기획연구 2009-11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사공정희 책임연구원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조현주 박사과정

최근 생태적 도시건설이라는 시대 흐름에 기인하여 물 자원 중 종다양도가 높고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물질이 풍부한 습지생태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습지생태계 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초의 국제적 협약은 람사르협약으로 알려져 있다. 람사르협약은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르에서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람사르협약에 가입한 후 우포늪, 신안장도습지, 순천만, 두웅습지 등 총 8곳의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였다. 또한 2008년 7월에는 제 10회 람사르총회가 개최되면서 습지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더욱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동향에 맞추어 충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주요한 습지비오톱들의 현황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들의 생태적 안정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개선 및 보전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생태적 훼손이 심한 습지들에 한해서는 정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각 습지의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습지 생태계의 특성 및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습지의 개념 및 경관생태적 역할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습지관련 법·제도 및 국내·외 사례를 검토해 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습지의 현황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해 보고, 주변의 사회·경제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충

충남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습지의 현황분석을 통해 생태네트워크의 완충지 및 전이지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복원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습지보호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우선 습지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경우 습지 기능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RAM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외에 최근 개발된 비오톱의 보전가치 평가 및 휴양가치 평가 모델을 적용해 보고 상호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에 분포하고 있는 습지비오톱들 중 대표 사례지 2곳을 선정하여 현장정밀 조사를 수행하고, 기 설정된 평가 방법 및 평가모델을 직접 적용해 보았다. 이상과 같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습지의 주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도면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습지생태계의 특성 및 가치를 파악하고, 충남지역에 분포하는 습지의 현황분석 및 생태네트워크 활용방안, 바람직한 습지환경 개선을 위한 습지보호지역 설정 방법, 습지향상 기법 개발, 습지조성 기법 개발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보다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 사례지 적용을 통한 습지 개선방안 및 개선도면을 작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차후 일선에서 개발계획 및 보전계획이 실행되었을 때,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습지의 보전 및 기능향상을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습지 생태계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습지와 관련된 전문 기구를 양성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확대 방안 및 현존 습지의 보호력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습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충청남도 북부권의 공간구조 변화 연구

김 영 옥 | 세종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 과제 종류

기획연구 2009-12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조영재 책임연구원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의 물리적 형태 및 공간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 도시의 기능성 및 경제사회적 조건을 독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일말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최근 충남 북부권지역의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으로 산업과 유통기능 등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대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 10여 년간 급격한 도시화 및 도시규모 확대에 따라 다양한 공간구조 변화를 가져왔다. 향후 수도권과 인접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충남 북부권 지역의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여건의 합리적인 지역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 변화의 과정과 미래 도시공간구조의 예측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본 연구는 도시의 형태적 특성을 가로망의 형태에 따른 접근성의 분석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활용하여 첫째, 지난 10여 년간 활발한 도시성장 및 변화를 겪어온 충청남도 북부지역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둘째, 향후 충청남도 북부지역의 개발 방향의 전망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충남 북부권지역 공간구조 분석

충남 북부권지역의 접근성 Relative Intensity 평균값은 90년대가 0.85로 제일 높았고 아산신

도시가 계획되기 전에는 0.81로 감소했다가, 아산신도시가 계획된 후 0.82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평균값이 낮아지는 이유는 90년대는 북부권의 세 지역 중 천안시의 도시공간구조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화 할수록 천안시는 현재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확대되어가지만 아산시나 당진군의 성장 역시 많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충남 북부권 지역 전체에서 도시공간구조의 중심은 90년대부터 여전히 천안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남 북부권 지역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천안시는 천안역과 동남구청이 있는 구도심이 가장 높은 접근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90년대 북부권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던 천안시 전체의 중심성이 도시공간구조가 확장되고 주변 도시의 발달로 도시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천안시는 여러 단계의 택지개발과 천안시청의 이전 등 신도심이 나타났고, 이에 도시의 중심성이 나누어 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아산시 도심부는 아산신도시가 계획되면서 접근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아산신도시가 천안시의 신도심과 연계되어 계획되면서 천안시 구도심이 가지고 있던 중심성이 조금씩 이동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1) 천안시의 도시공간구조 분석

충청남도 북부권 지역 중 가장 먼저 도시가 성장한 천안시는 지난 10년간인 1990년대와 현재의 도시공간구조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천안시의 도시공간구조 분석결과, 90년대와 현재의 전체 도시공간구조의 접근성 평균의 차이는 별로 없으나 CORENESS 값은 약 36% 정도 감소한다. 이는 기존 시가지 중심부를 경부선 철도가 관통하여 동서간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깨지며, 시청사 이전 및 신시가지 건설에 의해 구도심과 신도심이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심의 통합 및 공간구조적 명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서간의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적 재생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아산시의 도시공간구조 분석

지난 10년간 급속하게 성장기를 겪고 있는 아산시의 도시공간구조를 분석 결과, 천안시와 같이 90년대와 현재의 전체 도시공간구조의 접근성 평균의 차이는 별로 없으나 CORENESS 값은 약 34%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90년대의 공간구조는 격자형으로 가로

망의 연계가 잘되어 있었지만, 새롭게 계획된 도시 공간구조의 연계가 미비하여 CORENESS가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통합 및 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로망의 조정을 통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아산시의 접근성이 높은 상위 10%의 공간을 살펴보면, 90년대와 다르게 접근성이 높은 가로가 연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공간의 연계가 낮은 곳에 상업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측면에서 불리하므로, 가로의 연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3) 당진군의 도시공간구조 분석

도로의 개편 및 산업의 발전을 통해 변화해 온 당진군의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여 도시가 변화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90년대와 현재의 전체 도시공간구조의 접근성 평균은 감소하며 CORENESS 값은 약 10%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90년대의 공간구조와 주변으로 많이 발전된 현재의 공간구조가 당진읍을 중심으로 여전히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어, CORENESS의 감소폭이 천안시나 아산시에 비해 적다. 따라서 당진군청이 있는 당진읍의 중심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생활권과 당진군 중심의 연계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가로와의 연결을 통해 개선한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III. 결론

공간구조적 특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활용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활발한 도시성장을 겪은 충청남도 북부권지역의 공간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1) 급속한 도시성장

충청남도 북부권 지역의 도시공간구조는 지난 10년간 급속한 도시 성장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청남도 북부권 지역의 중심은 천안시 구도심에서 주변 도시가 성장하면서 점차 중심성이 분화되고 있었다. 또한 아산신도시가 계획되면서 아산시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천안시의 신도심과 연계되어 계획되면서 천안시 구도심이 가지고 있던 중심성이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천안시 구도심의 중심성

천안시는 신시가지가 형성되었음에도 여전히 구도심의 접근성 및 중심성이 높았다. 천안시를 가로지르는 철도 및 지형여건에 의해 동·서간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도시공간구조의 단절을 극복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아산시 가로망의 연계성

아산시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가로망의 연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는 상업지역 주변의 접근성이 높은 가로망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온양로는 아산신도시계획과 연계되는 주요 가로로서, 주변 가로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도시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4) 당진군 내에 타 생활권의 연계성

당진군은 당진군 내의 다른 생활권과 당진군의 중심인 당진읍의 연계를 위해서 접근성이 높은 가로와 연결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당진군은 당진읍을 중심으로 주요 시설들이 밀집해있어 접근성이 높은 가로와 생활권 주요가로의 연계를 통한 공간개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IV. 정책시사점

공간구문론(Space Syntax)를 활용하여 충청남도 북부권 지역의 도시공간구조 현황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충청남도 북부권지역의 도시공간구조 계획 시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구조 네트워크 변화에 따른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 정량적 분석에만 치우쳐있고 일반적인 도시공간구조 분석인 인구, 행정구역의 면적, 도시계획사적 분석 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위에서 제시한 시사점을 반영하여 향후 충청남도 북부권지역의 개발계획에 효과적인 도시 공간네트워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한계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개발 사업의 지속가능성 진단을 위한 환경-사회-경제 통합체계 동태모형의 개발과 현장적용 -금강 참계 목장화 사업을 중심으로-

정 회 성 | (사)환경과문명 대표

| 과제 종류

기획연구 2009-13

| 공동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수석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선임연구위원

(사)환경과문명 김혜인 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박상철 연구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산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목장화 사업은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울타리 없는 양식사업을 의미하며, 내수면 및 해면어업의 양식기술 발달과 함께 10여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목장화 사업은 지역의 생태적 자원의 확충과 이를 통한 소득증대를 꾀하는 사업으로서 녹색성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식량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이후로 401km의 금강 수계에서는 청양군과 부여군 일대의 지천 36km수계에서 참계를 대상으로 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의 경우 하구언과 댐, 많은 보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민물종이나 산란시 기수지역으로 이동하는 회유종인 참계의 자연번식이 힘들고, 따라서 지천에서의 참계 목장화 사업은 방류 2년 후 전량 수확을 전제로 한다. 지천에서의 목장화 사업은 이와 같이 전량 수확을 전제로 생태적 복원효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적 복원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통합효과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가 큰 사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강 지천의 참계 목장화 사업을 대상으로, 참계 방류 및 수확활동에 대해 지속가능성 제고효과 - 즉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진단하는 것을 그 목적으

로 한다. 단일 연구에서 이 세 가지 측면의 파급효과를 깊이 있게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제간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시론적인 지속가능발전 모델링을 시도하며, 이를 지천의 목장화 사업에 적용하여 경제성과 다양한 파급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II. 참계 목장화 사업의 생태-경제 모델링

본 보고서의 2장부터 3장에 걸쳐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우선적인 과제인 환경-경제-사회 통합모델링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우선 2장의 1절에서는 참계의 생태적 특징과 인공부화 및 방류기술, 지천에서의 참계 목장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참계 생태계와 관련 활동들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2절에서는 이론적인 모델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참계의 경우 생물자원으로서, 이러한 자원을 대상으로 생태적 구조와 경제적 최적화를 다루는 기존의 환경자원경제 혹은 생물경제·생물수학적 이론 모델을 리뷰하였고, 그 결과 금강 참계의 생태계 및 목장화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수리모델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참계의 방류 및 수확을 감안한 2단계 코호트 모델이 채택되었고, 참계의 서식용량을 감안한 밀도제약과 공식행태(cannibalistic behavior)에 대한 이론적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참계 목장화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공동체의 참계 자산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참계시장의 가격변화를 감안한 최적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모델은 본문에서 생태계 모델인 식 5)와 생태-경제 통합모델인 식 7)로 제시되었다.

III. 참계 목장화 사업과 사회변화에 대한 논의와 모델링

3장에서는 사회변화에 관련된 모델링이 시도되었다. 우선 1절에서는 참계 목장화 사업과 같은 지역개발 사업이 사회변화를 어떻게 야기시키는지, 그 개괄적인 이론으로서 농촌지역의 내발적 활성화와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아울러 2절에서는 참계 목장화 사업과 같은 내발적 지역개발 전략이 지역의 사회자본 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모델링하기 위해, 우선 사회자본의 다양한 정의와 측정방법에 대하여 논하였고, 3절에서는 기존 사회자본 이론이 갖는 개념적 모호함과 적용의 난점 등을 논하면서 내발적 지역개발을 설명하기 위한 사회자본

개념의 재구성의 시도와 아울러 동태적인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참계 목장화 사업과 같은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연결망외에 호혜성 및 신뢰의 동태적 축적과정이 모델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전술한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참계 목장화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사회자본 축적과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인과구조 모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사회자본에 관한 실증적인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사회연결망과 전통적 규범 및 신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호 이익을 우선하는 탈전통적 사회의 호혜성과 이해관계의 보전에 관한 신뢰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축적과정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자본의 개념을 바탕으로 금강 지천에서의 참계 목장화 사업이 사회구성원의 소통과 연대, 상호 교류와 신뢰, 나아가 공동체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이로부터 환경보호와 소득증대, 사회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지속가능발전 구조모형을 제시하였다.

IV. 참계 목장화 사업에 대한 통합모델의 적용과 분석

1) 참계 생태계 모델의 금강 지천으로의 적용

4장에서는 2·3장을 통해 도출된 환경-경제-사회 통합모델을 활용하여 금강 지천의 참계 목장화 사업에 관한 실제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지천 참계 생태계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부터 동적 균형상태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기초로 지천의 생태계를 묘사하는 다양한 파라미터와 입력값을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입력값에 대해 동적 균형상태를 중심으로 시스템의 기본적인 퍼포먼스를 테스트하였고 그 결과 모델과 예측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면서 생태적 복원활동에 관한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2) 목장화 사업의 경제적 효과

2절에서는 금강 지천의 참계 생태계 특성에 맞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기반으로 목장화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 절에서의 생태적 모델에, 기존의 참계 시장가격의 변동에 관한 자료로부터 추정된 가격 신축성 함수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격 변화함수를 통합한 생태-경제 모델을 구축하였

다. 이렇게 구축된 생태경제 통합모델을 중심으로 지천에서의 목장화 사업에 대한 각종 정책 변수를 입력하여 본 사업에 대한 연간 순이익의 변화와 영구적으로 본 사업을 지속시키는 경우 본 사업으로 인한 참게자원의 자산가치를 현재의 시장 이자율 하에서 분석하였다.

금강에서 성계의 최대수확량 770.6천마리를 모두 수확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결과 연간 8.25억원의 방류비용으로 약 2년 후부터 약 7.08억원의 순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본 사업을 영구적으로 지속하는 경우 지천의 참게라는 자산은 현재의 시장이자율(3.5%) 하에서 대략 3~500억원의 자산가치를 지닌 것으로 제시되었다. 본 사업의 B/C Ratio는 대략 1.86으로서 경제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 아울러 경제성 평가에서 화폐단위로 환산되지 못한 다양한 편익을 포함한다면 본 사업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3) 기후온난화와 하천환경 변화를 가정한 분석 : 기회 및 위협요인 분석

3절에서는 현재 금강의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를 전제로 사업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위협요인으로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변화가 공식물의 증가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참게의 공식물이 현재보다 2배 감소하는 경우부터 2배 증가하는 경우까지의 민감도를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공식물이 현재보다 0.5~2배로 변화하는 경우, 치계의 개체수 감소를 통해 대략 2년 후 성계의 개체수는 대략 +20 ~ -30% 정도 변동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연간 목장화 사업의 순이익이 대략 +30 ~ -40% 정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수온상승은 공식물의 증가를 통해 연간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피해가 예측되었다.

아울러 금강 하구언의 어도(fishway) 설치를 통해 하구언으로 인해 자연적 복원이 힘든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기회요인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분석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상태의 복원기능을 0%~100%까지 회복하는 가정에 따른 민감도를 측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어도의 설치 등으로 자연상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 예컨대 자연상태의 번식률이 50% 증가되는 경우 방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최소 연간 4억원 이상의 소득효과와 영구적으로 100억원 정도의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기회-위협요인의 분석은 기온변화가 공식물에 미치는 영향과 어도개설이 생태복원에 미치는 정도 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뒷받침된다면 행태적 예측 외에 정량적으로도 의미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4) 장기적 사회발전을 가정한 분석

4절에서는 참계 목장화 사업이 사회발전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실제적 토대 하에 사회자본의 축적에 의한 수질보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하는지를 실험 예(numerical example)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수질보전의 효과는 유생 생존률의 증가를 통해 개체수가 증가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고, 수확량의 증가를 통해 전체적인 농가소득을 더욱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역시 정량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상황변화를 가정한 행태적 예측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V. 결론: 연구결과의 요약 및 의의, 정책제언 및 추후 연구과제

이상과 같이 참계 목장화사업은 지천을 중심으로 생태적 용량의 확충과 소득증대, 사회적 통합과 지역정체성의 제고라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선행연구들이 단순한 계산식에 근거한 효과분석을 수행한 것에 비해, 보다 이론적으로 정교한 생태계 모델과 사회경제적 정보들을 활용하여 통합적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이러한 모델을 기초로 사업이 포함하는 생태, 사회경제 및 환경적 변화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금강 지천의 참계 생태계에 대한 복원과 유지는 내발적 지역발전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므로, 4대강 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참계 목장화 사업과 같은 내발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을 포괄하여 병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참계의 목장화 사업은 기존의 농약과 비료에 의한 농법을 친환경적으로 개선시키는 비점오염원 관리의 효과를 가져옴으로, 자치단체는 참계 목장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중상류 지역의 주민들에게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수계관리나 지역사회에의 시각을 금강 전체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통해 금강수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를 확산시킨다. 넷째, 참계 목장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증산되는 만큼의 수요창출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가공식품이나 새로운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 주차정책 수립 및 개선방안

박 성 철 | 옥토기술단 이사

| 과제 종류

기획연구 2009-14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조봉운 연구위원

중소도시는 시가지의 규모가 크지 않고, 시가지가 분산적으로 분포하는 도농통합형 도시구조가 대부분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활용한 개인교통수단 대체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대도시 중심의 주차정책에서 충남의 중소도시에 적용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중소도시 특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정책 또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충청남도의 시군별 특성에 적합한 주차정책 수립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첫째,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국내외 주차정책 및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 둘째, 충청남도의 현 주차시설에 대한 현황분석으로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셋째, 현 주차정책에 대한 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의견을 조사하여 방향을 설정하며, 넷째, 선진사례와 현황분석 및 의식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충청남도의 도시특성별 주차정책 수립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주차문제는 법령의 정비만으로는 안 되며,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개선의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차정책은 특별하게 주차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는 있지 않으며, 주차장법에 의해 공급측면에서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설치기준에 대해서 주차단위구획, 주차구획, 전용주차구획, 주차전용건축물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차정책을 구분하여 보면, 공급측면으로 8가지 정책과 수요측면에서 6가지 정책과 운영측면에 2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주차관련 정책

구분	주차정책
1. 공급	1.1 노외·노상주차장 : 부족한 주차수요를 공지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교통량이 적은 도로를 활용하는 방식
	1.2 주차빌딩: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도심에 입체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
	1.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주차수요에 적합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수요를 최대한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
	1.4 사설주차장 지원 : 주차장을 민간이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을 마련
	1.5 공공시설의 주차장 개방 : 공공시설의 주차공간을 개방하여 공공시설운영시간대 이외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
	1.6 차고지 증명제 : 차량구입시 차고지를 지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
	1.7 내집안 주차장 갖기 : 단독주택지 등 주차공간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내집안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방식
	1.8 주차시설 공동이용 : 주차수요시간대가 다른 시설의 주차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
2. 수요	2.1 차량이용제한 : 10부제, 요일제, 격일제 등 차량번호에 따라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주차수요를 감소시키는 방식
	2.2 주차요금 차별화 :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등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
	2.3 거주자우선주차제 : 외부차량의 주차를 억제하기 위해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공간을 배정하는 방식
	2.4 시간제주차허용 : 시간대별로 공급이 부족한 경우 일부시간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방식
	2.5 주차시간제한제 : 주로 상업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일정시간동안 주차를 허용하고 장시간주차를 억제함으로써 많은 이용객을 위한 방식
	2.6 대중교통수단지원 : 대중교통수단이용을 활성화하여 주차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식
3. 운영	3.1 불법주차단속 : 주차제한구역에 주차하거나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등 적법한 주차 이외의 차량을 단속
	3.2 주차안내시스템 : 주차장, 가능대수 등을 안내하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충청남도는 시·군은 최근 더욱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일정권역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최근 차량증가가 인구에 비해 농산어촌지역이 더욱 1인당 차량대수가 높게 분석되고 있는데, 차량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감소하는 그 이유가 있다. 이와 더불어 주차장 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광객수는 충청남도 전체 6.2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주차문제의 수준은 중간정도로 일부 시·군에서는 매우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주로 중심상점가 및 재래시장 주변이 가장 문제지역이고, 계절별로는 하절기, 요일별로는 주말, 시간대로는 오후 및 저녁(밤)까지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운전자의 의식이 부족하고, 주차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향후 주차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시·군에서는 주차에 대한 공급계획을 갖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으로 주로 문제지역인 상점가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주택가 및 환승시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군에서는 공급측면에서는 노외 및 노상주차장, 공공시설 주차장개방 및 부설주차장 기준강화 등의 정책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측면에서는 차량이용제한과 대중교통지원 및 주차시간제한 등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운영측면에서는 불법주차단속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정책에서 현재 가장 많이 추진되고 있는 주차장공급과 공공시설주차장개방에 대한 효과가 크며, 차량이용제한(요일제 등)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에 힘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중 공급측면의 정책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 등의 운영관리 및 수요관리가 뒤를 이었다.

시·군에서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은 주민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내집안주차장갯기, 주차시설공동이용 등이 가장 많으며, 기존 사설주차장의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및 주차빌딩 등 공급확대정책이 뒤를 이었다. 수요측면에서는 현재 추진하는 내용을 보다 확대하고, 운영측면에서도 단속중심이다.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중 효과가 큰 것으로 주차시설의 시간대별 공동이용정책이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도입과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 중 주차공급이 아직까지는 더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적으로 추진하되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주차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는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식 및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도입과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대부분 공급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문제지역에 대한 단속 등에 한정된 인원으로 대응하기가 힘든 현실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노력과 주민의 협력에 의한 사업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주차장은 개인의 교통수단과 통행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자 부담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의식이 무엇보다 정립 및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시범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문제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공급의 절대적인 부족에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합리적인 공급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의 충청남도 16개 시군으로 각 시군별 특징에 따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주차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실무자를 통해 직접 듣고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주차정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각 시군별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 이미지 실태조사 연구

지 성 구 | 한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과제 종류

기획연구 2009-15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박철희 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소이미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장소마케팅을 전개한다면 충청남도 내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관광문화축제와 문화기반시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로서 충청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조사가 상대적으로 늦어진 이미지실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고, 전반적 이미지 측면에서 조속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충남 7대 추진전략 이미지를 충남도민과 외부인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었다. 충청남도 주민의 정체성 인식과 외부인들의 충청남도 인식간의 차이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도정 비전으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슬로건, 마스코트, 심벌 등을 개발하여 홍보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충남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확보 및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위해서는 시급히 지역이미지 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의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기초로 하여 이미지 전략 수립과 관리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충청남도 이미지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충청남도의 이미지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충청남도 이미지 전략 수립에 기초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 지역이미지 실태분석을 통한 자기지역 탐색과 평가단계 및 자기변혁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이미지 변모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추출하고자 한다. 충남 이미지 변화의 노력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방안

수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II. 지역이미지 문헌검토

본 연구에서 충청남도의 지역이미지란 ‘충남에 대한 현 거주민과 타시도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심상’으로 정의하고, 7대 전략이미지와, 형용사형 지역이미지 등으로 측정한다.

양기근(2007)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상남도 이미지 분석을 경남과 수도권의 인식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조지현(2006)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경북지역 캐릭터의 브랜드와 위 강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용재(2006)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경상북도 장소이미지 도출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최영재(2007)는 강원발전연구원의 강원도 이미지 브랜드 구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강원 브랜드 자산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전우영(2007)의 강원도의 고정관념 연구는 부모 고향이 강원도가 아닌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원도의 상징어로 동막골과 사투리, 소, 산, 바다, 감자, 옥수수, 추운 날씨와 눈, 군대와 탄광촌 등이 서울 소재 대학생들의 머리에 떠오른 것으로 보고했다. 민인철(2008)은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재광외국인이 바라본 광주이미지 조사 및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 전국적인 할당표본에 의한 충청도민과 지역의 시민간의 비교
- 1,000명의 광범위한 샘플링으로 일반화가능성 확보
- 이미지 설문의 정교화와 타당화
- 이미지 관리에 관한 전략적 지침 제공

III. 연구결과

1,000명을 지역, 성별로 할당하여 온라인으로 수집한 결과, 남녀의 비율은 50%로 동일하고, 연령별로는 골고루 분포되었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70% 이상을 초과하였고, 직업은 사무직이 25.5%, 전문직과 주부가 각각 15.1%, 학생이 14.9%를 차지하였다. 650명으로 축약한 자료에서도 인구통계적 특성은 이와 유사하였다.

1) 충남의 인지도 분석 요약

한국의 대표적 시/도에 대해 최초 상기도(비보조 인지)를 조사한 결과, 1,000명 응답자들은 서울특별시(38.4%), 부산광역시(13.7%), 충남(9.5%) 순으로 응답하였다. 650명의 응답자들은 서울특별시(38.5%), 부산광역시(14.3%) 순으로 답하였고, 충남(5.8%)은 6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대표적 시/도에 대해 보조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1,000명 응답자들은 서울특별시(77.1%), 충남(6.5%), 부산광역시(4.1%) 순으로 응답하였다. 650명의 응답자들은 서울특별시(76.3%), 부산광역시(5.1%) 순으로 답하였고, 충남(3.4%)은 3위를 차지하였다.

전반적 인지도를 충남 상세인지도와 최근 전반적 인지도로 분석한 결과, 상세 인지도의 평균은 3.21, 전반 인지도는 2.99로 보통 수준 정도였다.

충남에 대한 인지도를 도청소재지와 도지사로 나누어 질의한 결과, 현재 도청 소재지인 대전광역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68.8%로 상당히 높았으나, 새로운 도청 소재지인 예산군에 대하여 33.3%만이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2009년 11월) 이완구 도지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45.7%로 과반에 가까웠으나, 모르거나 오답자가 약 5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충남의 선호도 분석 요약

한국의 시/도 중 가장 선호하는 시도를 질의한 결과, 1,000명 응답자들의 22.2%가 서울특별시를 가장 선호하였고, 16.2%가 충남을 다음으로 선호하였다. 충남을 좋아하는 162명의 이유는 ①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32.7%), ② 가장 살기 좋은 곳이므로(29.6%), ③ 현재 살고 있는 곳이므로(28.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650명 응답자들은 서울특별시(21.4%), 부산광역시(13.4%) 순으로 선호하였고, 충남은 7.5%로 5위를 차지하였다.

충남에 대한 전반적 선호도의 평균은 3.56(SD=0.69)으로 보통 수준 이상이었고, 응답자의 52.4%는 충남을 좋아하였다. 충남을 좋아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①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26.0%), ② 현재 살고 있는 곳이므로(17.6%), ③ 문화/관광 등이 발달한 곳이므로(15.5%), ④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12.0%)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을 싫어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① 살기 불편한 곳이므로(33.3%), ② 생활환경 및 복지 등이 좋지 않으므로(16.7%), ③ 시설/교통인

프라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13.3%) 순으로 나타났다.

3) 충남의 이미지 분석 요약

(1) 시/도 독특한 이미지 분석

한국의 여러 광역시 혹은 도 중 가장 독특한 시/도를 조사한 결과, 1,000명 응답자들의 43.2%가 제주도를 강력하게 떠올렸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12.2%)를 떠올렸다. 응답자들의 6.0%가 충남을 다섯 번째로 독특한 시/도라고 하였다. 6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주도 (43.1%), 부산광역시(12.9%) 순으로 나타났고, 충남(4.9%)은 다섯 번째로 독특한 시/도로 나타났다.

(2) 충남의 자유연상 이미지 분석

충청남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름을 자유 기술식으로 조사한 결과, 모르거나 없는 43명을 제외한 전체 957명이 긍정적 이미지(30.5%), 부정적 이미지(18.8%), 명사형(49.2%), 그리고 사람이름(1.5%)을 언급하였다. 명사형 이미지는 471명(49.22%)이 평가하였고, 지역명(27.48%), 관광지/명소(9.30%), 등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이미지는 285명(29.78%)이 평가하였고, 양반/충절이미지(12.64%), 문화/관광/자연 이미지(5.85%), 여유, 순수이미지(4.28%), 성장/발전이미지 (3.13%) 등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이미지는 180명(18.81%)이 평가하였고, 시골/사투리 이미지(12.02%), 느림 이미지(5.33%), 고집/보수이미지(1.78%) 등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형용사를 자유 기술식으로 조사한 결과, 모르거나 없는 225명을 제외한 전체 775명이 긍정적 이미지(55.61%)와 부정적 이미지(44.39%)를 언급하였다. 긍정이미지가 부정이미지보다 10%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긍정적 이미지(55.61%)는 평화롭고 여유있는 인심이미지(24.13%), 아름다운 자연이미지(14.97%), 조용하고 성실한 이미지 (10.06%) 순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이미지(44.39%)는 느린 이미지(33.16%), 낙후된 이미지 (5.2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단일 이미지로 느린 이미지가 33%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색채를 자유 기술식으로 조사한 결과, 모르거나 없는 62명을 제외한 전체 938명이 유채색 이미지를 93.5% 응답하였고, 무채색 이미지를 6.4% 응답하였다. 유채색 이미지(93.5%)는 녹색 계열이 46.7%, 파란색 계열이 22.9%로 녹색과 파란색이 충남을

대표하는 색으로 볼 수 있다.

충청남도 기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유 기술식으로 조사한 결과, 모르거나(30.2%) 없는(19.8%) 500명을 제외한 전체 500명이 긍정적 이미지(14.8%), 부정적 이미지(2.2%), 기업이름(69.6%), 명사형(12.4%), 그리고 사람이름(1.0%)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기업 이름을 먼저 떠올렸으며, 삼성전자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남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유 기술식으로 조사한 결과, 모르거나(4.0%) 없는(5.5%) 95명을 제외한 전체 905명은 긍정적 이미지(40.4%), 부정적 이미지(48.5%), 이름(7.5%), 명사형(3.6%)을 언급하였다. 긍정이미지로는 순수하고 여유로우며 부드러운 이미지(20.4%), 양반과 신사이미지(8.3%)가 많았으나, 부정이미지는 48.5%로 상당히 높고, 특히 느리고 답답한 이미지가 24.1%나 차지하여 향후 이미지 개선의 주안점이 될 수 있다.

‘충청남도 여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유 기술식으로 조사한 결과, 모르거나(6.9%) 없는(10.1%) 170명을 제외한 전체 830명이 긍정적 이미지(61.5%), 부정적 이미지(27.5%), 명사형(5.6%), 그리고 사람이름(5.4%)을 언급하였다. 전체적으로 온순(11.7%), 순박(10.6%) 등 온순하고 순박한 이미지가 44%를 차지하여 압도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출신하면 떠오르는 유명인을 자유 기술식으로 조사한 결과, 모르거나 없는 270명을 제외한 전체 730명은 연예인(35.9%), 정치인(27.1%), 운동선수(22.3%), 위인(14.7%) 순으로 언급하였다. 범주별로 연예인을 먼저 떠올렸으며, 전체적으로는 박찬호(16.7%), 김종필(13.3%), 남희석(8.9%) 순으로 가장 먼저 떠올렸다.

충청남도의 미래이미지를 자유 기술식으로 조사한 결과, 모르거나 없는 92명을 제외한 전체 908명이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이미지(32.9%), 살기 좋은 이미지(20.9%), 자연친화적 이미지(18.7%), 중심, 교통의 요충지 이미지(14.2%), 그리고 관광문화이미지(11.1%)를 언급하였다.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이미지(32.9%)는 발전적인 충남, 활기차고 역동적인 이미지, 과학도시, 혁신도시, 미래지향적 도시,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이미지, 진취적이고 활력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많았고, 살기 좋은 이미지(20.9%)로는 살기 좋은 명품 충남, 편안함, 포근함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3) 충청남도의 7대 전략 이미지 분석

충청남도의 7대 전략 이미지를 도시 및 농어촌 정주환경, 경제/산업환경, 문화 및 관광자원, 시설/교통인프라, 생활환경 및 복지, 자연환경친화, 교육/인재육성 이미지로 측정하였다.

개별 이미지 사항별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7문항의 평균은 2.86으로 낮았고, 그 가운데 생활환경 및 복지 인지도(2.71)가 가장 낮았고, 문화 및 관광자원 인지도(3.06)는 상대적으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7대 전략 이미지 독특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92로 보통 이하의 독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7개 항목별로 보면 생활환경 및 복지(2.71) 이미지가 가장 낮은 독특성을 보이며, 문화 및 관광자원 독특성(3.1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대 전략이미지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선호도의 전체 평균은 3.11로 보통보다 조금 높았으며, 자연환경 선호도가 3.38로 가장 높았으나, 경제/산업환경 선호도는 2.94로 조금 낮았다. 보통보다 약간 높은 선호도를 보인 7대 전략이미지는 자연환경, 문화/관광시설, 도시/농어촌 정주환경, 시설/교통인프라 순으로 나타났고, 보통보다 약간 낮은 선호도를 보인 7대 전략이미지는 경제/산업환경, 생활환경 및 복지, 교육여건/ 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 7대 전략 이미지를 개별적으로 4문항씩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충남 7대 전략 이미지의 전체 평균은 3.14로 보통 수준 이상이었다. 문화/관광환경 이미지의 평균은 3.53으로 가장 높았고, 자연환경친화(3.39), 경제/산업환경(3.17), 도시 및 농어촌 정주환경(3.11)순으로 높았으나, 생활복지환경과 교육/인재육성, 시설편리성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2.9대 머물렀다.

충남도민들이 충남의 농어촌 환경을 타시도민들에 비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고, 특히 농어촌 활력은 2.85로 보통 수준 이하로 지각하였다. 경제/산업환경 이미지에서 시장잠재력, 사회간접자본, 일자리는 충남도민과 타 시도민간 차이가 없었으나, 친기업환경 이미지는 충남도민이 타시도민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고, 일자리 이미지(평균=2.86)는 다른 환경이미지에 비해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문화 및 관광자원 이미지의 평균은 높았으나, 타시도민이 충남도민에 비해 문화 및 관광자원 이미지를 조금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체험이나 홍보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시설/교통인프라 이미지의 평균은 낮았으며, 충남도민이 타시도민에 비해 시설/교통인프라 이미지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설적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

다. 생활환경 및 복지 이미지의 평균은 낮았으며, 충남도민이 타시도민에 비해 생활환경 및 복지 이미지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현재의 생활환경 및 복지의 미진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연환경친화 이미지의 평균은 보통 이상이며, 충남도민이 타시도민에 비해 자연환경친화 이미지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현재의 자연환경친화의 미진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교육/인재육성 이미지의 평균은 보통 이하이며, 충남도민이 타시도민에 비해 교육/인재육성 이미지를 낮게 평가한 것은 현재의 교육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충남의 지역이미지를 정주환경 안정성, 지역경제 역동성, 문화 전통성, 생활/복지 독특성, 자연환경 시각성, 시설/교통 쾌적성, 교육 충실성으로 구분하였고, 이는 7대 전략이미지를 형용사형으로 어의차이척도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지역이미지의 전체 평균은 3.17로 보통 수준 이상이었다. 정주환경 안정성이미지의 평균은 3.32로 가장 높았고, 생활복지 독특성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2.89대 머물렀다.

정주환경 안정성이미지는 충남도민과 타 시도민간 차이가 없었다. 지역경제 역동성 이미지는 충남도민과 타 시도민간 차이가 없었으나, 동적인 이미지는 충남도민이 타시도민에 비해 오히려 높게 평가하였다. 문화 전통성 이미지는 충남도민과 타 시도민간 차이가 없었으나, 보통 수준 이상으로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생활/복지 독특성 이미지는 충남도민과 타 시도민간 차이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이하로, 자극적이 않으며, 변화하지 않고, 약간 평범하며, 약간 단조로운 이미지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환경 시각성 이미지는 충남도민과 타 시도민간 차이가 있었으며, 충남도민이 타시도민에 비해 오히려 낮게 평가하였다. 시설/교통 쾌적성 이미지는 충남도민과 타 시도민간 차이가 있었으며, 충남도민이 타시도민에 비해 오히려 낮게 평가하였다. 교육 충실성 이미지는 충남도민과 타 시도민간 차이가 있었으며, 충남도민이 타시도민에 비해 오히려 낮게 평가하였다. 결국, 자연환경 시각성, 시설/교통 쾌적성, 교육 충실성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충남도민들이 더 낮게 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충남 7대 전략 이미지 우수성의 전체 평균은 3.05로 보통 수준이었다. 자연환경 친화 우수성의 평균은 3.31로 가장 높았고, 생활복지 우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2.87대 머물렀다. 문화 및 관광 자원 우수성은 충남도민이 타시도민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으나, 다른 6개의 7대 전략이

미지 우수성은 평균차이가 없었다.

(4) 충남의 슬로건과 마스코트 이미지 적합성 분석

충남의 슬로건과 마스코트가 충남 이미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충남 슬로건의 충남 이미지 적합성의 전체 평균은 3.17로 보통 수준이었고, 충남도민이 타시도민에 비해 보다 적합하다고 하였다. 충남 마스코트의 충남 이미지 적합성의 전체 평균은 3.02로 보통 수준이었고 지역간 차이는 없었다.

4) 충남에 대한 행동의도 분석 요약

충남에 대한 행동의도의 전체 평균은 3.27로 보통보다 조금 높았고, 문화유적지 여행의도(3.5)와 농촌체험의도(3.5)가 높은 반면 거주의도(3.1)와 대학진학의도(2.9)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향후 충남에 대한 거주의도를 예와 아니오 형태로 질문한 결과, 거주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1.4%, 없다는 사람이 48.6%로 나타났다. 이 중 충남도민의 89%가 거주의도가 있으며, 타시도민의 35%가 거주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충남에 대한 거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7대 전략 7개 항목의 평균은 3.91이었고, 시설/교통인프라(4.06)가 가장 중요하였고, 생활환경 및 복지(4.04), 교육여건/ 시설(3.95) 순으로 중요하였다. 상대적으로 도시/농어촌 정주환경(3.7)의 중요성은 낮았다.

향후 충남에 대한 관광의도를 예와 아니오로 형태로 질문한 결과, 관광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6%, 없다는 사람이 24%로 나타났다. 이 중 충남도민의 89%가 관광의도가 있으며, 타시도민의 71%가 관광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충남에 대한 취업과 진학의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남도민이 취업과 진학 모두에서 월등히 높았다. 따라서 타시도민의 경우 취업과 진학 의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5) 충남의 발전가능성 분석 요약

충남의 7대 전략 핵심 사안별로 10년전과 비교한 발전정도를 조사한 결과, 자연환경친화(3.40), 시설/교통인프라(3.37), 문화 및 관광자원(3.36) 순으로 많이 발전하였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경제/산업환경(3.23), 교육/인재육성(3.21), 도시 및 농어촌 정주환경(3.20), 생활환경 및

복지(3.16) 순으로 상대적으로 덜 발전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충남의 전반적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3.64)하였다. 이는 평균차이분석을 통해 검증해본 결과, 타시도민과 충남도민 모두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IV. 정책제언

1) 충청남도 이미지 관리전략의 기초 분석 자료

충청남도 이미지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충청남도 이미지가 전 국민에게 어떠한 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충청남도 이미지 전략 수립에 기초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인지도는 타시도민들이 낮으므로 체계적 홍보전략을 통해 현재의 슬로건과 도정 핵심전략 등을 충실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2) 충청남도 이미지 관리전략의 수립

(1) 충남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 개선

충남의 상세 인지도와 전반 인지도는 보통 수준으로, 특히 타 시도민의 인지도가 낮았다. 지역의 현황과 소식에 지역민이 관심이 높고, 타 지역민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것은 인지사정이지만, 또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이다. 충남도의 발전적인 모습과 뉴스거리를 지역내외 신문과 언론,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버즈마케팅(Buzz Marketing)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계적으로 계획된 마케팅 PR(MPR: Marketing Public Relations)을 전개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입소문과 MPR을 통하여 저렴한 홍보비용 대비 인지도 개선과 선호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체계적 홍보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채용이나 전문적인 아웃소싱을 통해 장기적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긍정적 이미지의 강화와 부정적 이미지의 약화

충남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요약하면, 이름으로는 양반/충절이미지, 형용사형으로 평화롭고 여유있는 인심, 아름다운 자연이미지, 남성으로는 순수하고 여유로우며 부드러운 이미지

와 양반과 신사이미지, 여성으로는 온순하고 순박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온순하며 넉넉한 인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곳이라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지, 유적지, 농산어촌의 각종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버즈마케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체계적으로 계획된 MPR을 통하여 충남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충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요약하면, 이름으로는 시골/사투리 이미지, 형용사형으로 느린 이미지, 남성으로는 느리고 답답한 이미지, 여성으로는 느리고 무뚝뚝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느리고 답답한 사람들이 사는 시골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단일 이미지로 느린 이미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이나 주변 인물 등을 통해 형성된 느린 이미지는 자칫 게으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이미지로도 작용할 수 있다. 느린 이미지야말로 다중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여유와 느긋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함과 게으름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보 전략에서 이 느낌의 미학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는 여유와 평화로움, 느긋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적절한 프레임의 제시를 통해 충남이 가지는 여유와 평화로움, 넉넉한 인심을 지닌 아름다운 곳으로의 장소마케팅이 필요하다.

(3) 미래지향 이미지

충남에 대한 미래 이미지를 요약하면,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이미지와 살기 좋은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발전적인 미래 모습에 대한 비전을 전국적인 방송망을 통해 충남이미지 광고를 계획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4) 7대 도정 핵심 이미지의 홍보 및 강화

지역이미지 변화의 노력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민이 오히려 이미지가 나쁜 분야가 많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문화 및 관광자원 이미지, 시설/교통인프라 이미지, 자연환경친화 이미지, 교육/인재육성 이미지 등에서 충남도민이 타시도민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농촌관광 수요변화와 대응구조

박 희 석 | 남서울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Ⅰ 과제종류

기획연구 2009-16

Ⅱ 공동연구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상영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선임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박상철 초빙연구위원

충남의 경우 지역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할 대전-당진,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과학적인 수요예측과 농촌관광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이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 고속도로 개통으로 제고된 지역접근성을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충남 농촌관광의 경우 관광객을 유도할 거점관광지의 부족과 관광 전략의 부족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구호나 상상이 아닌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분석을 통하여 신설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hub & spoke' 개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광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를 이룩하여 충남의 농촌관광 인프라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충남 농촌관광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활용방안의 전제조건인 소비자 수요 조사 및 예측의 부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농촌관광 수요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유형별 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며, 각 유형별 공익기능자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간 구조가중치(경로계수) 차이에 대한 추론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충남지역의 농촌관광 방문자와 기타지역의 농촌관광 방문자 그리고 농촌관광 비참가자 그룹간에서 요인간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그룹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즉 '충남 농촌관광에 대한 참여동기'가 '학습교육형'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에서 농촌관광 비참여자들이 충남지역 농촌관광 참여자와 기타 지역 농촌관광 참여자들보다 해당 구조

가중치(경로계수)의 값이 각각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가자간의 농촌관광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외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한국인이 국내여행의 하나인 농촌관광에 있어서 자녀들과 함께 농가민박을 체험하거나 관광농원 방문 또는 자연학습 등을 통해서 교육목적으로 주로 방문할 것이고 또한 구전으로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곳을 더욱 방문할 것이고, 이러한 '학습교육을 더욱 추구하는 집단'은 교육목적용으로 주로 농촌을 방문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충남 농촌관광은 개선되는 입지적 특성을 이용한 교두보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 인프라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강한 성장욕구를 원동력으로 삼아 자연친화적인 교육형 농촌관광 구축을 통하여 농촌관광 확충의 기회 및 경쟁우위 확보를 시도하여야 한다. 특히 신설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의 증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기반 강화의 정부시책 등을 잘 활용하여 충남 농촌관광만의 특색이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충남 농촌관광의 경우 신설 고속도로와 같은 접근성의 증대요인을 잘 활용하여 온 가족이 농가민박을 방문하여 체험하거나 관광농원 방문 또는 자연학습 등을 통한 교육목적으로 주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고, 전체지역을 네트워크형으로 묶어 교육목적용으로 농촌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향후 도농교류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을 통하여 고객유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야 한다. 도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의 구매, 자연체험, 휴양 등 다양한 목적으로 농촌에 관심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평화로운 자연의 풍요로움, 농촌주민들과의 따뜻한 인정 등을 어떻게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는가에 달려 있다. 농촌관광에서는 막대한 홍보비용을 들여 늘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민들과 자매결연, 회원제 사업, 이벤트 개최 등 '인연 만들기'를 통해 재방문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충남 농촌관광은 추진할 만한 내부역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유치를 위하여 외부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들은 대부분 마케팅, 경영, 회계, 시설계획 등 핵심역량이 부족하므로 사업자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충청남도 정체성을 위한 환경색채 연구

임 오 연 | 건양대학교 인테리어학과 교수

| 과제종류

기획연구 2009-17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이충훈 공공디자인센터장

1. 연구의 필요성

1) 경관요소로서의 환경색채

현재 경관요소로서의 색채는 어떤 규제가 없는 상태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와 경제성에 종속되어 무분별하게 사용된 결과, 특징이 없고 무질서하며 삭막한 환경을 형성하여 긍정적인 경관이미지 형성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 특성과 개성을 반영한 고유한 경관요소가 포함된 환경색채의 정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충청남도의 정체성을 확보한 환경색채 정립

환경색채는 각 국가와 도시의 각기 다른 자연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적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한 색채 즉, 지역색(Local Color)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타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독창적인 충청남도의 정체성을 내재한 환경색채를 정립하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다.

3) 충청남도 환경색채 추출의 객관성 확보

환경색채는 도시가 가진 역사와 문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의해 구체화되어 가는 속에서 정립되

는 것이므로 인문사회적, 역사문화적, 인공자연적 환경에 대한 명확한 상징적 요소를 파악한 후, 이들 환경색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색채가이드라인 설정

최종적으로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디자인 요소로써 환경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설정으로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선 지역이미지의 향상과 함께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환경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환경색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수행 결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 충청남도의 특성 분석을 토대로 한 상징적 요소 추출
- 충청남도 자연 / 인공 / 역사문화 / 인문사회환경의 색채조사분석을 토대로 한 색채일람표 제작
- 5대 권역별·지향이미지별 상징색채 추출
- 5대 권역별·지향이미지별 환경색채 가이드라인 작성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충청남도 공공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과 내용의 진행단계는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1단계는 “충청남도현황조사 및 분석”으로써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에 대한 각종 문헌조

사-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수정계획(2008~2020), 충남 발전 장기 비전2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통해 그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의 CI을 대상으로 사용된 색채 및 그 상징적 요소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 2단계는 “환경색채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으로써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과 함께 충청남도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한다. 여기에서 국내사례로는 서울특별시, 제주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대상으로, 국외사례로는 프랑스, 영국, 일본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3단계에서는 “충청남도 환경색채의 상징적 요소 추출”로써 도시민, 일반 학생 타지역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의 상징적 요소 및 지향 이미지를 추출한다. 여기에서의 상징적 요소는 자연환경(산, 물, 바다, 흙, 하늘, 나무, 토양 외), 인공환경(전통건축물, 현대건축물, 관광명소, 조형물 외), 역사문화 환경(내포문화, 백제문화, 국보, 보물, 유물, 유적 외), 인문 사회환경(정신, 지명, 주요 생산물, 인물 외)으로 분류할 수 있다.

- 4단계는 “충청남도 환경색채 현황조사 및 분석”으로 3단계에서 추출된 상징적 요소를 대상으로 환경색채를 조사·분석하여 그 특성을 분석한다.

- 5번째 단계는 “충청남도 5대 권역별 지향이미지별 색채범위 추출”로 충청남도 및 5대 권역별 지향이미지에 따른 상징적 요소에 대한 상징색채를 추출한다. 여기에서 상징색채는 다양한 측색결과를 토대로 한 가지 색으로 집약하여 그 상징성을 부여한다.

- 6단계에서는 “충청남도 5대 권역별 지향이미지별 공공환경색채 디자인 가이드 설정”으로써, 여기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충청남도 5대권역의 지향이미지별 상징색채 및 적용색채 범위 색채일람표(Color Palette)를 정립한다.

4. 결론

충청남도 및 시·군의 특성분석을 통해 북부권, 서해안권, 중부권, 백제권, 금강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지향이미지를 설정한 후, 환경색채 현황조사 및 지향 이미지에 부합되는 색채범위를 추출한 결과를 토대로 상징색채를 선정하였다.

이들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환경색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것이다.

(1) 충청남도 5대 권역별 상징색채

- 권역별로 선정된 상징색채를 살펴보면, 북부권의 경우에는 첨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은회색인 무채색계열의 고명도 색채를, 서해안권은 서해갯벌(머드)의 회갈색을 기조로 하여 YR계열의 중명도/저채도의 색채를, 중부권은 내포문화권을 대표할 수 있는 황갈색을 기조로 하여 YR계열의 중명도/저채도의 색채를 선정하였다. 백제권의 경우에는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유물로써 금제관식, 금동대향로의 색채를 기조로 하여 Y계열의 고명도/고채도 색채를, 금강권은 계룡산, 대둔산 등 산에서 볼 수 있는 진녹색을 기조로 하여 G계열의 저명도/중채도를 상징색채로 선정하였다.

(2) 충청남도 5대 권역별 지향 이미지별 환경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 북부권의 색채범위는 주조색으로는 고명도의 무채색과 고명도/저채도의 Y, B, PB계열을, 보조색은 중간명도의 무채색 계열과 저·중명도/저·중채도 B, PB계열, 강조색으로는 저명도의 무채색계열과 Y, B, PB계열의 중명도/중·고채도 위주의 색채를 선정하였다.

- 서해안권의 색채범위는 주조색으로는 고명도의 무채색계열과 R, YR, Y계열의 고명도/저·중채도, 보조색은 중명도의 무채색계열과 YR, B계열의 중명도/저·중채도, 강조색은 YR계열의 저·중명도/저·중·고채도 위주의 색채를 선정하였다.

- 중부권의 색채범위는 주조색으로는 고명도의 무채색계열과 R, YR, Y계열의 고명도/저채도, 보조색은 중명도의 무채색계열과 R, YR, Y계열의 중명도/중채도, 강조색은 저·중명도의 무채색계열과 R, YR, Y계열의 저·중명도/중·고채도 위주의 색채를 선정하였다.

- 금강권의 색채범위는 주조색으로는 저·중·고명도의 무채색계열과 Y, GY, G계열의 조명도/저채도 색채, 보조색은 중명도의 무채색계열과 GY, G계열의 저명도/중채도, 강조색은 저명도의 무채색계열과 GY, G계열의 저·중명도/중·고채도위주의 색채를 선정하였다.

- 백제권의 색채범위는 주조색으로는高明도의 무채색계열과 YR, Y계열의 高明도/저·중채도, 보조색은 중명도의 무채색계열과 YR, Y계열의 중명도/중채도, 강조색으로는 저명도의 무채색계열과 YR, Y계열의 저·중·高明도/저·고채도 위주의 색채를 선정하였다.

5. 기대효과 및 정책 제언

1) 기대효과

- 충청남도의 상징적 요소를 추출 후 그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한 환경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제시로 충남의 정체성(아이덴티티) 확립 및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
-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충청남도만의 차별화 된 색채이미지 제고 및 상징성 부여 가능
- 충청남도의 환경색채를 정립하고 시·군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성공사례지역으로 인식 확대
- 충청남도 환경색채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한 도시환경색채 개선으로 지역이미지 개선 및 활성화 효과 기대
- 충청남도의 16개 시·군의 환경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초 토대 마련
- 충청남도의 환경색채 유지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제시의 기초 마련
-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색채에 대한 정책 제언

2) 정책제언

- 경관 차원에서의 색채 가이드라인 수립
- 경관 구성 요소별 ·부문별 색채계획
- 구성요소
 - 건축물 : 용도·기능별(주거, 상업, 업무, 공업) 색채 가이드라인 수립

- 공공시설물·옥외광고물
- 보행자도로·자전거 전용도로
- 구성부문 : 점·선·면·수변·문화재·특화가로·공원/녹지·특수건조물
- 경관 계획상 일반지역, 경관관리지역,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한 후 별도의 색채 가이드 라인 적용
- 재료 유형에 따른 색채 적용성 검토
- 색채 관리 방안기본 경관계획(경관법, 경관조례)/지구단위 계획/도시환경 색채기본 계획 /색채심의 기준

충청남도 중등학교 교육효율성 개선방안 연구

이 훈 병 | 건양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

| 과제종류

기획연구 2009-18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 연구위원

I. 연구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공교육 내실화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 평가 및 교육 효율성 분석에 대한 요구가 대두하고 있다. 교육 효율성 평가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으로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경영계획과 실천, 그리고 평가의 순환적 흐름 속에서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교육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무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남도 중등학교 교육 효율성을 분석하고 도내 중등학교 교육 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 교육 효율성 평가를 위한 주요 요인 및 분석모형 설정

연구 문제 2 : 국내 시·도별 교육 효율성 분석

연구 문제 3 : 충청남도 교육청단위 교육 효율성 분석

II. 분석 결과

1) 교육 효율성 평가 요인

본 연구에서 선정된 투입 변인은 "학생 100명 당 학급수", "학생 100명 당 교수학습활동지원비", "학생 100명 당 교사수", "학생 100명 당 사무직원수"였으며, 산출 변인으로서는 "학업성취도

(국어, 수학, 영어)"가 선정되었다. 이상의 변인들은 직접적인 교육관련 변인들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2) 전국 16개 시도 교육 효율성 분석 결과(상대적 효율성)

16개 시·도 교육 효율성 분석 결과를 보면 충남의 교육 효율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충남 지역의 투입 변인과 산출 변인의 특징은 중·고등학교 투입 변인 대부분이 전국 및 도 교육청 평균 이상으로 투입되고 있으나 산출 변인인 학업성취도는 고등학교 “국어 성취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 및 도 교육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분석결과 충남 중등학교 교육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주요 준거 집단으로는 광주와 제주 지역으로 나타났다. 산출 결과 향상을 통해 교육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는 산출변인 모두 “보통학력이상학생비율”에 있어 10정도의 비율 향상, 고등학교에서는 20~30정도의 비율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도 교육청만을 대상으로만 효율성 분석 결과에서도 충남지역은 교육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준거집단은 충북지역으로 나타났다. 산출 결과 향상을 통해 교육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는 산출변인 모두 “보통학력이상학생비율”에 있어 10정도의 비율 향상, 고등학교에서는 20~30정도의 비율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도내 15개 지역 교육청 교육 효율성 분석(상대적 효율성)

지역 내 중학교 교육 효율성 분석 결과 투입 지향적 모형에서 천안 지역이 효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고, 산출 지향적 모형에서는 CCR 모형과 BCC 모형에서 모두 논산, 연기, 천안 지역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교육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 요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학업성취도라는 것은 교육관련 제반 여건과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되어야 함으로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효율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CCR 모형에서는 북부권, BCC 모형에서는 북부권과 서남부권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자료 분석결과 금산, 보령, 태안 등 개별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학교간 격차 연구가 요구된다.

4) 효율성 개선방안

본 연구는 결과 분석과 타 교육청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충남 지역 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교수(teaching)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둘째, 수업 우수교사 발굴을 위한 교실 수업 지원 및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 연구회 지원 프로그램 고려, 셋째,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클리닉 제도운영 및 대학과의 연계, 넷째, 학교 운영 컨설팅과 타 시·도 교육청에 대한 우수 프로그램 상시 분석 체제운영, 그리고 다섯째,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 방향의 개선, 여섯째, 학습법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법 전문가 양성 노력, 자기 학습능력 평가 시스템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III. 정책적 제언

첫째, 투입 변인 대비 교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역 및 학교단위책임 경영에 대한 경영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충남 지역 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 효율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자원의 효과적 투입과 효율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이 요구된다. 넷째, 다양한 학교 교육성과 평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도내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해소 방안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효율성 측면에서의 충청남도 교육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교육정책의 수정 및 보완, 그리고 수립을 위한 정보로 활용한 수 있다. 셋째, 도내 교육시설 및 인적자원재분배와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넷째, 도내 공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다섯째, 학습자 학력신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충남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과 과제

강 희 숙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과제종류

기획연구 2009-19

|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 연구위원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재진 강사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국제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국가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육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와 유입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면, 국가간 인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국가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역의 국제적인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최근 4년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규정 및 정책적 배려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지역사회 내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대로 확립이 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내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과 적응 실태를 알아보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충남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 및 충남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2. 외국인 유학생 현황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국에 적응(adjustment)한다는 것은 한국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잃기 않고, 자신이 능동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며,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을 유의미하게 가꾸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학업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 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언어적 및 문화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4년~2008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하여 63,952명이었으며, 유학생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는 아시아지역이 92.8%가 가장 많으며, 북미, 유럽의 순이었고, 중국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지역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천안시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10만명 유치하기 위해 Study Korea Project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초정 장학금은 초청인원과 초청국가가 연도별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실적인 물가수준을 반영한 생활비 및 장학금 인상과 확대가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프로그램은 2008년도에 7개국 11개 도시, 216개 대학이 참가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통한 유학 안내시스템에서는 10개 국어로 유학정보와 한국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트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는 최신정보를 항상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요구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충남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충남지역 지역자치단체의 외국인 유학생지원 프로그램은 충남도정 설명, 도내 산업현장 방문, 관광지 방문 등 간헐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자체의 연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충남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은 장학금지원정책이 대표적이며, 한국어 학습교육 및 도우미제도, 문화체험 및 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진행 시기나 내용이 아직은 충실치 못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은 이들이 국내에서 학업과 취업, 그리고 거주에 이르기까지 제반 생활여건을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며, 유학과정에 대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형 외국인 유학생 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3) 외국인 유학생 적응에 대한 면접 결과

충남 거주 외국인 유학생 10명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년 7월 ~ 10월까지 면접 조사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학생 및 지역사회 주민과 교류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장학금제도의 확충과 외국인 유학생 도우미제도의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회 조직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관련 전문가는 한국어교양강좌 신설, 한국학생들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1) 대학 내 지원정책

첫째, 장학금지원정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입학은 대학에 재정적인 기여를 많이 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경제적 유인 정책은 자신이 유학할 나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모든 외국인에게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 즉, 무조건적인 장학금의 확대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저평가 등 부정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성적 우수 장학금의 규정을 완화하여 B학점 이상의 학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하는 장학금을 줌으로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외국어교육원 수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내 어학원 수업이 전문화된 한국어 강사를 통해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교과서가 사용자의 편의와 입장에 맞게는 편성된 질 높게 제작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과과정에서의 외국인 영어 전용강좌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문화체험 운영의 충실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적응 프로그램은 방학이나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어 연수 과정에서나 학부 초기 과정에서 지역 내 문화와 역사, 지리에 대한 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보다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회 활성화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의사결정과 의견 수렴을 위한 학생회 조직을 인정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유학생끼리 상호간 네트워킹을 하고, 학교 내

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은 향후 자신의 나라에 귀국했을 경우 충청남도 지역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남 지역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문화 탐방 프로그램과 산업체 연결을 통해 졸업 후 산업체 인턴십 및 취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체와 1대 1 결연사업과 지역사회 유력인사와 1대 1 결연사업을 통해 충청남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적 자원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불편함이 없는 생활여건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여권과 학생증으로도 은행예출금, 의료보험혜택, 핸드폰 구입 등 다양한 사회복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마련, 다양한 외국인들의 식생활에 맞는 먹거리 개발, 다양한 문화가 어울릴 수 있는 생활문화적 공간 확보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을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전략 마련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CDI 자료집 2010-02

충남발전연구원
2009년도 기본·기획과제 요약집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주소 : [314-140]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충남발전연구원

· 전화 : 041-840-1123 팩스 : 041-840-1129

· Web : www.cdi.re.kr

■ 인쇄일 : 2010. 2. 26 (금)

■ 인 쇄 : 필성인쇄사 (T.042-252-1689)

본 요약집의 원본자료는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비매품>